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박사학위 논문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과

이 철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on Regional Development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과

이 철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인 호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과

이 철

이 철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국방대학교 교수	<u>민진</u> (인)
위원	건국대학교 교수	<u>안형기</u> (인)
위원	창원대학교 교수	<u>이태근</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계만</u>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강인호</u> (인)

2022년 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논의	9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9
1. 지역의 인구구조	9
2. 지역쇠퇴와 인구구조 변화	16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	28
1.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	28
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발전과의 관계	3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4
1.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34
2.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36
3. 시사점	40
제3장 연구 설계	42
제1절 연구모형	42
1. 연구모형 설정	42

2. 연구가설	43
제2절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44
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44
2. 분석방법	48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50
제1절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50
1. 지역현황자료 분석	50
2.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76
제2절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81
1. 기초 통계분석	81
2. 측정도구의 검증	88
3. 집단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94
4.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99
제3절 정책 시사점 및 정책대안 모색	104
1. 정책 시사점	104
2. 정책대안 모색	111
제5장 결론	123
1. 연구결과 요약	123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24
참고문헌	126
1. 국내문헌	126
2. 외국문헌	134

도표 목차

- 표 목차 -

<표 2-1>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	15
<표 2-2> 지역쇠퇴 원인	18
<표 2-3> 고령화 관련 주요 연구동향	20
<표 2-4> 출산율 관련 주요 연구동향	22
<표 2-5>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35
<표 2-6> 낙후 및 쇠퇴지역 선행연구	37
<표 2-7>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의 관계	40
<표 3-1> 독립변수 및 측정지표 선정	43
<표 3-2> 종속변수 및 측정지표 선정	47
<표 4-1> 지역별 연도별 인구분포 비교(2008년/2020년)	51
<표 4-2>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연평균 증가율 추이(2008년~2019년)	53
<표 4-3> 지역별 산업별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2008년~2019년)	55
<표 4-4> 지역별 예산규모(총계) 추이(2008년~2020년)	57
<표 4-5> 지역별 공공기관 수 추이(2008년~2019년)	58
<표 4-6> 지역별 건축허가면적 추이(2008년~2019년)	59
<표 4-7> 지역별 고령인구비율(고령화지수) 추이(2008년~2020년)	61
<표 4-8>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이(2008년~2020년)	62
<표 4-9>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추이(2008년~2020년)	64
<표 4-10> 지역별 취업자 추이(2008년~2020년)	65
<표 4-11> 지역별 고용률 추이(2008년~2020년)	66
<표 4-12> 지역별 전입인구 추이(2008년~2020년)	68
<표 4-13> 지역별 전출인구 추이(2008년~2020년)	69
<표 4-14> 지역별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 추이(2008년~2018년) ·	71
<표 4-15> 지역별 공공교육기관(학급수) 추이(2008년~2020년)	73
<표 4-16> 지역별 의료기관(병상수) 추이(2008년~2019년)	74
<표 4-17> 지역별 문화공간 추이(2008년~2019년)	75
<표 4-18> VIF 진단 결과	77
<표 4-19> GRDP 모형검정 결과	79

<표 4-20> 사회발전 모형검정 결과	80
<표 4-21> 인구통계적 특성	83
<표 4-22> 거주지역의 인구·경제적 상황	85
<표 4-23> 거주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86
<표 4-24> 거주 지역(시·군)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수준	87
<표 4-25>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에 대한 설명된 충분산	89
<표 4-26>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 결과	89
<표 4-27> 지방정부의 혁신적 활동에 대한 설명된 충분산	90
<표 4-28> 지방정부의 혁신적 활동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 결과	90
<표 4-29>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92
<표 4-30> 종속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93
<표 4-31> 독립변수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94
<표 4-32> 종속변수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96
<표 4-33> 지역 구분	96
<표 4-34> 독립변수에 대한 지역규모별 지역차이	98
<표 4-35> 종속변수에 대한 지역규모별 지역차이	99
<표 4-36> 상관관계 분석결과	100
<표 4-37> 경제발전 영향요인 분석결과	101
<표 4-38> 사회발전(공공서비스) 영향요인 분석결과	103
<표 4-39> 사회발전(인간관계) 영향요인 분석결과	104
<표 4-40> 2020년 지역별 인구분포 비교	106
<표 4-41> 분석모형 검정결과 요약	107
<표 4-42> 인식조사에 근거한 경제·사회발전 정책	109

-그림 목차-

<그림 2-1>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24
<그림 2-2>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 1980년~2020년	25
<그림 2-3> 지역순환에 따른 지역성장 단계와 지역순환의 시간적 진동	29
<그림 3-1> 연구모형	43
<그림 3-2> 분석방법	48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on Reg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22 Local Governments in Jeollanamdo

Lee Cheol

Advisor: Prof. Kang In Ho, Ph.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situation in which regional capabilities need to be accumulated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growth engine cannot be exerted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in the region. For this, the socio-demographic, economic, regional policy, and spatial factors suggested in the study background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mographic change that affec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are presen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it was examined how the demographic patterns of the region, such as birth, ag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had an effect on it. This study identified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se factors, derive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m, analyzed the reasons f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demographic changes, and suggested regionally customized development plans that could be dealt with in the long term.

For thi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ly verified using primary data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and secondary data (statistic DB). The scope of this study was targeted at 22 local governments in Jeollanamdo, the region with the largest proportion of

population-declining areas as of 2021.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by dividing the temporal range into an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and a questionnaire analysis based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2018 data are the most recent among the data for GRDP released so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past 12 yea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The survey based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was analyzed by studying the percep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of 22 local governments as of 2021.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of Jeollanamdo has been declining continuously since 2008, and the average annual population decline is 0.3%. In particular, there is a clear tendency to decrease in the county areas except for Muan. Second, as a result of composing and analyzing balanced panel data based on statistical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Jeollanamdo from 2008 to 2018, as for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development (GRDP), positive (+) influencing factors were the number of business people, and negative (-) influencing factors were the budget size and moving-in population. Third,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model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i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showed that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spatial arrangement of public facilities, the lower the outlook for the local economy, and revealed that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population structure formed by natural and economic factors on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the lower the outlook for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of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results, the policy for economic/social development based on the perception survey was found to be ① expansion of support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he upper level or central government, ② preparation for various support policies to create new jobs, ③ expansion of local tax reductions to stimulate business activities, ④ expansion of transportation and convenience facilities, ⑤ development of rural centers (si/gun administrative sites, eup/myeon locations,

etc.), ⑥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complex for business attr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ional status analysis of Jeollanamdo's specialized strategy, a specialized strategy was devised so that a customized strategy could be devised for each region. The proposals include improving the inflow and utilization of retired manpower, creating a settlement base to secure the productive population, strengthening tax support for businesses, and reorganizing the spatial structure to a reduced city-oriented urban development.

In fact, it is judg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future studies in the absence of empirical studies centered on reg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reg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demographic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ion, the theoretical model test based on it, and the theoretical model test based on the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such a point can provide a clue for the development of the theoretical model in the future and influence the follow-up research.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21년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정안전부, 2021.10.18. 보도자료).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87 곳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전라남도는 강진군 등 16개 지역이 이에 포함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72.7%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을 의미한다. 과거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여 향후 지방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6만 미만 군지역의 총인구는 일반시와 자치구에 대비하여 감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순은, 2016). 한국고용정보원(2016)은 향후 30년 내에 82개 군 지역 중 69개(84.1%),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39.7%)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1960~1990년 사이 한국의 도시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100만 이상의 수도권 지역 대도시에 한정된 것으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군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켜서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군 지역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상당수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도시들과 산업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의 대도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군 지역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강인호 외, 2021: 88), 이러한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위축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제현정 외(2017: 29)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가구·가족 형태, 노동수급 문제, 주택 등 주거환경 문제와 경제·사회 부문의 변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변화는 생활방식과 소비패턴 등 개인의 생활스타일과 소비행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인구구조 변화의 대표적인 상황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은 지역 내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동 생산성약화와 소비저하로 지역경제 성장은 둔화되게 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역 내 출산 저하라는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부문의 위축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며, 이러한 반복된 악순환은 지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한다.

박진경 외(2017: 224-227)는 지난 16년 동안 자연 및 사회적 인구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지역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2개(2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3.0%의 기초자치단체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대다수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지속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취업, 자녀교육,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도시로의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인력의 감축요인으로 작용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위기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박진경 외, 2017: 16).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요인이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발전의 환경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변화의 주된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지역 정책적, 공간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박진경 외, 2017: 16). 경제적인 변화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지역 내 생산시설운영이 어려워져 지역의 생산성 저하를 야기한다(박진경 외, 2017: 17). 이영성(2008)은 생산성 저하와 관련하여 고령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자 1인 생산량은 0.719% 감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Maestas 외(2016)의 연구 역시 60세 이상 인구가 10% 증가할 때 마다 1인당

GDP 성장률을 5.5%씩 감소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진경 외, 2017: 17에서 재인용).

지역 정책적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교육, 의료, 주거 등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경제적 여건 저하로 인해 적정 또는 최저수준의 복지서비스 조달을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정부가 가장 흔히 쓰는 방안 중 하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개입으로 최저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듯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는 지역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간적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공간거리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즉 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적거리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공간적 배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내 인구감소는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신규개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상에 공공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재편하게 된다. 이렇듯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소멸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인구의 자연증가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살고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과 지역경제 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우선되어야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인호 외(2021: 88)의 연구는 비수도권 농촌 지방정부의 경우 쇠퇴와 축소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쇠퇴와 축소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맞춤형 지역정책들을 제시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지역 정책적, 공간적 변화의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는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 목적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으로 대표되는 낙후지역이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지역이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저해될 수 있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곽현근, 2016: 34)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선행연구(강인호 외, 2021: 89)도 비수도권 74개 군 지역의 경우 심각한 지역쇠퇴와 지역축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비수도권 군 지역은 인구가 정점이었던 연도에 비해 평균 62.44%의 매우 높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수도권 농촌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20~30대 젊은층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전출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김순은, 2016; 박진경 외, 2018)하고 있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구조변화는 교육·의료·보육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의 악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지역소멸을 초래하고 있다(강인호, 2019: 50; 강인호 외, 2021: 89).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의 가장 큰 동인(動人)은 저출산과 인구유출이다. 저출산이 지역 내 자연적인 인구감소를 촉진하는 원인이라면, 인구유출은 지역의 인구·경제·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지역 간 성장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경로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인구유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산업생산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으로 요인이며, 간접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물가상승 및 금융시장 위축 등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발생시킨다.

지역 내 생산 활동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생산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수한 생산가능 인구를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쇠퇴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강인호 외, 2021: 91). 특히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쇠퇴를 넘어 소멸의 길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든 현실에 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우선 절대적인 인구규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만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인구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인구학적 요소라고 한다면 출산율 제고를 통해 지역인구의 자연증가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출산제고는 고령인구의 비중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인구유출을 막고, 외부로부터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력과 관련한 인구구조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고용율 등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 제고로 인한 고령인구 비율의 감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동력인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로의 변화는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요인 중 지역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내 경제·사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추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영향요인이 되고, 지역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동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전남의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있는데, 그 원인 파악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목표인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지역 정책적, 공간적 요인들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하고, 실제 그 지역의 출산,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인구유입 및 유출 등의 인구구조 양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지역 정책적, 공간적 요인들 중 유의한 요인(significance factor)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전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지역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가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인구소멸 위기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인구감소는 출산과 사망 등의 자연적 증감과 인구 유입·유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의 합으로 결정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과 같은 연령별 분포의 특성 변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제 및 사회적 발전정도의 증감에 따라 인구구조가 다시 영향을 받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지역 환경이 무엇이며, 이러한 지역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 환경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요인인 인구사회학적 관점, 지역 경제적 관점, 공간적 관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인구구조 양태인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활동 관련 인구분포, 인구 증감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발전은 크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1차 자료(공무원 인식조사)와 2차 자료(통계DB)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전략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대상(시간·공간)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2021년 기준 인구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인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의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인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와 형성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인구구조 관련 요소들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선정했다. 다만, 지역 내 공무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을 횡단적(cross-sectional)으로 수행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식이 반영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공무원의 인식에 근거한 설문분석으로 이뤄화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중 GRDP의 경우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12년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longitudinal)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무원 인식에 근거한 설문분석은 전남의 22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30일간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문제와 지역발전 분야를 다루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구구조와 지역발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요인(이하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관련한 이론 및 기존연구를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지역발전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구구조 영향요인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지역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도출

하였으며, 도출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통계자료와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모형검증은 먼저 공무원의 인식 근거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지표를 구조화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의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인구규모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구성요소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인구구조 영향요인이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모형 검증(model 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청 자료에 기초한 종단적 자료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패널 자료(panel data)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패널 자료는 횡단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기초자치단체의 시계열 자료나 특정시점의 횡단적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에 비해 시계열 자료의 추가로 인해 관찰 자료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신뢰성을 확보하여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패널 자료 분석은 횡단 및 시계열에 걸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동질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며,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통해 모수(parameter)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횡단면 자료의 시계열적인 오차항의 분산과 공분산 형태가 동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차항의 특성에 대해 특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여 513부를 회수(93.27%)하였다. 설문자료 통계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균형패널자료 분석은 STATA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1. 지역의 인구구조

가. 인구 관련 개념 정의

지역 인구의 구조는 총량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구규모를 들 수 있다. 인구규모는 지역 내 인구수를 의미하며, 성별, 연령별로 구분되어 진다.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구성요소는 출생, 사망, 이동이 있다. 또한,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통해 지역의 인구특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연령별 분포는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등으로 분류된다.

최슬기(2015: 15-16)는 인구요인을 출생, 사망, 이동으로 구분하여 보았으며, 이러한 요인의 구성결과를 인구구조로 보았다. 어떤 사회에 인구구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인구변화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의미하며, 이 결과로 형성된 인구구조는 지역의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구구조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현상에 의해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요인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영향요인의 변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되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인구구조의 양태와 영향요인간의 관계는 경제적·사회적 현상을 매개로 시차를 두고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출생과 관련한 지표로는 조출생률(CBR: Crude Birth Rate)과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있다. 조출생률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해의 전체 인구수 대비 그 해 태어난 아이의 수,” 합계출산율은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에 따라 어느 가상적인 여성이 일생동안 아이를 낳는다면 갖게 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최슬기, 2015: 17에서 재인용). 인구가동은 “상당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주지를 변경한 것”을 의미하며(김태현 등, 2006에서 재인용), 국내이동은 지리적 거주지의 변경을 의미하며, 시·군·구간의 이동 또는 시·도 간 이동으로 간주한다.

지역의 인구구조 중 경제·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는 영역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분포와 이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한 인구지표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대표적이며, 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하며, 이들은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인지수 외, 2019: 255에서 재인용).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들 인구지표에 의거하여 고용률(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 중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 산출되며, 이들이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구구조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인지수 외, 2019: 255에서 재인용).

나. 지역 환경과 인구구조

한 지역의 인구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값으로 활용되곤 한다. 인구규모가 갖는 지역적 상징성은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의 발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지역의 인구수로 대변되는 인구규모는 과거 경제성장기에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경쟁력 차이는 지역별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은 향후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적 상황을 상정해야 할 만큼 큰 이슈로 지역 내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출발하는 지역 간 양극화 심화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인구구조를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유도하는가가 큰 문제가 된다. 제2장에서는 지역 환경과 인구구조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지역 환경은 지역 공간적 관점, 경제적 관점, 생활환경적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관점은 인구구조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1) 지역공간의 특성과 인구구조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생산기반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

서 사회적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장시간 지속되며,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은퇴자가 발생하는 시기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이 발생하게 되면 농촌지역의 사회적 유입이 발생한다. 즉 도시체계 상에서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대도시의 인구감소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가 맞물려 지역별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임석희(2016: 76-78)는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적 도시화보다 도시권 내에서 중심도시와 농촌지역 간 인구가동으로 중심도시의 인구감소를 설명하는 도시발달단계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도시발달단계 모델로 지역 간 인구가동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역의 지리적인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의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방은 쇠퇴형 내지 불안정한 성장형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방은 대부분 쇠퇴 또는 불안정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발전이 지방의 인구감소를 설명하는 공간상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의 중요한 특징은 지방의 중심 대도시의 성장에 따른 정주체계의 상향이동으로 인한 배후지인 농촌지역의 기능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임석희(2016: 78-80)는 지방의 대도시 또는 대도시권 중심의 정주체계 상향 이동으로 인한 배후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농촌중심지 기능의 수요기반을 약화시키게 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과정을 겪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국토공간상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인접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가동으로 인해 점차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박진경 외(2017: 5-6)는 향후 국토공간상의 위치로 인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가속화하여 기존 시설이나 공간이용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킬 것이며, 이용수요 역시 재편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역의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을 침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간구조상의 공간이용 감소와 신규개발 수요 감소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간이용의 재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기존 상업 및 공업시설의 쇠퇴, 상점가의 공실률 증가, 산업부지의 방치, 공공시설의 낮은 이용률 등의 문제로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을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축소도시로 변화해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행정비용 등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방식 변경, 행정서비스 변경 등 현재 작동하는 행정시스템 전반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는 지역공간의 변화모델로는 축소도시지향형 도시개발패러다임으로의 전환(박진경 외, 2017: 19-20)을 들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특성과 인구구조

유럽과 미국 등 여러 지역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탈산업화이다. 탈산업화는 탈공업화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보면, 제조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 등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게 되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탈산업화 지역은 노동시장의 축소로 고용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고용여건이 보다 좋은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지역이 쇠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비중이 큰 지역들은 인구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제조업이 덜 발달하고 비중이 낮은 지역들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석희(2016: 80-82)는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고 비중이 큰 지역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제조업 성장률과 인구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제조업 성장률이 낮다고 해서 인구 증가율이 반드시 낮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탈산업화 요인의 설명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삼식 외(2015)는 지역경제가 침체한 지역은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서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탈산업화와 같은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가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역경제 여건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저출산은 지역 내 자연적인 인구증가를 둔화시키는 원인이며, 고령화는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신규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내 경제여건의 침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경제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성장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논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자연적인 변화 관점에서 볼 때, 지역입장에서 보면, 현역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그 지역의 청장년층에게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 내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능력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상실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며(박진경 외, 2017: 17-19), 교육, 복지, 고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의 전 영역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형만, 2019: 60).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지역경제의 미성숙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유출되고,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인구 구조적 특징이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생활환경의 특성과 인구구조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될수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 여가, 평생교육, 재가노인복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박진경 외, 2007). 이와 관련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 중인 지역은 일자리, 소득 등과 같은 지역경제의 여건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교육, 문화, 행정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의 수준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병기, 2017: 2). 다시 말해, 지역 내 생활환경의 수준은 지역 주민의 이주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교육·여가·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주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주재복 외(2015)는 인구 5만 미만의 군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15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

하면서 기존에 투자가 되었던 생활 인프라 중 15세 이하 인구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인프라의 퇴보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여가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재정 소요 등의 특징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진호(2011)는 인구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인구과소지역의 경우 교육·의료·문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시생활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여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감소는 학교의 통폐합 등 교육기회를 저하시키고, 이러한 교육 여건의 악화는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이희연(2013)은 생활편익시설의 낙후와 수요 감소로 인하여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 젊은층의 인구유출을 유발시킨다고 보았다(제현정, 2019: 133-135 재인용).

이렇듯 공공정책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상근(2005)은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구이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역인구, 공무원 수, 도로포장률, 그리고 사업투자비 등이 중요한 인구이동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구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는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생활 인프라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이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4) 시사점

이상 지역 공간, 지역경제, 생활환경 등 지역의 인구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세 요소가 지역 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인구구조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

변화요인	주요 내용
공간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이용 감소 - 신규개발수요 감소 - 공간 효율화 불가피 - 복지시설수요 증가
경제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뉴노멀의 상시화 - 지역 및 국가 간 경제협력확대 - 복지수요 및 지방재정 증가 - 청장년층 조세부담 증가 -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생활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 생활 인프라 여건 투자 저하 - 인프라 투자로 지방재정 악화 - 세대 간 갈등 초래

자료 : 박진경·김상민(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다.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관련 이론

지역 인구감소에 대해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여러 이론들이 그 원인들을 제시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들의 구조적인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Berry(1976), Van den Berg 외(1982), Gayer and Kontuly(1993) 등이 제시한 도시발달단계 이론으로 차별적 도시화 모델을 들 수 있다. 이는 도시인구감소를 인구가동과 관련된 도시발달의 단계 내지 도시화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Van den Berg 외(1982)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구성된 일일도시생활권(DUS: daily urban system)의 기능적 도시지역(FUR: functional urban region)에서 도시발달의 과정을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교외화 단계에서 중심도시에서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분산되기 시작해서 원격교외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분산되어 중심도시의 인구는 감소한다고 보았다.

둘째, 탈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자원의 고갈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도시화 모델이다. 설명의 기본적 틀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화가 산업화와 동전의 양면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탈산업화가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과 도시쇠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쇠퇴의 경로는 과

거 도시성장의 경로를 밝는 것이 된다. Rieniets(2009)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도시응집체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한 곳에서는 구조적인 경제문제가 교외화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셋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도시화의 동인(動人)과 관련된 자본축적과 자본의 시·공간적 순환이론이다.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도시인구감소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Harvey(1981)는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의 2차 순환과정에서 건설 환경(built environment)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외지역의 개발과 도심쇠퇴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이는 한때 특정한 공간적 배경 하에서 투자되었던 자본은 새로운 투자에 장애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한다.

넷째, 출산율 저하와 선택적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행태측면에서 Rink(2009)가 제시한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젊고 유능한 인구가 떠난 선택적 인구이동 과정과 함께 진행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 인구가 떠나가고 상대적으로 고령층은 남게 된다(서준교, 2014; Lima 외, 2017). 낮은 출산율의 공통적인 결과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이며, 이는 곧 도시쇠퇴로 이어진다. 이러한 선택적 인구유출과 인구감소의 더 심각한 문제는 하향적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에 의해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수요기반이 약화된 상업·서비스 시설은 입지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폐쇄된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과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남아 있는 주민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도시에서 떠나게 된다(구형수 외, 2016; 임석희, 2016: 68-72).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관련해 이러한 모델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론보다는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자원의 고갈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층 인구가 떠나가고 상대적으로 고령층은 남게 된다는 행태학적인 접근이 보다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2. 지역쇠퇴와 인구구조 변화

가. 지역쇠퇴 원인

한국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행태학적 접근의 이론적 모형에 근

거해 지역쇠퇴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중반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 구성원의 감소로 인해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소멸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방의 쇠퇴 문제가 실체화하는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강인호, 2019: 9). 강인호(2019: 9-10)는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의 쇠퇴를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대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쇠퇴의 원인부터 살펴봐야하고, 지방쇠퇴의 원인(예: 경제위축, 인구감소, 탈도시화,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 등)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전통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쇠퇴의 원인과 문제가 단순하지 않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은영 외(2015)는 한국의 지역쇠퇴 주요원인으로 산업 구조 변화나 지역산업기반의 쇠퇴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교통망의 발달 정도와 같은 물리적 환경의 제약 등과 같은 지리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쇠퇴의 양상은 그 지역의 위치, 지역의 규모, 산업기반 수준, 주거환경의 여건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쇠퇴 요인들을 살펴보면, 장희순 등(2006:7)은 이양재(1992)의 논문을 인용하여 “①생산가능인구 부족, ②제조업에 의한 고용창출 감소, ③금융·교육·의료 등 서비스업 수준 저하, ④고용구조 다양성 부족과 집중성 저하, ⑤불편한 교통망”을 지적하였으며, 정지성(1994)의 논문을 인용하여 “①입지 기업의 부족, ②낮은 생활환경 서비스, ③주민생활의 안전성 부족, ④취약한 재정력, ⑤도시 간 협력 부족, ⑥성장잠재력 부족, ⑦중앙정부의 미흡한 정책적 배려”도 중요한 지역쇠퇴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정철(2004)의 논문을 인용하여 “①지역산업의 낙후, ②인구유출, 일자리 부족, ③교육 및 문화기반의 취약”과 송상열(2007)의 논문을 인용하여 “①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②교육 및 문화기반의 취약, ③산업의 쇠퇴와 소득수준의 저하, ④재정 및 예산의 부족, ⑤급격한 도심쇠퇴 현상, ⑥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를 지역쇠퇴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표 2-2> 지역쇠퇴 원인

구분	주요 원인
이양재(1992)	생산가능인구 부족, 제조업에 의한 고용창출 감소, 금융·교육·의료 등 서비스업 수준 저하, 고용구조 다양성 부족과 집중성 저하, 불편한 교통망
정지성(1994)	입지 기업의 부족, 낮은 생활환경 서비스와 주민생활의 안전성 부족, 취약한 재정력, 도시 간 협력 부족, 성장잠재력 부족, 중앙정부의 미흡한 정책적 배려
신정철(2004)	지역산업의 낙후, 인구유출, 일자리 부족, 교육 및 문화기반의 취약
송상열(2007)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교육 및 문화기반의 취약, 산업의 쇠퇴와 소득수준의 저하, 재정 및 예산의 부족, 급격한 도심쇠퇴 현상,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미비
김광중(2010)	산업구조 및 거시적 경제여건의 변화, 지역산업기반의 붕괴 및 이전, 보유자원의 고갈 및 경제성 상실, 교외화 현상, 공공정책 및 규제, 초기의 부실개발, 환경수준의 상대적 저하, 교통망의 발달
기정훈(2011)	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과 고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시스템의 경쟁력 미흡, 문화생활과 주거환경의 미흡
이상훈 등(2013)	경제적 여건 변화, 정책적 규제에 의한 자생력 상실, 생활환경 수준의 미흡

자료 : 장희순·송상열(2006); 강인호(2019: 50에서 재인용).

김광중(2010)은 지역쇠퇴의 원인을 ①산업구조 및 거시적 경제여건의 변화, ②지역산업기반의 붕괴 및 이전, ③보유자원의 고갈 및 경제성 상실, ④교외화 현상, ⑤공공정책 및 규제, ⑥초기의 부실개발, ⑦환경수준의 상대적 저하, ⑧교통망의 발달 등을 제시하였다(강인호, 2019: 48-49에서 재인용). 그는 농촌지역의 쇠퇴 주요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경제여건의 변화와 더 나은 교육,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를 찾아 보다 규모가 큰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지적하였다. 기정훈(2011)을 강인호, 2019: 48-49에서 재인용)은 ①인구감소에 따른 저출산과 고령화, ②양질의 일자리 부족, ③교육시스템의 경쟁력 미흡, ④문화생활과 주거환경의 미흡 등 인구구조 변화, ⑤경제여건 및 생활여건 미흡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상훈 등(2013)을 강인호, 2019: 48-49에서 재인용)은 ①경제적 여건 변화, ②정책적 규제에 의한 자생력 상실, ③생활환경 수준의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쇠퇴 요인을 종합하면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이동 등과 관련한 인구구조 변화, 교육 및 문화시설 취약 등 생활여건 취약성, 급격한 도심쇠퇴 현상 등 공간구조 변화, 산업구조 및 거시적 경제여건의 변화 등 4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나. 지역쇠퇴와 인구구조 변화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Rink(2009) 등이 제시한 인구학적 행태측면을 강조한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설명하는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행태측면의 모델은 출산율의 저하, 인구이동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이로 인한 지역의 고령화, 지역의 침체로 인한 쇠퇴라고 하는 악순환의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 고령화와 지역쇠퇴

국가적 수준에서 볼 때,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지방수준에서의 연구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yers 외(2007)는 인구증가가 둔화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지역의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인구구조와 지역경제 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순호(2020:99)는 Katagiri(2012)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복지 등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자원의 재배치가 진행되며, 이로 인해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고 보았다. 박하일 외(2017: 49-51)는 Batini 외(2006)의 연구를 인용하여 일본, 미국,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선진국은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Croix 외(2009)의 연구에서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화가 1인당 소득증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인구구조와 경제 간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대체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식, 2002). 강두용(2009)은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미치는 요인들 중 인구구조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현훈 외(2006)는 피부양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 비중보다 높을 경우 경제성장이 하락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유소년인구 비중 보다는 고령인구 비중의 상대적 증가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인구구조와 경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 특징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중

합하여 <표 2-3>과 같다(최남희, 2016).

<표 2-3> 고령화 관련 주요 연구동향

연구자	고령화 특성
허문구 외 (2014)	-인구구조의 고령화 → 경제 및 사회 활력 감소 → 인구유출 야기 → 인구구조 고령화 가속화
이상림 (2014)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의 사회·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초래 -인구이동 → 지역 인구구조와 생활여건 악화
이정은 외 (2014)	-고령화 및 지역 내 정주인구 감소 → 인구 공동화와 과소화 촉진 -지역 공동체 붕괴 가속화 →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재원 감소
조영재 (2014)	-농촌지역은 과소화·고령화 → 장래 소멸 가능성이 있는 마을 및 실제 소멸하는 마을 증가 -한계마을 고령화·과소화 → 인구 공동화, 경제기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 공동화 발생
최남희 외 (2014)	-고령화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 예비고령인구의 전입,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는 휴먼서비스 수준 쇠퇴,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 고령화 가속화

자료 : 최남희(2016)연구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는 가족 내 고령자 역할 변화, 고령자 단독세대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부양역의 약화, 부양의 사회화 인식 확산, 장수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곽채기, 2019: 115). 허문구 외 (2014)는 “고령화는 단순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거나 그 값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는 출생과 사망, 인구의 사회적 전입과 전출이라는 네 개의 변수가 연령별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동태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고령화를 단일한 측면이 아닌 지역 내 인구동태의 복합성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지역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주장은 고령화의 동태성이 지역적 요인들과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염도민, 2014; 조영재, 2014). 즉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인구이동 등과 같은 인구 구조적 요인과 지역공동화, 지역공동체 붕괴·소멸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변화요인, 지역경제 낙후, 지방재정 여건 위축 등과 같은 지역경제여건의 위축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최남희, 2016: 117-118).

이렇듯 많은 연구자들은 고령화와 지역쇠퇴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지역의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경제 및 사회 활력 감소는 인구유출을 초래하고, 인구구조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게 되며, 고령화는 지역의 사회·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하여 지역쇠퇴를 가속화 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를 지속가능하도록 바꿔야 하며, 이는 지역경제 및 사회적 발전의 촉진을 통해 인구유입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저출산과 지역쇠퇴

① 출산율 결정요인

경제학적인 접근과는 달리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해 표출되는 행동에 관심이 높으며,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입법조사처, 2010). 사회학자들이 제시하는 사회·인구학적 접근을 통한 출산율 변화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Caldwell, 1980). 즉 교육은 가족관계와 가족경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된다는 것이다. 교육 수준의 향상은 여성의 혼인연령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저출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녀의 출산을 여성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여 저출산을 선호하게 된다고 보았다.

둘째, 경제발전 단계별로 출산율의 차이를 보인다(Simon, 1969).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은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증가하지만, 경제와 소득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김상욱, 2010:7-8). 이렇듯 출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출산과 관련한 요인을 찾는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희 외(1977)는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연령이 출산

율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태환(1990)은 대체적으로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고 보았다. 김한곤(1993)은 거시적 접근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사회경제발전, 교육수준, 불임시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표 2-4> 출산율 관련 주요 연구동향

연구자	출산율 결정요인
김성희 등 (1977)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연령
권태환 (1990)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출산율이 낮음
김한곤 (1993)	사회경제발전, 교육수준, 불임시술
은기수 (2002)	결혼 연령의 상승, 노동시장 불안정, 경제 여건 위축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김응렬 등 (2004)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소득향상에 의한 소비지향적 사고,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단축, 고학력과 경제적 자립
정구진 (2005)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 지위 향상, 여성 교육수준 향상, 결혼가치관 변화, 초혼 연령 상승, 자녀가치관 변화, 자녀양육부담 증대

자료 : 입법조사처(2010)연구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은기수(2002)는 혼인 상태별 구성 요소 중 결혼 연령의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며, 노동시장 불안정, 경제 여건 위축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응렬 등(2004)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소득향상에 의한 소비지향적 사고,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단축, 고학력과 경제적 자립 등이 여성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정구진(2005)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 지위 향상, 여성 교육수준 향상, 결혼가치관 변화, 초혼 연령 상승, 자녀가치관 변화, 자녀양육부담 증대 등을 지적하였다.

출산율의 경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출산의 하게 되는가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관점에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출산율이라는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

화 현상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같이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경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지역대책으로는 부족한 경제활동인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예: 아동수당),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과 같은 여성정책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정상훈, 2005).

② 출산율과 지역특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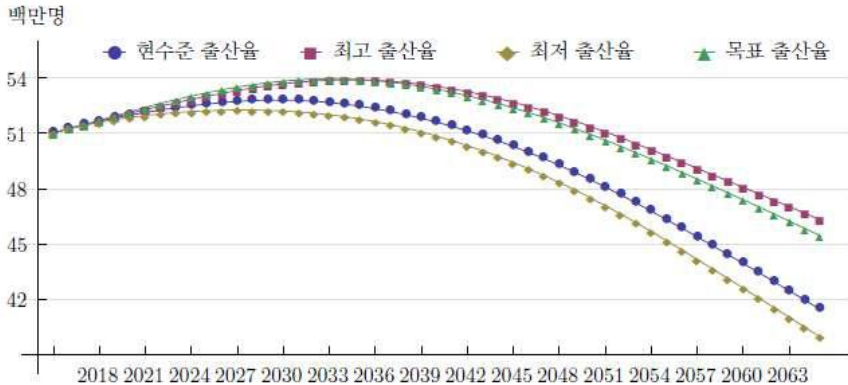
지역이라는 공간상의 특성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공간상 경제, 지리적 특성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출산율은 여성의 학력, 지위, 경제참여 등 요인에 의해 작용하는 것으로 지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생태학과 인구학의 관점에서 인구밀도 혹은 개체 밀도와 출산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Mulderu, 1998; Notestein, 1953; Easterlin, 1976)에서는 인구변화 현상을 인구밀도나 인구 증감으로 인한 인구 변화로 보았으며, 인구변천이론의 측면에서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와 교육 수준 향상, 자녀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효용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Easterlin(1976)은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인구밀도 증가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Merrick, 1978의 연구를 고우립 외, 2020: 134-136에서 재인용). 이렇듯 출산율은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와 같은 지역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며,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 어떠한 인구밀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적 경향성이 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③ 출산율 현황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2031년부터 감소해 2065년에는 약 41.5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통계청, 2015년 자료를 윤상호, 2019: 4에서 재인용).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30년 52.8백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

으로 보았으며, 출산율 수준에 따라 예측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0년을 전후해 최대 인구수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1>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주: 가정1(현 수준 출산율은 2015년 중위 합계 출산율인 가임여성 1명 당 출생아 수 1.24명이 2065년까지 유지), 가정2(최고 출산율은 204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64명으로 증가 후 2065년까지 유지), 가정3(최저 출산율은 204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12명으로 감소 후 2065년까지 유지), 가정4(목표 출산율은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1.50명으로 증가 후 유지)

자료: 1) 국가통계포털(2018); 윤상호(2019)의 연구를 재인용.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83년 2.1명 미만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는 1.052명을 기록하였다. 통계청은 인구감소시기를 2030년 전후로 보았으나, <그림 2-1>의 최저 출산율 추계에서 제시한 2028년보다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미만 수준으로 낮아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윤상호, 2019: 5).

<그림 2-2>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 1980년~2020년



자료: 윤상호(2019)를 재구성.

이러한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의 감소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의 감소가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율을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자 한다.

(3) 생산가능인구와 지역쇠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성장관계 있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 생산성 저하 및 지역경제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 상실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지역쇠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이라 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생산가능인구와 같은 인구특성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Bloom 외(1997)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Bloom 외(2009)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김호범 외(2007)는 1960~2015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성장 간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활동인구 및 합계출산율을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박하일 외(2017: 49-51)는 정선영(2013)의 연구를 인용하여 출산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노동력 감소와 노동구성의 변화를 통해 임금 및 고

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허문구 외(2016)는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간에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생산가능인구와 지역경제는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의 확보가 우선인지, 지역경제 기반의 증대가 우선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쇠퇴와 관련한 인구구조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인구구조 중 생산가능인구의 규모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인구이동과 지역쇠퇴

① 인구이동의 지역적 논점

주류경제학은 개인선호에 근거한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지역 간 격차와 수렴을 설명하고 있다. Glaeser(2008)는 자본과 노동 같은 요소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장벽이 없다고 가정하고 개인이 명목임금, 주거비용, 어메니티(amenity) 등에 관한 다양한 선호도를 조정해 가면서 거주 지역을 선택한다는 경제모형을 제시했다.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금은 이동 가능한 요소로 보고, 임금수준은 지역 간에 균등화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차이는 토지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요소에 대한 수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정준호, 2021: 9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숙련도에 의해 받게 되는 명목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술적 숙련도와 명목임금 수준에 따라 토지와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 간 실질임금 수준이 균등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 간 실질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숙련의 저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낮은 명목임금의 근로자는 저렴한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대도시의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고숙련의 고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산업이 다수 입지한 대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용은 실질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시의 최신 유행, 문화 향유, 그리고 높은 명목임금은 개인의 총 효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Glaeser and Maré, 2001). 이처럼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인구 이동이 발생하여 지역 간 실질임금의 격차는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약조건 아래에서 실질임금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의 지역 간 분포가 지역 간 실질임금의 수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torper, 2018; 정준호, 2021: 93).

개인선호에 근거하는 주류경제학은 200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확대된 지역 간 소득격차의 원인을 인구이동의 둔화에서 찾고 있다. 즉 고속런 근로자는 성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반면, 저속런 근로자는 계속해서 저성장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실질임금의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것이다(Kaplan 등, 2017). 2000년대 이후 지역 간 주택가격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인구이동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Cheshire 등, 2013; Hsieh 등, 2019)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정준호, 2021: 93에서 재인용). 이렇듯, 인구이동은 지역 간 실질임금의 격차, 근로자의 숙련정도, 주택가격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 중 경제적인 환경이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준호(2021:94)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인구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장지역에 대한 주택 건설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성장지역의 낮아진 주택가격은 낮은 실질임금을 받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고임금의 일자리가 있는 성장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았으며, 많은 근로자가 보다 생산적인 지역으로 이동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생산가능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잠재적으로 고속런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자의 외부유출로 인한 지역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쇠퇴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같은 경제활동 관련 여건을 쇠퇴지역에도 동등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쇠퇴지역의 경제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방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은 경제적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지역경제의 변화를 초래하며, 인구이동에 따른 일자리의 변동과 이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의 변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승규, 2016: 30-31). 따라서 지역 간 인구이동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단순한 이동행태만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도에 따른 개인의 선호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 경제·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② 인구이동 결정요인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관련하여 오은열(2016: 50)은 전통적 인구이동 연구와 불균형론과 균형론 관점의 연구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인구이동 연구는 지역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균형론 관점의 연구는 지역 간 소득격차와 실업률의 지역 간 차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본질적으로 불균등상태에 놓이게 되며, 인구이동은 이러한 지역 간 소득격차, 실업률의 지역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셋째, 균형론관점의 연구는 주택가격과 임금 등은 그 지역의 쾌적성 등과 같은 여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취약한 지역에서 양호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지역외되는 인구의 유출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

1.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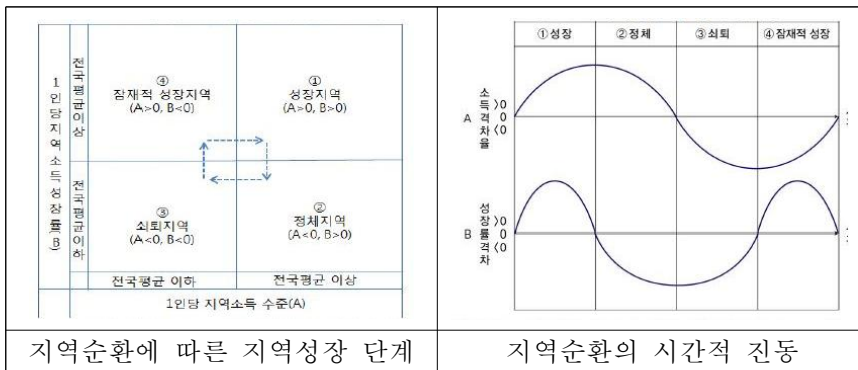
가. 이론적 논의

허문구 외(2016)는 지역순환가설(Regional cycle)을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관점에서 지역경제 성장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모든 지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허문구, 2006).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의 노동력 부족은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불러 일으켜 지역경제위축의 문제를 촉발시킨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활동은 노동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의해 그 지역의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자본, 혁신 정도, 외국인 노동력 등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와 생산성이 비례관계에 있으며, 지역경제 성장패턴은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허문구 등, 2016: 304-305). 이렇듯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와 수준은 지역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지역성장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지역성장패턴을 보이는지를 Klaassen(1981)의 ‘지역순환가설’¹⁾을 사용하여 연구한 허문구 외(2016)는 지역의 장기간에 걸친 지역경제 성장패턴을 검증하였다. 그들은 각 지역의 1인당 지역소득 수준과 성장률의 관계에 따라 성장 → 정체 → 쇠퇴 → 잠재적 성장의 방향으로 순환한다고 보았으며, 어떤 지역이 가설과 동일한 방향으로 순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격차율 및 성장률격차의 순환에 대한 시간적 진동은 <그림 2-3>과 같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들은 성장지역은 소득격차율과 성장률 격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쇠퇴지역은 소득격차율과 성장률격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잠재적 성장지역의 성장률 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소득격차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정체지역의 소득격차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성장률격차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2-3> 지역순환에 따른 지역성장 단계와 지역순환의 시간적 진동



주 : 전국평균은 1로 나타나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평균을 9로 환산하였으며, 양의 지수는 전국평균 이상, 음의 지수는 전국평균 이하를 의미
 자료 : 山田浩之·綿貫伸一郎(1985); 허문구 외(2016)의 연구를 재인용.

1) Klaassen은 1인당 지역소득의 수준과 성장률을 사용하여 시계열상으로 변동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동태적 관점에서 지역성장 변동경로를 분석하는 지역순환가설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경제성장 단계별 이동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성장지역은 성장률의 상승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집적경제로 인한 외부불경제 심화, 투자기회의 포화로 인한 신규투자 저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등으로 인해 점차 성장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정체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면 성장률은 저하되고, 소득수준이 하락하게 되면서 쇠퇴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쇠퇴지역은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지역성장에 대한 신규투자 확대와 정부의 개입 등 내·외부의 영향으로 지역성장을 촉발하면서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허문구 외, 2016: 304-305).

이러한 지역순환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쇠퇴지역은 지역성장을 위한 신규투자 확대와 정부의 개입이 발생할 경우 잠재적 성장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지역의 경제적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탐색은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인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공통점은 생산가능인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의 수준은 생산가능인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지역의 성장패턴은 동적이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생산가능인구와 같은 경제주체가 지역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경제가 제공하는 소득수준은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한 인구증가로 인한 노동의 공급이 경제성장을 유도하지는 않으며, 인구구조에 있어서 자기충족적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역 내 집적효과가 크지 않아 지역경제성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서 인구규모보다는 생산가능인구와 같은 인구구성구조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허문구 외, 2016: 321-322에서 재인용).

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 현상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되는 과정을 구조화한 연구가 있다 (Isserman, 1986; 최슬기, 2015). 최슬기(2015)는 한 사회의 인구변화 결과는 인구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을 통해 설명가능하고, 변화된 인구수와 인구구조는 다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Isserman(1986)은

인구는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구증가는 노동력, 재화, 서비스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과 실업을 결정하고, 반대로 인구감소는 노동력, 재화, 서비스의 수요 감소와 인구이동, 출산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설명하였다.

(1) 출산율과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요소는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이들 요인들은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두용(2009)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요인들 중 인구구조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정도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인구구조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출산율과 지역쇠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출산율을 경제활동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 이를 최대화 시킨다고 보았다. 출산율은 지역차원에서 볼 때, 그 지역을 구성하는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가구특성을 지배하는 전통과 관습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보다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선영(2013)은 출산율 하락은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화가 노동력 감소와 노동구성을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임금 및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박하일 외(2017: 49-51)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의 실물, 금융, 기업 및 사회복지 등 지역경제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역의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와 함께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구구성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았다(최경식, 2002). 이현훈(2006)은 피부양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관계 관점에서 어떠한 인구구성요소가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피부양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령화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인구구성요소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하일 외(2017: 49-51)는 고령화 사회의 경우는 유소년인구의 비중에 비해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등 국내의 연구결과는 인구구성요소와의 관계에서 고령화를 다루고 있다. 홍기석(2003), 김기호

(2005) 등은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줄이는 선행요인으로 보았으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신관호·황윤제(2005) 등은 고령인구 비중이 상승 속도와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미래의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고령화사 회로의 진입속도 역시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출산율과 고령화는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산율은 독자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산가능인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청장년층 인구비율의 감소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생산성 저하 등을 야기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estas 외, 2016).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를 검토한 연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비중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Bloom 외(2000)의 연구나 허문구 외(2013)의 연구를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이종하 외, 2019: 6-9에서 재인용).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력 감소는 물론 자본축적 둔화, 생산성 하락, 노동소득 감소에 따른 수요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인구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 제기된 출산율,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등은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요인의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발전과의 관계

가. 사회적 자본

최근 들어 농촌 고유의 자연환경, 경관, 전통문화, 공동체 등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이 부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며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목격되고 있다. 협동조합 또는 로컬 푸드와 같은 사회운동 차원의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중소농가

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냉혹한 도전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지방화 전략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간접자본은 생산을 위한 사회의 물리적 기반시설을 의미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비물질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생산목적의 인프라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역발전은 물리적인 인프라나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의 귀농·귀촌 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관계 형성, 마을 내의 세대 간의 화합과 통합,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와 포용, 마을 간의 네트워크와 정체성 형성 등으로 사회적 자본이 표출된다.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내생적 발전전략의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을 특징지어왔던 단기적 문제해결 중심의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서서 주민의 민주적 참여와 숙의로 대표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라는 접근방법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곽현근, 2016: 34-35).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지역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며,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나.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농촌과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산업기반의 와해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적인 삶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존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이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박준식 외, 2009). Hirschman(1988)이 주장했듯이 자본, 기술, 사회간접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가 부족한 경우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비교우위에 있는 선도 산업과 선도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불균형발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선도지역의 성과가 낙후지역으로 과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불균형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간의 격차 심화는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가속적인 약화와 지역격차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착화 현상은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

과 행태에 있어서 피동적이며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소멸을 막기 위한 요소로 활용가능하다.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를 통해 축적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호혜성의 사회적 토대가 강할수록 지역발전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끌기 위해 지역주민이 지역 내에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유출이라는 문제로 인해 급격히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이탈하여 대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유기적 유대의 사회로 볼 수 없는 원자화되고 개별화 된 사회적 고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박준식 외, 2009).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지역의 인적자본과 창조적 자본을 고갈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형성 수준은 사회발전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은 외형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활동을 통해 향유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는 인구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 하겠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기존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시·도 간, 도시 간, 도·농간 등 지역 간 위계에 따른 이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백훈, 1980; 오정일 외, 2007; 최은영 외, 2010)와 인구이동의 공간상 패턴을 찾고자하는 연구(한주성, 1992; 최은영, 2004)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이백훈 (1980)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결정요인(임금수준, 고용기회, 교육수준, 행정서비스)
한주성 (1992)	-총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
최은영 (2004)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OD(Origin & Destination)분석
오정일 외 (2007)	-시·도별 인구이동과 일자리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최은형 외 (2010)	-부산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인구이동에 대한 가구 특성 분석
김진범 외 (2010)	-인구감소 전망 및 경제·사회·도시적 영향 분석
기정훈 (201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지역쇠퇴의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분석
박세훈 외 (2012)	-인구구조변동에 의한 국토 도시공간 재편 현상 분석
이의희 외 (2013)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분석 -사회적 특성(여성학력 증가, 1인 가구, 고령인구, 여성고령인구 취약성), 경제적 특성(여성 및 고령인구 통근비율, 제조업 비율, 서비스업 비중), 외국인 특성(단순기능인력 비중, 지역별, 국적별 편차)
김순은 (2016)	-자치단체별 인구 추계, 성·연령대별 인구 분석, 지역 유형별 특징 분석
제현정 외 (2017)	-시·군·구 대상 7개 연령층 구분하여 인구구조 변화 분석

자료: 박진경 · 김상민(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첫째, 인구이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백훈(1980)의 연구는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으로 임금수준, 고용기회, 교육수준, 행정서비스를 지적하였으며, 1970~1975년 사이 순 인구이동율과 순 인구이동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오정일 외(2007)는 15개 시·도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일자리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최은영 외(2010)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을 대상으로 인구이동 관련 가구 특성을 파악하였다(오은열, 2016: 52-53에서 재인용).

둘째, 인구이동의 공간상 패턴을 찾고자 하는 한주성(1992)의 연구는 총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로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도경제성장기 전기(1970~1981년)의 경우 부산·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울로의 순인

구이동이 관측되었으며, 경북·경남에서 부산으로의 총인구이동이 관측되었다. 또한, 고도경제성장기 후기(1976~1989년)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로의 총인구이동이 관측되었다. 최은영(2004)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간 OD(Origin & Destination)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일부 충청권까지의 인구 확대를 관측하였다.

2.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쇠퇴에 관한 연구

낙후 및 쇠퇴지역 관련 연구는 지역의 낙후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이인희, 2008; 박병호 외, 2009; 조진희 외, 2010; 조진희 외, 2015; 채성주 외, 2014)와 낙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소영 외, 2012; 변필성 외, 2014)로 구분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낙후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우 이인희(2008)는 인구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노령화 지수, 순인구이동율, 사업체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쇠퇴 실태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노령화와 중소도시의 성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병호 외(2009)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중·소도시 쇠퇴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의 복합쇠퇴지수를 산출하여 시기·인구 규모별 쇠퇴 순위를 비교분석하여 도시전체의 쇠퇴유형을 파악하였다. 조진희 외(2010)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쇠퇴평가지표를 도출하여 도시 쇠퇴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이후 후속연구에서 조진희 외(2015)는 충청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쇠퇴도를 진단하였다. 채성주 외(2014)는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거리행렬 및 요인분석 등을 활용하여 충청북도 시·군의 낙후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발전유형을 발전지역, 발전정체지역, 발전도약지역, 쇠퇴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우 이소영 외(2012)는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쇠퇴지역 진단 및 쇠퇴실태 분석을 통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변필성 외(2014)는 인구과소

지역에 대해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시설 최소 공급기준 제시, 중심지 접근성 제고,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 저이용·미이용 공공시설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표 2-6> 낙후 및 쇠퇴지역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이인희 (2008)	-인구 5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 대상 노령화 지수, 순인구이동율, 사업체 종사자 등 쇠퇴지표 분석
박병호 외 (2009)	-중·소도시 쇠퇴유형 분석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표 활용한 중·소도시의 복합쇠퇴지수 산출
조진희 외 (2010)	-쇠퇴평가지표 도출 후 도시쇠퇴평가모형 구축 -유형화모델 구축 및 적용을 통해 쇠퇴도시의 유형화
이소영 외 (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228개 기초자치단체 기준 쇠퇴지역 진단
채성주 외 (2014)	-충청북도 시·군의 낙후도에 따른 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분석 -다차원척도법, 거리행렬 및 요인분석
변필성 외 (2014)	-인구과소지역의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연구 -인구과소지역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시군유형화
조진희 외 (2015)	-충청권 27개 시·군 대상 쇠퇴도 진단 -K-평균 군집분석, 인구 및 주택 노후화지역, 경제기반 취약지역 등 구분

자료 : 박진경·김상민(2017: 36)에서 재인용.

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현훈 외, 2008; 심재권, 2008; 김기호 외, 2008; 권규호, 2015; 박하일 외, 2017)와 고령화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문형표 외, 2004; 김용진 외, 2013; 김용민, 2013; 안병권 외, 2017), 출산율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성희 외, 1977; 권태환, 1990; 김한곤, 1993; 은기수, 2002; 김응렬 외, 2004; 정구진, 2005),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Clark 외, 2004; Mayda, 2007; Maria 외, 2009; Borgy 외, 2011; Ito, 2011; Roy 외, 2011; Golgher 외, 2011; 하봉찬, 2016; 손

연정, 2019)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전반에 관한 연구

이현훈 외(2008)는 세계 77개국 패널 자료에 기초한 부분조정모형을 활용하여 인구 연령구조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소년인구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심재권(2008)은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김기호 외(2008)는 가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출산율 상승이 교육비를 줄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권규호(2015)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장기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출생률 저하 및 사망률 감소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박하일 외(2017)는 한국의 지역패널 회귀모형 및 VAR 모형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들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년인구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2) 고령화에 관한 연구

문형표 외(2004)는 고령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취업인구의 연령구성 변화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용진 외(2013)는 평균수명과 인적자본 투자 및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 초기 단계에서는 인적자본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지만, 고령화가 지속되는 경우 인적자본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용민(2013)은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변이할당분석을 적용하여 전국 10개 산업의 성장률을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효과를 살펴보았다. 안병권 외(2017)는 CGE 모형을 활용하여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령화가 노동공급을 줄여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3) 출산율에 관한 연구

출산율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여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성의 고용과 임금수준, 유아사망률, 경제 내 불확실성, 초산연령, 주택가격 등을

제시하였다(이종하·황진영, 2018). 특히 여성 고용의 증가와 임금수준의 상승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출산율과 지역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을 결정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출산율 감소가 노동공급 측면에서 총공급 및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lor 외(1996)와 Lee 외(2012)의 연구는 여성의 고용, 출산율 및 소득수준 간에 상호 간 내생성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Bloom 외(2009, 2010)의 연구는 출산율 저하는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성희 외(1977)는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연령이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권태환(1990)은 대체적으로 도시 거주자가 농촌 거주자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고 보았다. 김한곤(1993)은 거시적 관점에서 출산율 감소가 사회경제발전, 교육수준, 불임시술 등과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은기수(2002)는 혼인 상태별 구성 요소 중 결혼 연령의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며, 노동시장 불안정, 경제 여건 위축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응렬 외(2004)는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소득향상에 의한 소비지향적 사고,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단축, 고학력과 경제적 자립 등이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정구진(2005)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혼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자녀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의 증대 등을 지적하였다.

(4)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Clark 외(2004)는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질임금, 교육, 인구변화, 불평등을 인구이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Mayda(2007)는 패널회귀모형으로 인구 유입 국가의 노동자당 총생산, 유출 국가의 불평등은 젊은 세대의 국제간 인구이동을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보았다. Maria 외(2009)의 연구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 내 인적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고 지적하였다. Borgy 외(2011)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내부 인구이동의 영향을 분석하여 인구 유입지역의 경우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구 유출지역의 경우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Ito(2011)는 인구이동이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간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을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축적, 기술과 교육에 의한 임금차이 등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성장한다고 지적하였다. Roy 외(2011)연구는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1인당 소득과 도로 기반시설이 순인구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Golgher 외(2011)는 수정된 솔로우-스완 모형(modified Solow-Swan model)을 활용하여 1인당 소득 성장률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구이동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1인당 소득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하봉찬(2016)은 Solow 성장모형과 조건부 수렴모형을 활용하여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의 노동이동으로 경제적인 성장이 견인된다고 지적하였다. 손연정(2019)은 중고령층의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항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건강상태에 의해 중고령층 노동이동이 유발된다고 지적하였다.

<표 2-7>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의 관계

구분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인구이동과 경제변화	Drinkwater 외(2003)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도출 인구이동으로 인한 도시의 성장 증대
	Borgy 외(2005)	인구이동의 거시경제적 효과 추출 인구이동으로 인한 저축 및 성장 증가
인구이동 원인	Clark 외(2004)	인구이동 원인 도출 인구이동의 원인을 임금, 교육, 인구 변화, 불평등, 거리, 영어활용정도로 규정
	Mayda(2007)	총생산, 불평등, 인구밀도
	손연정(2019)	성별, 학력, 건강상태, 소득

자료 : 박승규(2020: 237)에서 재인용.

3. 시사점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가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 정책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의 원인을 도출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와 인구이동의 공간상

패턴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인구이동 원인으로 임금수준, 고용기회, 교육수준, 행정서비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의 출산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적 증감과 인구의 유입과 유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에 의해 결정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중 주된 관심사항이 자연적 증감보다는 사회적 증감에 관심이 높았다. 현재의 인구구조 양태는 인구구조 영향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고령인구, 출산율,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전입·전출인구 등을 결정하는 변화원인을 인구구조 영향요인이라고 하겠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규모와 같은 인구사회 변화, 산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 변화, 공공정책에 따른 변화, 공간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선행연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구조는 동태적이며, 현재의 인구구조는 이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있다. 그것이 인구구조 영향요인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경우, 인구구조를 형성하는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등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와 고령화·출산율·인구이동 등 인구구조와 관련한 개별요소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인구구조에 국한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만을 살펴보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은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강화와 같은 사회적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탐색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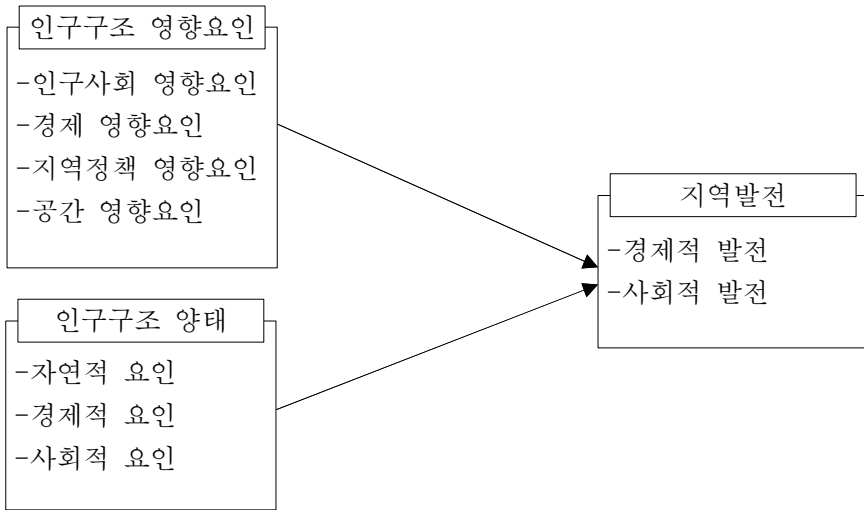
제1절 연구모형

1. 연구모형 설정

제2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인구변화는 출생, 사망, 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이 결과로 형성된 인구구조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현상은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인구구조의 양태와 영향요인간의 관계는 경제적·사회적 현상을 매개로 시차를 두고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율 저하와 선택적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학적 행태측면에서 Fol(2012)과 Rink(2009) 등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과 Rieniets(2009)가 제시한 탈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자원의 고갈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도시화 모델 등에서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을 구조화하여 인구구조 영향요인들을 정의하였다. 이들 요인으로 인구사회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 등으로 제시하였다. 지역 내 인구분포상태는 향후 그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 현재의 인구구조 양태는 출생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자연적 요인,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의 인구특성 관점의 경제적 요인, 취업·교육·환경 등을 찾아 이동하는 인구의 유출입과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인구구성요소들은 지역의 경제발전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사회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과 현재의 인구구성 상태를 의미하는 인구구조 양태로서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며, 실증분석을 위해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실증분석과 인식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인구구조 영향요인은 인구사회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으로 구성되며, 인구구조 양태는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각각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구구조 영향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인구사회 영향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경제 영향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지역정책 영향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공간 영향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구구조 양태는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자연적 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경제적 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사회적 요인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2차 자료(지역현황 DB)와 1차 자료(공무원 인식조사)를 함께 활용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검토내용에 근거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한다. 이러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본 연구가 현황분석과 설문분석을 병행하여 실증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자료와 설문자료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가.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인구구조 영향요인

인구구조 영향요인을 구성하는 인구사회 영향요인의 2차 자료 경우 인구수(주민등록인구)를 대리지표로 활용했다. 인구규모는 지역을 대표하는 자료로 규모의 경

제를 이끌기 위한 근간이 된다. 하지만, 인구규모를 인구구조 영향요인으로 볼 것인가, 인구구조 양태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의 동태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지역에서의 총 인구수는 그 지역의 경제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임석희(2016)는 한국의 경우 지역 내 제조업이 발달하고 비중이 큰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경제 영향요인으로 제조업의 발달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 내 제조업의 발달은 지역 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 내 경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경제 영향요인으로 지역 내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규모를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 지역정책 영향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개발,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예산규모는 지역 내 행정서비스의 규모를 결정한다. 박진경 외(2017)의 연구와 김형만(2019)은 교육·복지·고용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여부에 따라 인구의 유·출입 및 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간 영향요인은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의 수(공공기관수)와 신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면적(건축허가면적)을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표 3-1> 참조).

(2) 인구구조 양태

인구구조 양태를 구성하는 자연적 요인은 고령인구비율과 합계출산율을 대리지표로 활용하였다. 지역 내에서의 자연적인 인구 증감은 출생과 사망을 의미하며, 고령화된 지역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생률의 저하는 지역의 잠재적인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지표를 활용했다. 정선영(2013)은 지역사회의 임금 및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출산율과 고령화를 제시하였으며, 박하일 외(2017)의 연구와 신관호 외(2005), 홍기석(2003), 김기호(2005) 연구 등은 고령화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은 지역 내 전체 산업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인구지표인 경제활동인구(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 취업자 수(조사 대상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고용률(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 중에 실제로 취업한 사람)을 대리지표로 활용했다. Maestas

외(2016), Bloom 외(2000), 허문구 외(2013), 홍기석(2003), 김기호(2005), 김호범 외(2007) 연구들은 경제성장의 선행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꼽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활동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과 같은 경제지표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생산가능인구를 알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고용률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인구 및 일자리의 이동을 포함한 인구이동이 경제적 및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Storper, 2018; Kaplan 외, 2017; 정준호, 2021; 박승규, 2016). 인구의 전출입과 관련해 순이동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순이동의 경우 전입과 전출규모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인구 이동과 관련한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대리지표로 활용했다(<표 3-1> 참조).

<표 3-1> 독립변수 및 측정지표 선정

구분		2차 자료(통계자료)	1차 자료(설문자료)
인구구조 영향요인	인구사회 영향요인	-인구수	-인구규모
	경제 영향요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수준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	-자치단체 예산규모
	공간 영향요인	-공공기관수 -건축허가면적	-공공시설 수준
인구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고령인구비율 -합계 출산율	- 출산율 수준 -고령화 수준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수준
	사회적 요인	-전입인구 -전출인구	-인구이동 인식

나.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다. 본 연구는 지역쇠퇴를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인구구조를 건설하게 구조화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부흥은 경제적 관점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석희(2016)는 경제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제조업 성장률을 제시하였으며, Tyers 외(2007)와 Katagiri(2012)은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였다. 반면, Croix 외(2009)는 1인당 소득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이 제시한 경제성장 측정지표들은 지역적 관점에서 경제적 성장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대리지표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활용했다. 사회발전은 공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시설과 같은 생활편의 제공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관점의 시설 확충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복지·여가·교육·의료·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의 제공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병기, 2017; 주재복 외, 2015; 최진호, 2011; 이희연, 2013; 하상근, 2005). 이들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질수록 지역이 발전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을 대리지표로 활용했다. 사회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양하다. 이론적 검토에서 제시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통계로 획득 가능한 범주에서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교육·의료·문화 관련 시설수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했다(<표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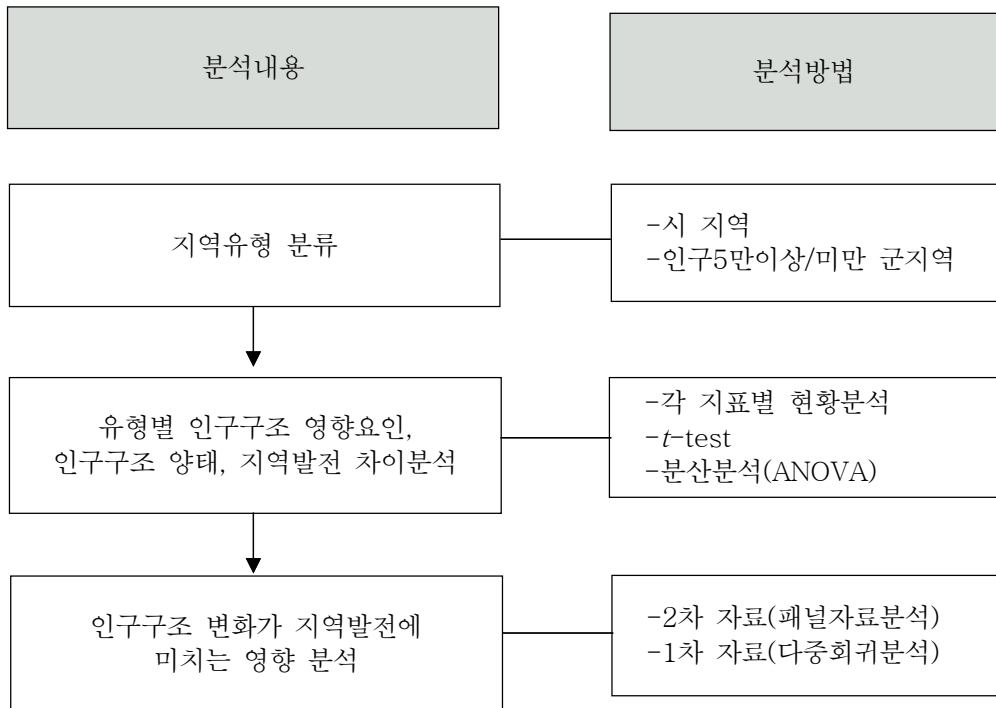
<표 3-2> 종속변수 및 측정지표 선정

구분	2차 자료(통계자료)	1차 자료(설문자료)
경제발전	-GRDP	-지역경기 수준
사회발전	-공교육기관 수 -의료기관 수 -문화시설 수	-공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수준 -교류, 협력, 삶의 질

2. 분석방법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자료와 현황자료를 모두 분석·사용했다. 설문자료 분석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인구문제와 지역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다. 현황자료 분석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자료를 활용·분석했다.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2> 참조).

첫째, 인구구조 영향요인이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과 인구를 기준으로 시 지역, 5만이상 군 지역, 5만미만 군 지역으로 유형화하여 인구규모의 차이와 각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3-2> 분석방법

둘째, 앞서 제시한 지역 유형별 특성에 따라 인구구조 영향요인, 인구구조 양태, 그리고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t -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셋째,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가 지역발전(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균형패널자료 분석(2차 자료)과 다중회귀분석(1차 자료)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1. 지역현황자료 분석

가. 인구구조 영향요인 현황 분석

(1) 인구수 변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5세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록 1>과 같다. 전라남도의 주민등록인구수는 1,919천명에서 1,852천명으로 연평균 0.3%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시는 246천명에서 224천명으로 연평균 0.76% 감소한 반면에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는 각각 연평균 0.39%, 1.84%, 0.59% 증가했다. 군 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유일하게 연평균 2.17%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모든 군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특히, 고흥군과 보성군은 각각 1.5%, 1.74% 감소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군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인구 3만 미만인 군 지역은 곡성군, 구례군으로 나타났으며, 인구3만-인구5만 미만인 지역은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0월 18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전라남도는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 22개 시·군 중 72.7%인 16개 군이나 포함되었다.

전라남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특히 군 지역의 인구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군 지역 전반에 걸친 활성화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인구분포(1세별)의 연령별 평균 인구수는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 19,000명에서 2020년 18,332명으로 감소하였다. 시·군별로 도(道)의 변이계수(CV) 보다 안정적인 인구분포²⁾를 보이는 지역은 2008년 기준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기준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만이 도의 변이계수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2) CV(coefficient of variation: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연령별 인구분포의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표 4-1> 지역별 연도별 인구분포 비교(2008년/2020년)

(단위 : %)

구분	2008년			2020년		
	평균	표준편차	CV	평균	표준편차	CV
전라남도	19,000	9,520	0.501	18,332	8,851	0.483
목포시	2,432	1,517	0.624	2,218	1,192	0.537
여수시	2,922	1,689	0.578	2,775	1,458	0.525
순천시	2,668	1,649	0.618	2,794	1,490	0.533
나주시	920	443	0.482	1,145	519	0.453
광양시	1,400	944	0.674	1,503	875	0.582
담양군	479	240	0.502	458	254	0.553
곡성군	323	158	0.490	278	162	0.584
구례군	274	137	0.498	255	151	0.594
고흥군	758	406	0.536	633	403	0.637
보성군	495	245	0.494	401	238	0.593
화순군	696	350	0.503	619	320	0.517
장흥군	424	208	0.491	374	199	0.531
강진군	407	195	0.479	343	188	0.548
해남군	802	394	0.491	681	370	0.542
영암군	595	286	0.481	532	263	0.495
무안군	659	323	0.489	853	401	0.470
함평군	371	193	0.521	317	189	0.596
영광군	575	281	0.489	526	254	0.483
장성군	461	225	0.489	440	221	0.503
완도군	545	281	0.515	494	262	0.531
진도군	341	178	0.524	309	168	0.542
신안군	453	257	0.568	386	248	0.64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2) 경제 영향요인

① 사업체 수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근거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전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사업체수 증가율은 3.6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사업체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11,634개,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4,569개이다. 군 지역은 무안군이 2,843개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794개로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는 시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연평균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수시 3.94%, 광양시 3.68% 순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군 6.62%, 장성군 6.21% 순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연평균 22.71%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광업은 -8.53%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여수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9.78%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서비스업이 0.0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체가 증가했다. 순천시 모든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농업/임업/어업이 9.5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나주시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21.6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모든 사업체가 증가했다. 광양시는 교육서비스업이 0.97%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체가 증가했다(<표 4-2> 참조). 군 지역의 경우 담양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1.04%, 곡성군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4.06%, 구례군은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5.76%, 고흥군은 농업/임업/어업 23.00%, 보성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2.77%, 화순군은 농업/임업/어업 13.43%, 장흥군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15.76%, 강진군은 농업/임업/어업 20.53%, 해남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5.76%, 영암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2.91%, 무안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63%, 함평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3.43%, 영광군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2.06%, 장성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8.27%, 완도군은 농업/임업/어업 37.79%, 진도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9.38%, 신안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4.3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표 4-2>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연평균 증가율 추이(2008년~2019년)

(단위 : %)

구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전체	0.93	3.94	3.10	7.20	3.68	6.07	5.05	2.60	3.56	2.08	3.32
농업/임업/어업	4.75	2.41	9.50	9.58	8.69	8.69	7.17	1.67	23.00	5.66	13.43
광업	-8.53	6.50	0.00	2.31	0.00	0.00	10.50	-100	6.50	-100	6.50
제조업	4.23	4.78	5.65	6.87	5.91	5.44	9.41	8.90	4.23	1.26	3.87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22.71	6.15	1.91	18.27	7.28	8.69	13.43	6.50	13.43	0.00	6.5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84	4.30	5.82	10.26	9.26	5.88	6.50	10.50	5.22	2.65	1.78
건설업	3.97	6.12	7.61	8.22	6.69	12.26	10.59	6.50	8.35	7.24	6.12
도매/소매업	0.22	3.78	1.92	7.27	4.07	6.94	4.31	5.17	4.64	3.75	4.39
운수업	1.34	4.98	3.90	2.62	4.51	2.85	3.89	5.73	0.34	-0.95	1.19
숙박/음식점업	0.18	4.67	3.03	6.92	1.92	5.35	3.53	-0.52	1.19	0.21	1.95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0.39	1.97	4.02	21.66	7.05	14.88	13.43	15.76	4.75	10.50	5.66
금융/보험업	-1.82	1.80	2.20	3.40	1.37	-0.29	0.39	-0.36	0.73	-0.63	0.47
부동산업/임대업	1.90	3.91	3.67	14.90	4.39	12.67	8.69	1.08	13.43	-1.64	5.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71	6.08	5.69	12.15	5.04	11.05	11.31	1.84	10.22	7.28	7.0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7.59	9.78	8.99	17.84	10.59	21.04	12.06	8.46	12.54	12.77	11.69
교육서비스업	-0.42	-0.07	1.37	7.36	-0.97	-0.63	0.42	1.22	1.95	-1.35	0.00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3.31	5.34	3.85	7.02	5.68	6.50	5.27	3.83	5.75	4.38	2.26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0.22	4.65	2.59	8.51	6.28	12.27	14.06	5.49	8.44	0.00	6.64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0.96	0.44	0.86	2.37	0.07	1.50	0.74	-0.96	-0.06	-1.33	-0.07

구분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체	5.36	4.92	2.48	6.62	6.75	3.53	1.92	6.21	5.28	5.36	2.06
농업/임업/어업	11.72	20.53	8.51	9.33	2.82	12.77	6.50	8.18	37.79	13.03	9.33
광업	-6.11	-6.11	-4.38	0.00	-13.6	-	4.94	6.50	2.65	-3.62	0.62
제조업	6.22	6.24	3.42	8.98	3.79	6.55	0.53	8.73	3.12	8.61	-2.8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5.22	17.69	9.63	16.76	2.05	10.50	12.06	10.50	3.75	23.28	3.1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15.76	8.01	6.50	8.46	5.49	4.37	3.11	7.53	31.30	26.26	-
건설업	8.97	7.33	7.50	10.18	4.57	6.75	4.95	11.95	10.94	7.21	4.48
도매/소매업	5.88	5.70	4.30	8.41	10.79	4.09	5.08	6.21	9.16	9.53	5.95
운수업	2.27	2.91	-1.09	8.17	-0.68	0.15	-1.79	4.54	1.55	-0.60	-0.45
숙박/음식점업	1.23	3.34	-0.52	2.18	7.89	0.71	0.15	4.78	3.27	3.27	2.65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22	9.07	8.69	22.71	5.88	2.05	5.37	9.33	2.47	3.46	3.75
금융/보험업	0.00	-0.28	-0.53	0.85	4.48	-1.11	-2.13	0.00	2.54	-0.28	0.73
부동산업/임대업	5.13	6.50	3.00	10.50	14.09	3.75	5.92	5.37	10.01	2.94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1.85	11.15	6.50	15.43	15.63	8.46	7.14	11.15	6.84	11.05	14.2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4.88	6.05	15.76	22.91	12.67	13.43	10.14	18.27	19.96	29.38	24.36
교육서비스업	1.84	1.14	2.51	0.15	10.50	1.12	0.15	-0.63	6.22	-1.53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14	5.79	4.09	7.33	7.16	3.89	3.94	5.33	4.35	5.04	6.5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0.50	10.26	1.67	6.01	12.74	9.73	1.96	1.41	11.10	14.88	13.43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4.58	2.36	-0.26	0.73	2.33	0.68	-1.68	1.51	1.59	1.06	-1.3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② 사업체 종사자 수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기초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전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은 4.2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109,716명,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41,944명이다. 군 지역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영암군이 28,624명, 가장 적은 군은 신안군이 4,912명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연평균 7.12%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수시 5.17%, 순천시 4.35%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장흥군 6.46%, 장성군 5.8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4-2> 참조).

시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이 연평균 12.5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2.90%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여수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 10.30%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임업/어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감소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건설업이 7.9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27.0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광업과 운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1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표 4-3> 참조).

군 지역의 경우 담양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8.40%, 곡성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30%, 구례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7.38%, 고흥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8.31%, 보성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4.52%, 화순군은 농업/임업/어업 11.82%, 장흥군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23.96%, 강진군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7.45%, 해남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6.71%, 영암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8.53%, 무안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8.88%, 함평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7.69%, 영광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5.99%, 장성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3.10%, 완도군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46.66%, 진도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39.19%, 신안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4.4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표 4-3> 참조).

<표 4-3> 지역별 산업별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 추이(2008년~2019년)

(단위 : %)

구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전체	1.64	5.17	4.35	7.12	3.83	5.54	3.57	5.74	4.03	4.02	2.65
농업/임업/어업	1.97	-1.91	0.71	18.37	-1.60	-0.84	0.41	-1.21	13.09	-2.07	11.82
광업	-2.01	9.93	1.33	-5.20	-1.25	-7.11	5.49	-100	4.04	-100	-5.38
제조업	1.57	2.92	5.51	4.78	4.51	2.80	0.75	10.30	0.85	-0.89	2.1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75	4.32	-2.52	26.07	11.00	2.89	3.75	1.00	2.98	0.61	-0.64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12.57	6.41	7.93	7.69	4.77	3.34	6.34	8.28	8.57	2.94	-1.27
건설업	3.23	7.91	7.94	7.03	3.47	9.76	9.65	7.89	7.71	11.89	0.17
도매/소매업	-0.10	4.31	2.36	6.78	3.83	8.21	5.06	7.64	5.59	4.23	6.01
운수업	3.32	5.86	2.63	-5.50	3.89	4.04	9.82	12.29	3.40	-0.54	2.48
숙박/음식점업	0.74	6.28	4.20	9.08	3.18	5.66	4.35	-1.11	3.54	1.64	2.8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2.90	-0.44	-3.55	27.01	1.66	6.50	5.73	4.69	2.01	1.47	1.50
금융/보험업	-1.69	1.26	0.74	1.46	0.42	-2.04	-1.74	-1.27	-0.12	-2.51	-3.35
부동산업/임대업	1.56	1.84	4.15	14.84	2.68	9.56	7.80	6.50	8.55	-2.94	4.7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74	5.94	7.00	19.78	1.28	10.19	14.30	17.38	12.51	6.60	0.7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31	10.30	7.19	23.48	5.02	18.40	12.28	10.50	18.31	14.52	6.50
교육서비스업	0.13	0.37	1.32	2.19	0.94	-0.13	1.20	1.50	3.35	1.36	1.20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6.02	8.48	7.75	7.17	11.13	10.52	9.21	9.88	6.66	9.39	6.31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63	9.92	5.55	5.09	6.30	6.71	6.28	3.33	14.37	2.86	4.06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0.85	2.58	1.37	6.58	-5.44	1.77	-3.63	0.94	-0.56	-0.45	-1.62

구분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체	6.46	4.28	4.09	2.87	7.46	4.37	2.47	5.80	4.89	4.91	3.47
농업/임업/어업	7.42	10.27	3.83	5.47	1.43	10.44	1.77	9.71	29.53	7.20	12.99
광업	3.51	-24.8	-3.80	4.33	-17.0	-	-1.21	0.63	-0.66	-4.32	-3.08
제조업	7.50	3.57	5.59	0.02	3.55	3.63	3.10	4.04	-0.28	4.84	1.76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2.93	4.48	-0.33	8.53	7.34	2.41	1.50	0.89	2.54	11.57	3.8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23.96	7.43	15.60	6.66	4.39	4.05	3.90	8.94	46.66	30.05	-
건설업	5.45	2.99	9.63	12.42	4.65	7.10	-1.57	15.51	12.99	4.13	4.70
도매/소매업	7.83	6.28	3.20	9.68	11.25	5.87	6.33	4.87	10.11	9.95	8.43
운수업	11.20	-3.16	0.30	7.48	0.50	0.79	-3.02	3.96	0.32	-1.91	5.42
숙박/음식점업	2.71	4.50	0.18	5.23	10.06	1.36	1.59	7.16	4.33	5.51	3.98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0.99	2.75	0.41	12.83	4.21	-2.58	2.79	1.33	-1.62	-4.90	10.16
금융/보험업	-1.50	-0.93	-0.36	0.76	4.25	-3.23	-2.33	-2.39	0.23	-0.32	-2.27
부동산업/임대업	8.88	1.53	5.86	14.79	11.08	4.19	1.22	4.83	6.26	2.47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47	12.21	5.92	21.77	21.68	10.24	1.84	8.43	10.17	8.45	2.4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1.03	7.59	16.71	28.53	28.88	17.69	15.99	23.10	25.69	39.19	14.49
교육서비스업	2.53	-5.11	0.23	0.98	6.89	-1.19	1.28	-0.05	6.02	-0.39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9.27	9.69	7.06	8.80	9.72	7.88	5.80	9.19	7.79	6.72	6.8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9.60	17.45	6.19	2.47	9.19	4.43	8.49	9.09	5.01	17.63	13.33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3.88	2.66	0.31	1.79	4.52	0.43	-3.19	1.76	0.54	-1.00	-2.8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3) 지역정책 영향요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예산규모(총계) 증가율은 2.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예산규모가 가장 큰 시 지역은 여수시로 1조 3,594억원,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7,7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해남군으로 7,395억원, 가장 적은 군은 구례군으로 3,027억원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시 지역의 경우 광양시가 연평균 8.30%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천시 4.96%, 여수시 3.80%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곡성군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광군 3.80%, 해남군 3.62%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완도군과 진도군은 각각 0.31%, 0.91% 씩 감소해 타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표 4-4> 참조).

(4) 공간 영향요인

① 공공기관 수

전라남도의 「전라남도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공공기관수 증가율은 0.60%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218개, 가장 적은 시는 광양시로 65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신안군으로 104개, 가장 적은 군은 구례군으로 30개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시 지역의 경우 순천시가 연평균 2.03%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수시 1.86%, 나주시 1.06%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담양군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안군 2.61%, 함평군 1.38%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② 건축허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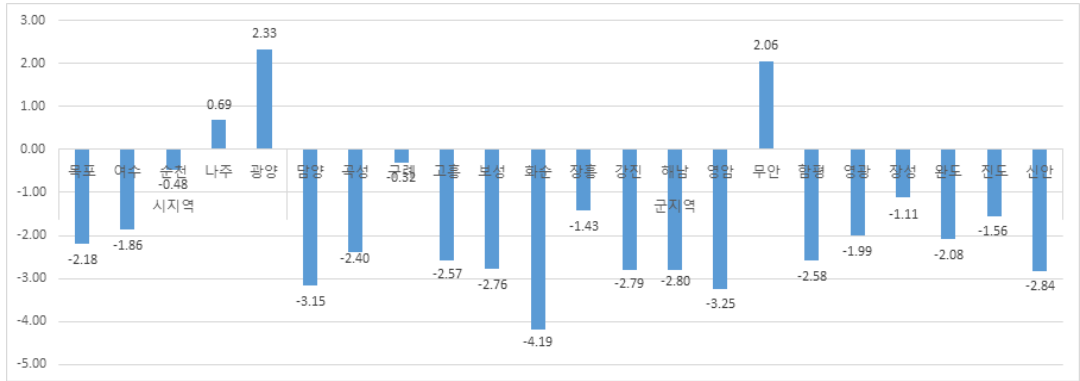
전라남도의 「전라남도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건축허가면적 증가율은 7.6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건축허가면적이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1,007,593㎡, 가장 적은 시는 목포시로 469,554㎡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영암군으로 397,773㎡, 가장 적은 군은 진도군으로 79,402㎡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시 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연평균 13.21%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천시 9.96%, 여수

시 9.70% 순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경우 장흥군이 1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완도군 13.29%, 해남군 11.60%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암군, 장성군은 1% 미만의 증가세로 타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표 4-6> 참조).

<표 4-4> 지역별 예산규모(총계)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539,055	494,123	547,042	589,432	632,547	751,252	822,099	3.58
여수시	868,512	818,557	994,926	793,966	1,021,843	1,307,567	1,359,412	3.80
순천시	702,721	709,026	700,416	788,310	982,438	1,263,189	1,255,640	4.96
나주시	547,581	579,843	610,979	478,854	765,128	844,523	778,281	2.97
광양시	403,463	453,862	480,574	484,946	630,189	769,622	1,050,215	8.30
담양군	332,408	323,907	281,903	296,627	395,813	504,540	378,624	1.09
곡성군	233,511	251,125	299,625	264,987	360,484	455,167	397,149	4.53
구례군	241,692	228,645	237,122	230,500	307,154	367,132	302,788	1.90
고흥군	538,346	463,340	532,285	434,433	687,398	861,309	654,641	1.64
보성군	393,719	356,683	359,751	355,953	481,061	605,064	493,312	1.90
화순군	475,384	468,211	475,601	368,344	529,890	656,251	572,663	1.56
장흥군	397,556	337,984	321,813	305,280	441,276	495,184	409,531	0.25
강진군	335,304	302,784	244,560	282,967	416,589	515,018	375,194	0.94
해남군	482,397	441,207	489,181	427,458	699,682	907,143	739,524	3.62
영암군	390,629	359,248	410,480	332,630	429,266	539,142	526,520	2.52
무안군	378,480	344,171	412,207	345,320	518,403	564,720	519,021	2.67
함평군	295,410	271,528	265,212	268,147	393,843	415,671	386,884	2.27
영광군	328,389	312,891	412,635	347,638	453,153	533,373	513,926	3.80
장성군	329,012	329,527	324,623	313,361	461,384	530,155	416,000	1.97
완도군	538,341	375,908	507,400	351,816	507,097	562,874	518,578	-0.31
진도군	370,952	333,156	389,389	265,744	431,667	434,186	332,524	-0.91
신안군	522,055	496,557	471,565	394,929	629,791	726,811	567,937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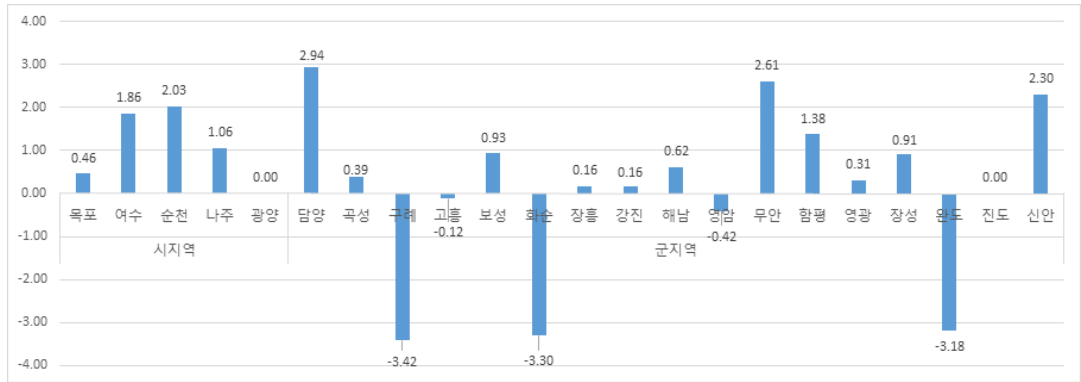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표 4-5> 지역별 공공기관 수 추이(2008년~2019년)

(단위 : 천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134	134	128	126	138	141	141	0.46
여수시	178	173	186	186	206	218	218	1.86
순천시	97	149	149	117	119	120	121	2.03
나주시	98	102	98	105	88	108	110	1.06
광양시	65	65	65	65	64	66	65	0.00
담양군	56	66	59	76	76	77	77	2.94
곡성군	46	46	47	36	47	47	48	0.39
구례군	44	44	44	30	44	45	30	-3.42
고흥군	76	72	81	75	79	81	75	-0.12
보성군	56	58	103	98	57	58	62	0.93
화순군	68	77	73	77	72	34	47	-3.30
장흥군	55	55	57	57	56	56	56	0.16
강진군	56	59	61	61	65	57	57	0.16
해남군	71	72	84	76	77	77	76	0.62
영암군	67	70	61	64	64	59	64	-0.42
무안군	64	81	83	82	85	85	85	2.61
함평군	43	51	47	49	48	50	50	1.38
영광군	57	55	57	57	58	58	59	0.31
장성군	57	63	63	62	62	60	63	0.91
완도군	97	76	68	68	68	64	68	-3.18
진도군	48	50	50	51	51	47	48	0.00
신안군	81	80	121	91	90	62	104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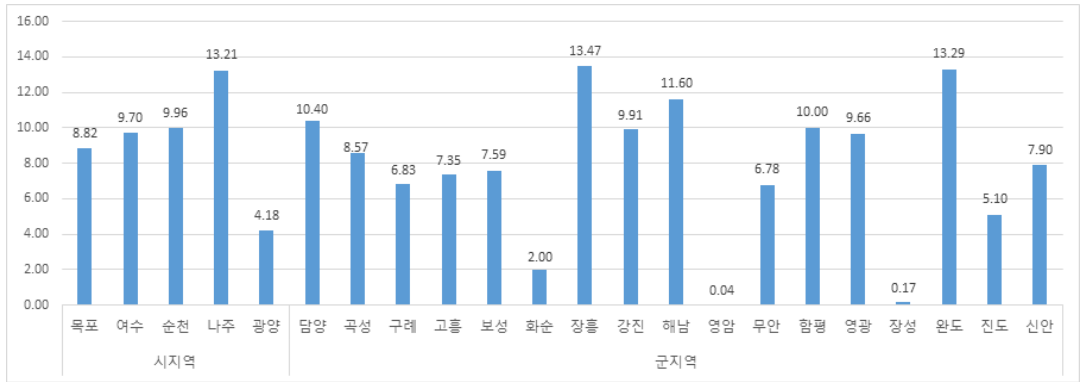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표 4-6> 지역별 건축허가면적 추이(2008년~2019년)

(단위 : m²,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185,259	344,693	506,673	364,562	436,947	539,082	469,554	8.82
여수시	363,920	772,614	716,537	653,431	1,303,249	1,118,922	1,007,593	9.70
순천시	330,165	559,028	408,298	351,457	564,114	439,037	938,383	9.96
나주시	186,374	322,041	1,128,780	1,336,220	588,722	744,469	729,925	13.21
광양시	534,522	917,701	266,792	448,377	285,947	224,258	838,768	4.18
담양군	88,160	211,490	110,847	143,604	165,109	277,140	261,735	10.40
곡성군	72,217	97,476	107,670	92,360	106,334	109,614	178,358	8.57
구례군	39,917	40,503	49,314	61,965	57,717	121,766	82,590	6.83
고흥군	145,001	169,946	237,589	311,705	257,827	326,594	316,523	7.35
보성군	106,510	120,699	232,274	108,329	158,865	244,958	238,119	7.59
화순군	213,540	220,282	186,415	150,683	154,258	384,974	265,643	2.00
장흥군	87,331	291,924	122,260	110,073	184,777	277,840	350,586	13.47
강진군	91,708	181,731	118,870	105,413	136,134	242,772	259,260	9.91
해남군	105,448	272,476	202,035	164,415	299,062	309,797	352,650	11.60
영암군	396,045	206,778	292,719	159,013	375,624	416,314	397,773	0.04
무안군	170,452	408,029	484,507	401,915	487,650	433,004	350,849	6.78
함평군	105,439	176,206	126,566	158,191	181,148	249,097	300,780	10.00
영광군	127,109	187,535	158,445	150,715	222,572	281,680	350,407	9.66
장성군	162,694	234,620	121,356	119,333	317,111	279,663	165,809	0.17
완도군	46,127	105,107	95,195	137,670	147,179	149,898	182,045	13.29
진도군	45,950	79,967	44,177	91,998	92,191	134,655	79,402	5.10
신안군	47,411	110,518	101,950	77,572	122,715	148,657	109,393	7.9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나. 인구구조 현황 분석

(1) 자연적 요인

①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고령인구비율 증가율은 2.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시 지역은 나주시로 22.5%, 가장 낮은 시는 광양시로 13.3%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군 지역은 고흥군으로 41.1%, 가장 낮은 군은 무안군으로 20.4%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시지역의 경우 목포시가 연평균 5.10%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수시 4.35%, 광양시 3.12%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화순군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성군 2.51%, 고흥군 2.51%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나주시와 무안군은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4-7> 참조).

② 합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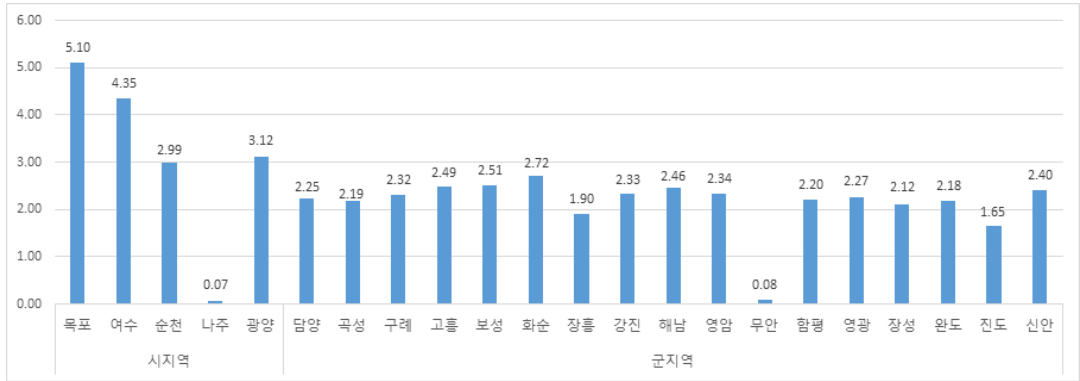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합계 출산율 증가율은 -1.9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 지역은 광양시로 1.232명, 가장 낮은 시는 목포시로 0.801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군 지역은 영광군으로 2.455명, 가장 낮은 군은 무안군으로 1.012명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시 지역의 경우 순천시가 연평균 -1.66% 증가하여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나주시 -1.67%, 여수시 -1.70% 순으로

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영광군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흥군 1.41%, 완도군 0.4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흥군, 장흥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을 제외한 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표 4-7> 지역별 고령인구비율(고령화 지수)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9.3	10.2	11.3	12.6	13.6	15.0	16.9	5.10
여수시	11.7	12.5	13.6	14.9	16.1	17.5	19.5	4.35
순천시	11.1	11.4	12.1	12.8	13.6	14.5	15.8	2.99
나주시	22.3	23.6	24.5	24.7	22.5	21.7	22.5	0.07
광양시	9.2	9.4	9.6	10.3	10.9	11.7	13.3	3.12
담양군	23.9	24.9	26.0	27.4	28.2	29.4	31.2	2.25
곡성군	28.0	29.1	31.0	31.8	32.6	33.9	36.3	2.19
구례군	26.2	27.4	28.7	29.4	30.1	31.4	34.5	2.32
고흥군	30.6	32.0	33.8	35.7	37.5	38.9	41.1	2.49
보성군	28.6	29.5	31.2	32.9	34.3	35.9	38.5	2.51
화순군	19.5	20.4	21.4	22.7	23.8	25.0	26.9	2.72
장흥군	27.3	28.1	28.6	29.0	31.0	32.1	34.2	1.90
강진군	26.4	26.7	28.2	29.0	30.9	32.7	34.8	2.33
해남군	24.2	25.2	26.4	27.5	28.7	30.3	32.4	2.46
영암군	20.3	20.9	21.7	22.6	23.8	25.3	26.8	2.34
무안군	20.2	19.1	19.6	19.1	19.7	20.2	20.4	0.08
함평군	28.2	29.5	31.0	32.0	32.9	34.2	36.6	2.20
영광군	22.3	23.2	24.4	25.5	26.6	27.8	29.2	2.27
장성군	23.4	24.3	25.5	26.5	27.2	28.2	30.1	2.12
완도군	25.1	26.4	27.4	28.7	29.7	30.6	32.5	2.18
진도군	27.2	28.5	29.5	30.4	31.5	32.4	33.1	1.65
신안군	27.6	28.3	30.3	31.1	32.4	33.8	36.7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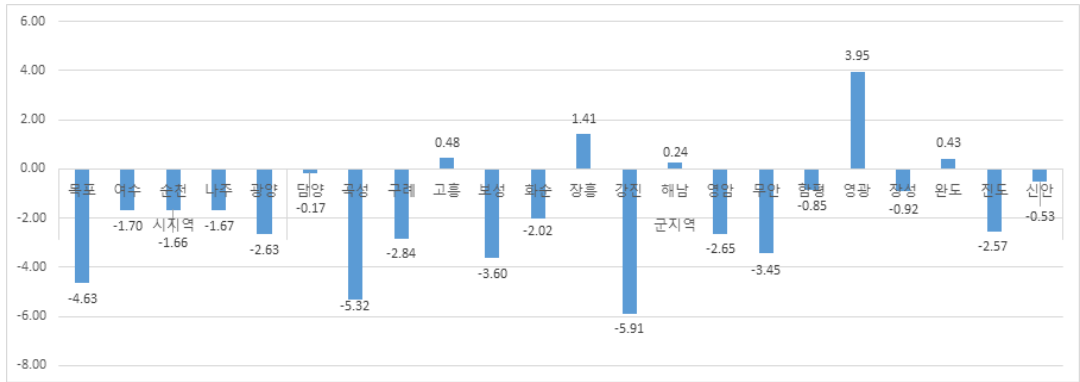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표 4-8>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1.415	1.445	1.508	1.261	1.268	0.992	0.801	-4.63
여수시	1.310	1.379	1.462	1.381	1.464	1.192	1.067	-1.70
순천시	1.272	1.250	1.343	1.261	1.247	1.108	1.041	-1.66
나주시	1.358	1.276	1.641	1.486	1.589	1.360	1.109	-1.67
광양시	1.697	1.886	2.002	1.809	1.586	1.333	1.232	-2.63
담양군	1.359	1.588	1.685	1.692	1.514	1.384	1.332	-0.17
곡성군	1.562	1.455	1.452	1.347	1.348	1.336	0.811	-5.32
구례군	1.480	1.456	1.534	1.449	1.476	0.740	1.047	-2.84
고흥군	1.378	1.449	1.329	1.101	1.323	1.168	1.459	0.48
보성군	1.641	2.003	2.055	1.737	1.492	1.195	1.057	-3.60
화순군	1.393	1.469	1.480	1.274	1.126	0.990	1.091	-2.02
장흥군	1.499	1.348	1.440	1.283	1.013	1.248	1.774	1.41
강진군	2.207	2.339	2.070	1.921	1.717	1.412	1.063	-5.91
해남군	1.620	1.660	2.470	2.433	2.423	1.886	1.668	0.24
영암군	1.898	2.172	2.184	2.002	1.902	1.594	1.375	-2.65
무안군	1.542	1.798	1.634	1.446	1.413	1.054	1.012	-3.45
함평군	1.490	1.653	2.101	1.954	1.701	1.289	1.345	-0.85
영광군	1.543	1.717	1.848	1.674	1.656	1.816	2.455	3.95
장성군	1.686	1.753	1.978	1.825	1.887	1.778	1.509	-0.92
완도군	1.367	1.861	1.962	1.902	1.828	1.616	1.439	0.43
진도군	1.466	1.722	1.874	1.663	1.546	1.217	1.073	-2.57
신안군	1.426	1.598	1.706	1.651	1.573	1.593	1.338	-0.53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2) 경제적 요인

①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0.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149.0천명,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63.9천명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무안군으로 43.4천명으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이 14.3천명으로 가장 적었다(<표 4-9> 참조). 연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2.4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광양시(2.24%), 여수시(1.85%)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무안군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담양군(0.61%), 영광군(0.0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안군, 담양군, 영광군을 제외한 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② 취업자 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은 0.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147.0천명,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62.9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무안군이 42.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이 14.2천명으로 가장 적었다(<표 4-10> 참조). 연 평균 증가율은 시 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연평균 2.55%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양시(2.14%), 여수시(1.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은 무안군(2.0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담양군(0.75%), 영광군(0.0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안군, 담양

군, 영광군을 제외한 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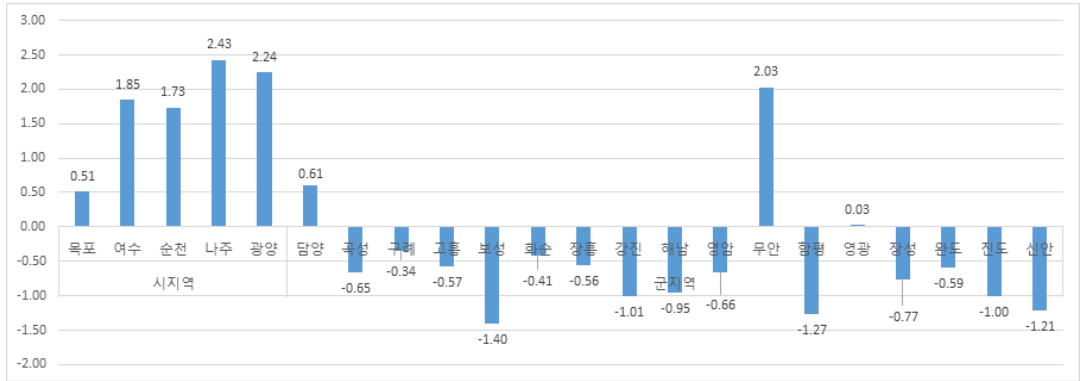
③ 고용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용률이 가장 높은 시 지역은 나주시로 66.0%, 가장 낮은 시는 목포시로 57.5%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군 지역은 신안군 77.3%, 가장 낮은 군은 무안군으로 60.3%였다(<표 4-11> 참조). 시 지역의 경우 여수시가 연평균 1.40%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주시 0.38%, 순천시 0.37%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담양군이 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흥군 0.76%, 영광군 0.45% 순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표 4-9>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천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108.6	108.5	112.5	113.5	116.9	110.5	115.5	0.51
여수시	119.6	121.2	127.6	137.4	138.8	145.3	149.0	1.85
순천시	116.5	120.0	121.4	133.2	135.4	139.8	143.1	1.73
나주시	47.9	45.3	47.3	48.8	57.6	63.3	63.9	2.43
광양시	61.6	66.3	66.5	70.0	76.2	79.1	80.4	2.24
담양군	23.8	22.5	25.7	26.1	25.3	26.2	25.6	0.61
곡성군	18.5	16.2	17.0	17.4	17.8	17.2	17.1	-0.65
구례군	14.9	14.9	14.6	15.1	15.1	15.2	14.3	-0.34
고흥군	43.6	41.1	43.6	43.9	42.6	40.8	40.7	-0.57
보성군	28.3	25.1	23.4	25.1	24.9	23.4	23.9	-1.40
화순군	35.1	30.5	32.8	33.4	34.0	33.3	33.4	-0.41
장흥군	22.9	21.6	21.7	22.0	21.5	21.8	21.4	-0.56
강진군	21.8	20.2	20.4	21.7	20.9	20.3	19.3	-1.01
해남군	46.3	46.0	44.8	45.7	43.8	42.9	41.3	-0.95
영암군	36.9	32.9	33.8	35.7	35.7	32.0	34.1	-0.66
무안군	34.1	37.5	38.4	44.8	44.0	42.9	43.4	2.03
함평군	21.1	19.7	18.7	19.8	18.9	18.9	18.1	-1.27
영광군	29.3	28.7	28.8	30.4	29.1	29.7	29.4	0.03
장성군	25.9	23.1	22.9	23.9	23.1	23.2	23.6	-0.77
완도군	30.4	30.8	28.4	29.9	30.3	29.9	28.3	-0.59
진도군	20.2	19.4	18.8	19.1	19.1	18.0	17.9	-1.00
신안군	26.5	25.2	24.5	26.0	25.3	25.3	22.9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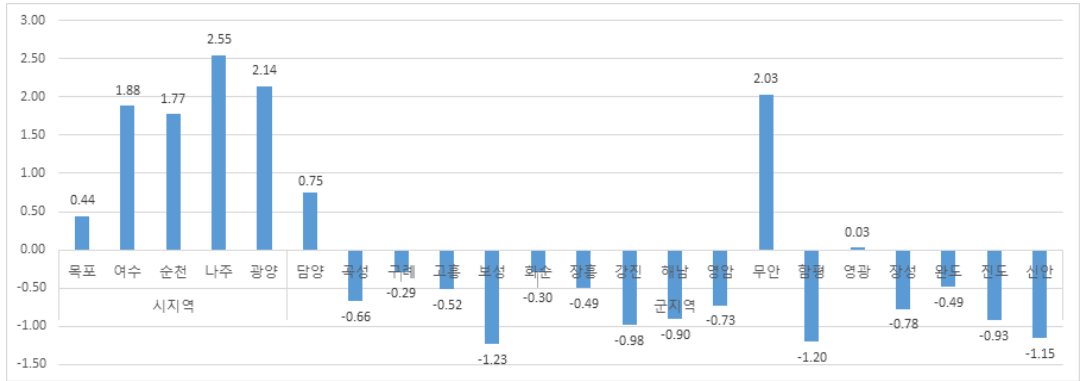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표 4-10> 지역별 취업자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천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105.4	104.9	110.7	111.1	114.1	107.9	111.1	0.44
여수시	117.5	117.1	125.5	135.2	135.4	143.7	147.0	1.88
순천시	113.8	117.1	119.5	128.7	133.2	136.7	140.5	1.77
나주시	46.5	44.7	46.9	47.9	55.9	61.7	62.9	2.55
광양시	60.5	64.4	66.0	67.7	73.9	77.5	78.0	2.14
담양군	23.3	22.0	25.7	25.7	24.7	25.6	25.5	0.75
곡성군	18.3	15.9	17.0	17.4	17.6	16.9	16.9	-0.66
구례군	14.7	14.6	14.6	15.0	14.8	15.1	14.2	-0.29
고흥군	43.2	40.6	43.3	43.9	42.5	40.7	40.6	-0.52
보성군	27.6	24.8	23.2	24.7	24.6	23.4	23.8	-1.23
화순군	33.9	29.4	32.3	32.5	33.4	32.8	32.7	-0.30
장흥군	22.5	21.3	21.7	21.9	21.2	21.6	21.2	-0.49
강진군	21.5	20.0	20.3	21.6	20.7	20.1	19.1	-0.98
해남군	45.9	45.5	44.7	45.4	43.4	42.5	41.2	-0.90
영광군	36.7	32.3	33.3	35.6	35.1	31.3	33.6	-0.73
무안군	33.7	37.0	37.8	43.9	43.5	42.1	42.9	2.03
함평군	20.8	19.6	18.6	19.6	18.8	18.8	18.0	-1.20
영광군	28.9	28.4	28.5	30.3	28.9	29.5	29.0	0.03
장성군	25.5	22.3	22.7	23.7	23.0	22.9	23.2	-0.78
완도군	29.9	30.1	28.4	29.6	30.0	29.9	28.2	-0.49
진도군	19.9	19.2	18.8	19.1	19.0	17.7	17.8	-0.93
신안군	26.3	25.0	24.5	25.9	25.2	25.3	22.9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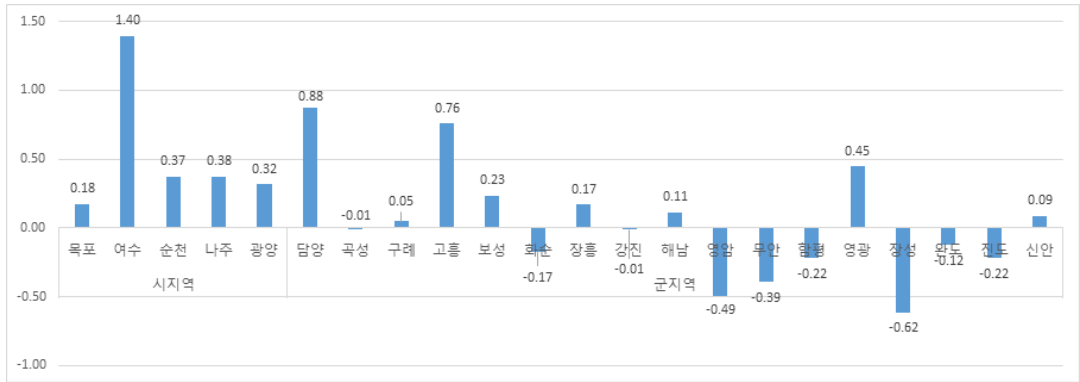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표 4-11> 지역별 고용률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천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56.3	55.2	56.4	56.3	57.6	54.9	57.5	0.18
여수시	54.1	53.4	55.8	59.0	58.2	62.1	63.9	1.40
순천시	58.8	58.2	57.2	59.2	60.0	60.7	61.5	0.37
나주시	63.1	62.4	65.8	65.7	66.2	65.9	66.0	0.38
광양시	62.3	61.7	58.5	57.9	62.2	64.3	64.7	0.32
담양군	59.8	57.7	66.1	65.6	63.3	65.6	66.4	0.88
곡성군	69.1	61.0	66.6	67.3	67.4	65.3	69.0	-0.01
구례군	68.3	68.4	68.1	69.1	68.6	69.9	68.7	0.05
고흥군	69.5	68.0	74.0	76.1	75.4	73.8	76.1	0.76
보성군	70.2	65.3	62.4	67.6	68.4	66.8	72.2	0.23
화순군	64.3	56.0	60.8	60.9	62.9	62.2	63.0	-0.17
장흥군	68.4	65.2	65.6	66.6	65.2	67.8	69.8	0.17
강진군	68.8	64.0	65.1	69.6	68.9	68.9	68.7	-0.01
해남군	73.4	73.8	73.3	74.5	72.4	73.5	74.4	0.11
영암군	71.4	61.9	63.0	66.8	66.8	63.0	67.3	-0.49
무안군	63.2	62.3	61.3	65.9	63.7	61.1	60.3	-0.39
함평군	70.2	67.4	64.8	68.9	67.7	68.6	68.4	-0.22
영광군	65.6	65.4	64.6	67.9	66.0	68.6	69.2	0.45
장성군	72.4	63.9	64.4	66.6	65.6	65.3	67.2	-0.62
완도군	69.6	71.3	67.1	69.4	70.4	70.9	68.6	-0.12
진도군	73.5	73.0	71.9	73.0	72.6	68.8	71.6	-0.22
신안군	76.5	73.2	74.1	77.4	77.1	79.7	77.3	0.0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3) 사회적 요인

① 전입인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전입인구 증가율은 -1.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순천시로 42,742명, 가장 적은 시는 광양시로 17,189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무안군으로 17,995명, 가장 적은 군은 곡성군으로 2,599명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시 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연평균 2.69%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순천시 0.50%, 여주시 -0.62%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진도군 1.84%, 담양군 -0.82%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진도군을 제외한 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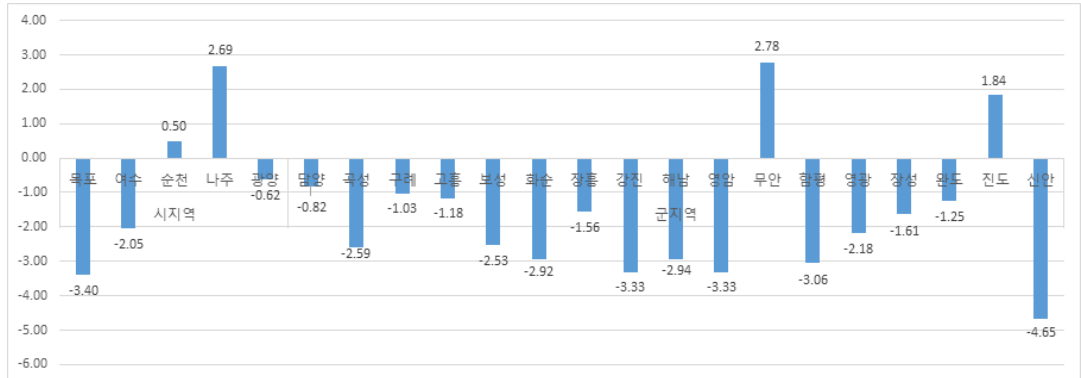
② 전출인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전출인구 증가율은 -1.3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목포시로 40,621명,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16,879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무안군으로 12,658명, 가장 적은 군은 진도군으로 3,064명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시 지역의 경우 광양시가 연평균 2.33%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주시 0.69%, 순천시 -0.48%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2.06%로 가장 높았으며, 구례군 -0.32%, 장흥군 -1.4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을 제외한 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표 4-12> 지역별 전입인구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53,572	45,587	40,553	42,002	37,368	33,446	35,366	-3.40
여수시	48,923	44,396	37,349	44,052	36,031	31,725	38,167	-2.05
순천시	40,269	42,253	39,010	41,766	37,760	37,475	42,742	0.50
나주시	13,172	12,358	11,393	17,548	21,938	20,981	18,111	2.69
광양시	18,517	17,587	17,525	18,167	19,376	19,421	17,189	-0.62
담양군	6,180	6,683	6,053	5,612	5,448	5,633	5,596	-0.82
곡성군	3,560	3,460	2,936	3,197	2,942	2,983	2,599	-2.59
구례군	3,276	3,052	2,798	3,341	3,336	3,489	2,893	-1.03
고흥군	6,490	6,505	5,852	5,664	5,071	5,606	5,627	-1.18
보성군	4,843	4,622	3,876	4,560	3,802	3,848	3,562	-2.53
화순군	9,195	8,273	7,179	7,311	6,382	6,518	6,441	-2.92
장흥군	3,992	5,018	5,470	6,584	3,979	3,951	3,307	-1.56
강진군	4,899	5,653	4,773	4,972	3,270	3,233	3,262	-3.33
해남군	7,765	7,824	7,419	6,811	5,963	5,475	5,431	-2.94
영암군	8,666	8,281	6,937	7,292	6,167	5,592	5,772	-3.33
무안군	12,942	11,782	9,890	12,972	10,058	9,407	17,995	2.78
함평군	4,082	3,712	3,415	3,321	3,258	3,370	2,811	-3.06
영광군	6,418	6,683	7,197	6,154	5,283	5,299	4,926	-2.18
장성군	6,925	7,519	6,777	6,452	5,692	6,113	5,698	-1.61
완도군	4,715	4,915	4,648	4,275	4,048	4,070	4,055	-1.25
진도군	3,091	3,304	2,893	3,008	2,676	2,630	3,846	1.84
신안군	6,414	6,133	5,083	5,217	4,284	4,119	3,620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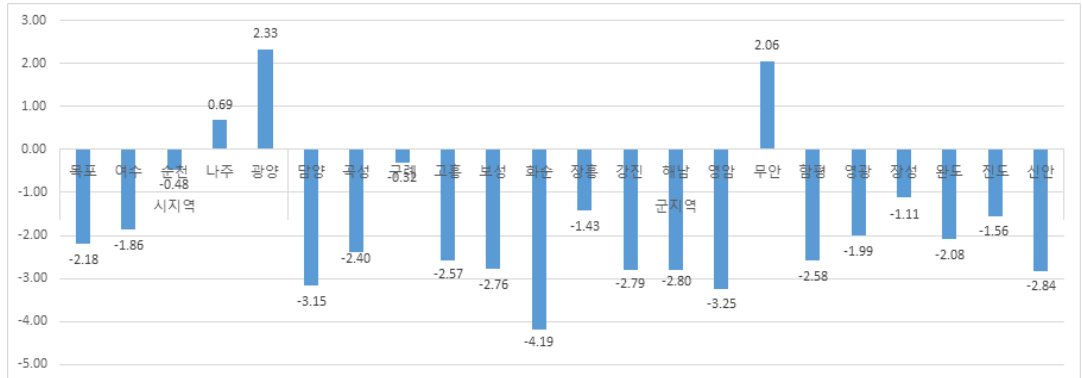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표 4-13> 지역별 전출인구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52,918	47,851	41,556	44,470	38,373	35,300	40,621	-2.18
여수시	50,352	47,491	38,450	45,020	37,682	34,591	40,171	-1.86
순천시	42,433	41,479	38,071	40,784	38,409	37,502	40,029	-0.48
나주시	15,548	13,635	11,215	14,398	15,770	17,235	16,879	0.69
광양시	16,996	17,335	18,601	18,696	18,057	19,179	22,419	2.33
담양군	8,138	6,414	6,167	5,695	5,073	5,734	5,543	-3.15
곡성군	4,116	3,674	3,161	3,251	3,000	3,205	3,077	-2.40
구례군	3,616	3,245	2,969	3,071	3,042	3,651	3,481	-0.32
고흥군	7,967	7,606	6,141	5,884	5,256	5,749	5,827	-2.57
보성군	5,604	5,202	4,495	4,828	4,327	4,333	4,003	-2.76
화순군	10,473	8,961	7,713	8,200	6,631	6,929	6,267	-4.19
장흥군	4,505	4,810	5,057	6,137	6,471	4,445	3,791	-1.43
강진군	5,095	5,432	6,047	5,063	4,099	3,733	3,627	-2.79
해남군	9,032	9,632	7,523	7,436	6,960	6,778	6,422	-2.80
영암군	9,470	8,831	7,228	7,583	7,274	6,281	6,370	-3.25
무안군	9,912	10,276	9,826	10,533	10,181	10,023	12,658	2.06
함평군	4,467	4,276	3,533	3,672	3,485	3,954	3,264	-2.58
영광군	7,121	6,908	6,722	6,804	5,716	5,730	5,593	-1.99
장성군	7,674	7,599	6,662	6,411	5,883	6,251	6,715	-1.11
완도군	5,700	5,202	4,620	4,533	4,231	4,400	4,427	-2.08
진도군	3,698	3,575	3,039	3,047	2,798	2,853	3,064	-1.56
신안군	6,389	6,227	5,284	5,358	4,619	4,558	4,522	-2.84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다. 지역발전 현황 분석

(1) 경제발전 : 지역내총생산(GRDP)

전라남도의 「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에 기초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라남도 전체 연평균 GRDP 증가율은 3.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기준 GRDP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26조 4,081억원,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4조 3,811억원이다. 군 지역은 무안군으로 2조 9,973억원, 가장 적은 군은 구례군으로 5,536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나주시가 연평균 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순천시 4.34%, 여수시 3.87%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무안군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도군(5.89%), 장흥군(4.96%) 순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시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이 연평균 26.25%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4.31%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여수시는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이 12.95%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업 0.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이 19.4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광업이 -5.98% 감소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이 58.1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임업/어업이 -0.39% 증가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사업서비스업이 8.9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광업이 -3.67% 증가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38.82%, 곡성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0.25%, 구례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0.05%, 고흥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5.68%, 보성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1.38%, 화순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33.99%, 장흥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2.12%, 강진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0.76%, 해남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55.73%, 영암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4.72%, 무안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38.44%, 함평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5.14%, 영광군은 숙박/음식점업 25.20%, 장성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0.89%, 완도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37.71%, 진도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31.79%, 신안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35.84%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표 4-14> 지역별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 추이(2008년~2018년)
 (단위 : %)

구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지역내총생산	2.11	3.87	4.34	7.30	0.81	3.99	0.48	4.47	3.02	1.89	2.83
순생산물세	-0.52	3.47	-0.27	8.27	-4.38	1.20	-2.77	4.91	2.56	-3.37	-0.29
총부가가치	2.25	4.00	4.72	7.21	1.49	4.18	0.78	4.45	3.04	2.12	3.02
농업/임업/어업	3.27	3.76	3.50	-0.39	0.19	3.24	1.80	-1.01	3.47	5.87	-0.07
광업	14.26	11.33	-5.98	5.75	-3.67	15.58	0.37	-	8.18	-	0.60
제조업	-4.31	3.60	8.32	3.52	1.28	2.77	-3.58	5.21	2.44	-2.35	3.84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26.25	12.95	19.41	58.18	8.11	38.82	40.25	40.05	45.68	41.38	33.99
건설업	0.76	3.81	4.56	12.42	-1.74	0.36	3.48	2.89	-1.95	-6.86	0.54
도매/소매업	1.62	1.31	3.40	6.34	5.02	8.52	7.49	8.46	6.22	5.09	3.11
운수/창고업	-0.32	4.14	0.61	-0.12	-2.53	7.99	0.46	17.65	-8.32	1.49	-4.97
숙박/음식점업	2.06	8.10	4.54	9.82	3.05	7.12	7.57	0.15	4.76	1.68	3.14
정보통신업	1.26	0.08	-0.18	24.80	6.24	-0.07	-2.79	-2.43	-3.14	-3.20	-1.55
금융/보험업	0.32	4.56	3.21	10.89	5.04	4.97	4.14	4.60	6.24	4.18	2.59
부동산업	5.47	5.81	-1.79	11.19	6.34	1.52	-0.21	-0.93	0.13	-1.37	0.53
사업서비스업	-1.35	9.99	5.89	17.20	8.93	9.06	2.47	26.79	-0.92	-3.41	6.8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6.46	5.00	6.32	7.16	6.04	6.51	6.21	6.28	5.95	6.34	6.85
교육 서비스업	2.60	3.06	3.55	6.11	2.80	1.86	3.71	1.42	1.37	1.41	1.88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5.01	6.58	9.09	6.15	7.80	7.94	6.38	8.35	4.60	3.38	5.33
문화/기타서비스업	2.09	6.72	3.35	10.09	2.62	5.40	9.31	8.13	3.68	-0.09	1.58

구분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지역내총생산	4.95	4.04	4.48	-0.25	6.97	4.54	3.42	4.51	4.56	5.89	3.75
순생산물세	7.99	6.34	1.67	-8.31	4.85	4.39	9.09	1.80	6.44	4.17	4.22
총부가가치	4.81	3.94	4.63	0.61	7.05	4.54	3.05	4.69	4.49	5.96	3.73
농업/임업/어업	2.09	-0.39	5.08	1.94	5.08	3.82	4.16	-0.15	6.46	9.67	8.45
광업	4.97	-15.0	-2.67	5.87	-14.8		-11.7	-7.22	-1.50	-0.12	-15.0
제조업	9.55	4.23	6.21	-2.22	0.55	7.00	2.21	5.24	3.58	5.34	4.65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	42.12	40.76	55.73	44.72	38.44	45.14	0.51	40.89	37.71	31.79	35.84
건설업	5.33	8.28	5.00	-5.49	5.32	5.28	8.41	2.17	6.26	6.78	1.11
도매/소매업	5.52	7.91	3.37	8.99	9.68	7.12	6.02	2.80	9.72	8.28	3.65
운수/창고업	-4.87	-7.15	-5.85	10.75	-6.21	-1.12	-9.83	4.00	-9.94	-7.20	-6.48
숙박/음식점업	2.19	2.88	0.25	5.21	12.85	-3.43	25.20	4.18	1.18	5.66	0.39
정보통신업	-2.55	-3.41	-2.48	-0.69	0.41	-1.58	-1.62	-2.19	-0.74	-2.46	-3.46
금융/보험업	5.37	4.04	2.48	6.81	9.59	3.58	-0.64	2.70	9.62	3.79	4.59
부동산업	1.91	0.85	0.60	1.79	9.30	-2.75	4.95	6.98	1.71	4.53	-0.59
사업서비스업	13.72	20.10	9.10	19.40	19.91	16.03	11.79	14.20	-3.35	4.96	22.0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7.26	6.43	7.25	6.33	7.94	5.99	6.45	5.39	5.75	6.09	6.00
교육 서비스업	2.04	0.74	1.03	3.98	7.29	2.11	2.03	3.79	2.79	2.25	2.73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4.62	8.43	5.93	3.86	11.86	3.40	4.92	5.16	4.95	5.88	7.65
문화/기타서비스업	8.48	7.16	7.44	10.16	14.09	11.42	9.03	12.84	6.02	0.31	6.2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2) 사회발전

① 공교육기관 수

전라남도의 「전라남도기본통계」에 기초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공교육기관 수(학급 수) 증가율은 -0.8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공교육기관 수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순천시로 1,473개,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665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무안군으로 446개, 가장 적은 군은 곡성군으로 145개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연평균 2.7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양시 -0.72%, 목포시 -0.72%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무안군이 2.89%로 가장 높았으며, 함평군 -0.19%, 장성군 -0.39% 순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② 의료기관 수

전라남도의 「전라남도기본통계」에 근거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의료기관 수(병상 수) 증가율은 4.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목포시로 7,191개, 가장 적은 시는 광양시로 1,516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화순으로 4,279개, 가장 적은 군은 완도군(122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 광양시가 연평균 10.63%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여수시 7.86%, 순천시 4.42%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신안군이 15.78%로 가장 높았으며, 무안군(8.59%), 곡성군(7.88%) 순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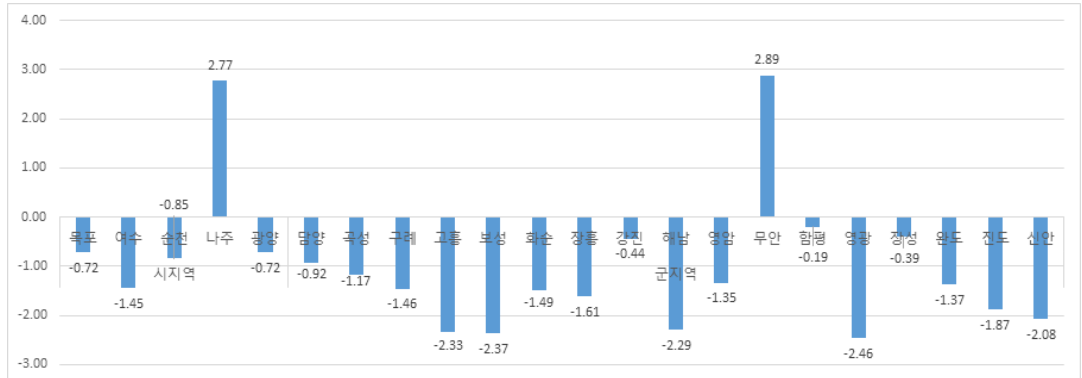
③ 문화시설 수

전라남도의 「전라남도기본통계」에 근거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문화시설 수 증가율은 1.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문화시설 수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목포시로 47곳이고, 가장 적은 시는 광양시(6 곳)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보성군이 24곳으로 가장 많으며, 신안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증가율을 보면, 시 지역의 경우 순천시가 연평균 14.88%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목포시 14.11%, 여수시 7.90%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보성군이 15.33%로 가장 높았으며, 완도군(4.27%), 장흥군(3.00%) 순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5> 지역별 공공교육기관(학급 수) 추이(2008년~2020년)

(단위 : 개,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1,251	1,245	1,197	1,155	1,155	1,264	1,147.0	-0.72
여수시	1,599	1,509	1,432	1,394	1,353	1,415	1,342.0	-1.45
순천시	1,631	1,545	1,512	1,472	1,468	1,488	1,473.0	-0.85
나주시	479	433	393	418	495	602	665.0	2.77
광양시	947	909	872	861	863	879	868.0	-0.72
담양군	237	224	217	205	203	208	212.0	-0.92
곡성군	167	149	152	150	147	144	145.0	-1.17
구례군	179	164	165	159	163	156	150.0	-1.46
고흥군	402	353	316	325	313	310	303.0	-2.33
보성군	288	267	255	240	234	233	216.0	-2.37
화순군	413	399	389	380	363	356	345.0	-1.49
장흥군	283	266	254	252	242	236	233.0	-1.61
강진군	231	214	212	217	219	218	219.0	-0.44
해남군	486	455	401	407	385	375	368.0	-2.29
영암군	360	328	319	328	316	318	306.0	-1.35
무안군	317	341	358	408	422	440	446.0	2.89
함평군	173	155	147	159	154	171	169.0	-0.19
영광군	364	334	328	301	290	293	270.0	-2.46
장성군	262	255	246	252	249	254	250.0	-0.39
완도군	373	340	319	323	313	311	316.0	-1.37
진도군	202	179	173	163	158	180	161.0	-1.87
신안군	292	266	255	248	227	228	227.0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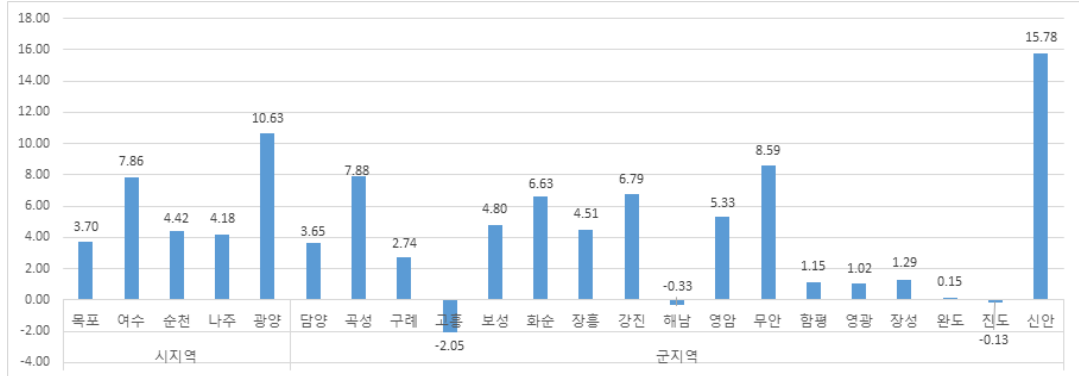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표 4-16> 지역별 의료기관(병상 수) 추이(2008년~2019년)

(단위 : 개,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4,824	5,426	6,066	7,587	7,656	7,023	7,191	3.70
여수시	2,254	3,014	3,662	3,886	4,416	4,899	5,181	7.86
순천시	3,664	3,466	4,463	5,273	6,114	6,393	5,896	4.42
나주시	2,695	2,763	3,687	2,767	4,007	4,040	4,229	4.18
광양시	499	545	721	872	1,106	1,182	1,516	10.63
담양군	1,098	1,255	1,538	1,586	1,634	1,545	1,628	3.65
곡성군	152	234	304	402	401	351	350	7.88
구례군	473	497	616	649	654	660	637	2.74
고흥군	1,720	1,712	1,382	1,406	1,446	1,386	1,369	-2.05
보성군	784	790	989	1,013	1,415	1,366	1,313	4.80
화순군	2,111	2,755	3,520	3,701	4,249	4,452	4,279	6.63
장흥군	336	336	336	348	348	548	546	4.51
강진군	215	215	375	378	575	455	443	6.79
해남군	1,616	1,711	1,660	1,641	1,592	1,582	1,559	-0.33
영암군	548	844	900	1,103	1,078	1,037	970	5.33
무안군	529	566	628	685	914	1,217	1,309	8.59
함평군	657	657	177	303	269	857	745	1.15
영광군	1,089	1,052	1,102	1,160	1,188	1,194	1,218	1.02
장성군	596	1,042	1,066	765	935	678	686	1.29
완도군	120	120	145	135	120	120	122	0.15
진도군	204	204	194	190	210	220	201	-0.13
신안군	73	181	181	220	226	313	366	1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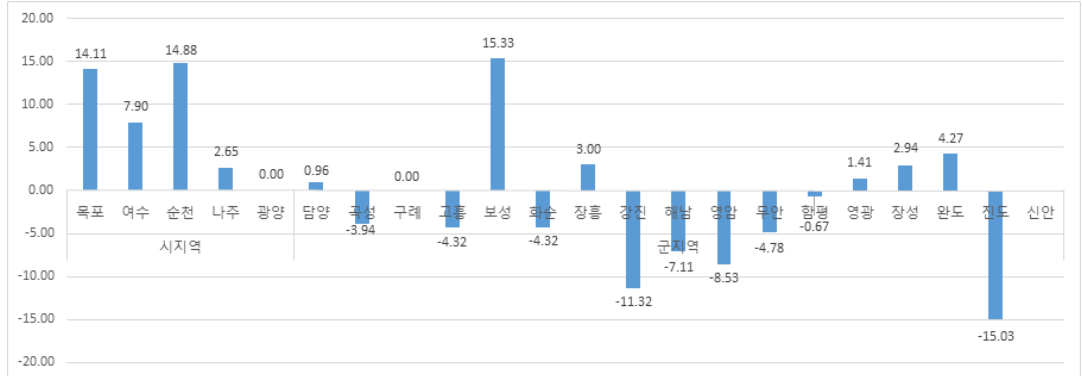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표 4-17> 지역별 문화 공간 추이(2008년~2019년)

(단위 : 개,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목포시	11	38	30	33	39	38	47	14.11
여수시	13	12	40	36	38	44	30	7.90
순천시	5	20	19	31	32	32	23	14.88
나주시	18	22	17	18	18	23	24	2.65
광양시	6	12	6	8	11	24	6	0.00
담양군	9	10	15	8	10	10	10	0.96
곡성군	14	18	16	9	10	9	9	-3.94
구례군	9	10	3	16	17	10	9	0.00
고흥군	13	5	7	4	9	12	8	-4.32
보성군	5	7	7	8	7	5	24	15.33
화순군	13	14	16	20	20	20	8	-4.32
장흥군	13	12	13	13	18	8	18	3.00
강진군	15	12	16	5	4	18	4	-11.32
해남군	9	9	7	8	9	9	4	-7.11
영암군	16	17	9	18	19	18	6	-8.53
무안군	12	12	14	4	7	7	7	-4.78
함평군	14	14	6	2	6	2	13	-0.67
영광군	6	2	3	13	13	14	7	1.41
장성군	8	8	9	9	9	5	11	2.94
완도군	12	8	3	4	5	7	19	4.27
진도군	24	27	27	27	26	30	4	-15.03
신안군	10	2	2	3	2	3	0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2.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가. 분석방법

최종으로 채택된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지역현황 통계자료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들은 STATA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가 지역발전(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의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횡단면자료의 이분산성과 시계열자료의 계열상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22개 시·군의 횡단면단위를 구성하여 각 시·군별 11개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통합한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패널자료 분석은 횡단면 및 시계열에 걸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가 동질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며,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횡단면 자료의 시계열적인 오차항의 분산과 공분산 형태가 동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차항의 특성에 대해 특정한 가정에 기초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³⁾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⁴⁾을 사용하였다. 또한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후에 자기상관 진단을 위해 Breusch-Pagan의 LM 검정, 자기상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간 패널 모형 추정식 선택을 위해서 Hausman 검정도 실시했다.

3) 고정효과모형은 횡단면 단위의 효과가 절편에 반영된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횡단면 효과를 나타내는 가변수를 활용하며, 분석하고자하는 자료가 특정한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란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분석대상 간에 구조적이고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 부분으로 인해 모형의 추정치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하태정 등, 2010: 16).

4) 확률효과모형은 횡단면 단위의 효과가 무작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변수를 포함하는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횡단면 단위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확률효과모형은 편향되고 일관성 없는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조기선, 2007: 89).

나.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본 연구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한 인구구조 영향요인 및 인구구조 양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모형을 검정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진단을 실시하였다. 최초모형의 진단결과 주민등록인구, 사업체 수, 취업자 수, 전출인구 등 독립변수는 인구구조 영향요인 간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을 제외하였다. 최종모형에서는 인구구조 영향요인으로 경제 영향요인 중 종사자 수⁵⁾, 지역정책 영향요인으로 예산규모, 공간 영향요인으로 공공기관 수, 건축허가면적, 인구구조 양태로 자연적 요인 중 고령인구비율, 합계 출산율, 경제적 요인으로 고용율, 사회적 요인 중 전입인구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4-18> VIF 진단 결과

구분			최초모형		수정모형	
			공차	VIF	공차	VIF
인구구조 영향요인	인구사회 영향요인	주민등록인구	.005	204.519		
		경제 영향요인	사업체수	.014	71.971	
	종사자수		.042	23.923	.099	10.057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	.219	4.575	.244	4.094
	공간 영향요인	공공기관수	.155	6.458	.195	5.131
		건축허가면적	.424	2.361	.516	1.940
인구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고령인구비율	.161	6.192	.175	5.702
		합계 출산율	.712	1.404	.729	1.372
	경제적 요인	취업자수	.005	190.832		
		고용률	.238	4.196	.339	2.953
	사회적 요인	전입인구	.009	111.790	.106	9.453
		전출인구	.007	146.667		

5) 종사자 수의 경우 수정모형에서 VIF값이 10.057로 10이상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 있는 변수이지만,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적 요인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고,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중요변수로 제시되고 있어 수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로 채택했다.

다. 패널 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검정

(1) 경제발전 영향요인 검정

인구구조 영향요인(경제·지역정책·공간)과 인구구조 양태(자연적·경제적·사회적 요인) 등 2개의 요인별 8개의 독립변수가 경제발전(GRD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2개 시·군의 횡단면적 자료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시계열 자료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G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의 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패널 모형 추정식 선택을 검정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05$ 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간 자기상관성 검정을 위해서 Durbin 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2.159482로 나타났는데, 검정값이 2에 근접하고 있어서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을 토대로 살펴보면 Wald $\chi^2(p)$ 는 947.56(0.000)로 나타났으며,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변수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 영향요인(종사자수)은 $t=13.09(p=0.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정책 영향요인(예산규모)은 $t=-3.17(p=0.0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 영향요인 중 공공기관 수는 $t=8.22(p=0.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양태 중 사회적 요인(전입인구)은 $t=-7.28(p=0.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양(+) 영향요인으로는 사업체 종사자 수, 음(-)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와 전입인구로 나타났다. 지역경제(GRD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를 대변하는 지표가 사업체 종사자 수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이백훈, 1980; 오정일 외, 2007; 이인희, 2008)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반면, 예산규모와 전입인구의 증가는 지역경제(GR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규모는 기초 자치단체 예산활동 전 분야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비중이 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보다는 사회복지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경향성이 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된다.

<표 4-19> GRDP 모형검정 결과

구분			GLS[t(p)]	고정효과[t(p)]	확률효과[t(p)]
인구 구조 영향 요인	경제 영향요인	종사자수	13.34(0.000)	13.03(0.000)	13.09(0.000)***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	-3.23(0.001)	-3.27(0.001)	-3.17(0.002)***
	공간 영향요인	공공기관수	8.38(0.000)	7.58(0.000)	8.22(0.000)***
		건축허가면적	0.53(0.598)	0.38(0.703)	0.52(0.605)
인구 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고령인구비율	1.64(0.102)	1.29(0.197)	1.61(0.108)
		합계 출산율	0.48(0.632)	0.23(0.817)	0.47(0.639)
	경제적 요인	고용률	0.16(0.869)	0.23(0.820)	0.16(0.872)
	사회적 요인	전입인구	-7.42(0.000)	-6.97(0.000)	-7.28(0.000)***
_cons			-2.24(0.025)	-1.94(0.053)	-2.20(0.028)**
Wald $\chi^2(p)$			999.63(0.000)	-	947.5(0.000)***
F(p)			-	106.82(0.000)	-
Hausman(p)				3.91(0.418)	
Durbin-Watson				2.15948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하상근(2005)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상근은 경상남도 기초 자치단체 간의 인구이동은 지역인구, 공무원 수, 도로포장률, 그리고 사업투자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방재정의 규모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요인이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의 규모와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입인구의 증가가 지역경제(GRDP)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입인구의 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전입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입하는 인구는 직장, 교육, 환경 등의 필요에 의해서 전입하게 된다.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직장 또는 일자리의 경우를 제외한 교육, 환경 등의 이유로 전입할 경우 지역경제와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를 위한 투자유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방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도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사회발전 영향요인 검정

인구구조 영향요인(경제, 지역정책, 공간)과 인구구조 양태(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2개의 요인별 8개의 독립변수가 사회발전(공교육기관 수, 의료기관 수, 문화시설 수의 Z-score 합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2개 시·군의 횡단면적 자료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시계열 자료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G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의 모형검정을 실시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의 활용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05$ 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자료간 자기상관성 검정을 위해서 Durbin 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2.0478748로 나타났는데, 검정값이 2에 근접하고 있어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확률효과모형을 토대로 살펴보면 Wald $\chi^2(p)$ 는 20.00(0.010)로 나타나,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4-20> 사회발전 모형검정 결과

구분			GLS[t(p)]	고정효과[t(p)]	확률효과[t(p)]
인구 구조 영향 요인	경제 영향요인	종사자수	0.79(0.427)	1.49(0.138)	1.49(0.135)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	1.34(0.180)	1.71(0.088)	1.72(0.085)*
	공간 영향요인	공공기관수	-0.05(0.964)	-0.91(0.362)	-0.91(0.364)
		건축허가면적	-1.15(0.251)	0.63(0.527)	0.58(0.563)
인구 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고령인구비율	-0.22(0.823)	1.05(0.297)	1.03(0.301)
		합계 출산율	-0.74(0.458)	-0.92(0.357)	-0.92(0.356)
	경제적 요인	고용률	-1.10(0.269)	-1.04(0.301)	-1.06(0.291)
	사회적 요인	전입인구	-1.67(0.094)	-1.32(0.190)	-1.32(0.187)
_cons			1.03(0.302)	0.68(0.500)	0.62(0.537)
Wald $\chi^2(p)$			7.43(0.491)		20.00(0.010)
F(p)				2.51(0.016)	
Hausman(p)				3.18(0.528)	
Durbin-Watson				2.0478748	

주: * $p < 0.1$, ** $p < 0.05$, *** $p < 0.01$ ***

각 변수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지역정책 영향요인

(예산규모)은 $t=1.72(p=0.08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양(+)의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활동 전 분야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비중이 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에 보다 앞장서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예산규모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방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지역사회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정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형성 수준이 사회발전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은 외형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활동을 통해 향유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향유하기 위한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는 지역의 예산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제2절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1. 기초 통계분석

가.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개요

공무원의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검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역에서 인구문제와 지역발전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로 지역별로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시·군별로 할당하여 표출하였다. 설문기간은 2021년 6월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30일간 조사하였으며,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13부가 회수되었으나, 설문의 신뢰성에 의문이 되는 15부를 제외하고 498부를 분석에 활용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총 498부의 설문지를 기초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에 이용된 통계기법은 t -test, 분산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은 설문지의 구성개념을 대표하는 개별항목 내 설문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구성개념을 대표하는 변수를 도출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된다.

둘째, 신뢰도분석은 설문문항의 구성개념에 사용된 측정문항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측정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측정하였다.

셋째, 각 요인별로 제시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318명(64.1%), 여성 178명(35.9%)이다. 연령은 20대 54명(10.9%), 30대 271명(54.5%), 40대 130명(26.2%), 50대 이상 42명(8.5%)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38명(7.8%), 대졸 426명(87.7%), 석·박사 22명(4.5%)로 나타났다(< 4-21> 참조).

<표 4-2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18	64.1	지역	목포시	39	7.8
	여성	178	35.9		여수시	26	5.2
	합계(무응답:2)	496	100.0		순천시	28	5.6
연령	20대	54	10.9		나주시	31	6.2
	30대	271	54.5		광양시	19	3.8
	40대	130	26.2		담양군	15	3.0
	50대 이상	42	8.5		곡성군	20	4.0
	합계(무응답:1)	497	100.0		구례군	22	4.4
최종학력	고졸이하	38	7.8		고흥군	17	3.4
	대졸	426	87.7		보성군	18	3.6
	석사	21	4.3		화순군	21	4.2
	박사	1	.2		장흥군	16	3.2
	합계(무응답: 12)	486	100.0		강진군	15	3.0
근무기간	1년 미만	23	4.6		해남군	22	4.4
	1년이상~5년미만	206	41.5		영암군	25	5.0
	5년이상~10년미만	130	26.2		무안군	40	8.0
	10년이상~20년미만	91	18.3		함평군	19	3.8
	20년 이상	46	9.3		영광군	16	3.2
	합계(무응답: 2)	496	100.0		장성군	19	3.8
직급	5급	2	.4		완도군	30	6.0
	6급	8	1.6		진도군	20	4.0
	7급	113	22.8	신안군	20	4.0	
	8급	152	30.6	합계(무응답:0)	498	100.0	
	9급	221	44.6	시 지역	143	28.7	
	합계(무응답:2)	496	100.0	군 지역(5만이상)	141	28.3	
시·군 구분	시 지역	143	28.7	군 지역(5만미만)	214	43.0	
	군 지역	355	71.3	합계(무응답: 0)	498	100.0	
	합계(무응답: 0)	498	100.0				

나. 설문응답 기초분석

(1) 거주 지역(시·군)의 인구·경제적 상황

거주 지역의 인구구조 영향요인으로 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 등 3개의 요인에 사회 영향요인을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경제 영향요인 중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이 부진하다’는 응답은 3.30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시 지역 공무원은 2.50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3.23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3.87점으로 인구규모가 적어질수록 지역 내 산업활동이 부진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30점, 여성은 3.29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3.35점, ‘산업구조가 낙후해 있다’는 3.36점, ‘지역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3.20점,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보유자원이 부족하다’는 3.24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설문문항의 경향성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이 경제 영향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책 영향요인 중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하다’는 응답은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시 지역 공무원은 2.65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3.43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4.07점으로 인구규모가 적을수록 지역 내 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 3.51점, 여성 3.43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책 추진 여력이 미약하다’는 3.15점, ‘심한 규제로 발전여력이 낮다’는 3.04점, ‘중앙정부/전라남도 등 지원이 부족하다’는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설문문항의 경향성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이 지역정책 영향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영향요인 중 ‘근린·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3.41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 공무원은 2.73,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3.55,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3.77로 인구규모가 적어질수록 지역 내 근린·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3.42, 여성 3.38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경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3.34점, ‘청소·쓰레기처리가 좋지 않다’는 3.35점, ‘금융기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3.16점,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3.30점, ‘주민편의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3.29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설

문문항의 경향성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이 공간 영향요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거주 지역의 인구·경제적 상황

	구분	합계	지역유형별			성별	
			시 지역	군 지역		남성	여성
				5만 ↑	5만 ↓		
경제 영향 요인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이 부진하다.	3.30	2.50	3.23	3.87	3.30	3.29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3.35	2.55	3.29	3.93	3.31	3.43
	산업구조가 낙후해 있다.	3.36	2.52	3.33	3.95	3.41	3.27
	지역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3.20	2.49	3.31	3.62	3.26	3.11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보유자원이 부족하다.	3.24	2.66	3.36	3.54	3.30	3.12
지역 정책 영향 요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하다.	3.48	2.65	3.43	4.07	3.51	3.43
	공공정책 추진 여력이 미약하다.	3.15	2.51	3.14	3.59	3.19	3.07
	심한 규제로 발전여력이 낮다.	3.04	2.52	3.08	3.37	3.06	3.01
	중앙정부/전라남도 등 지원이 부족하다.	3.32	2.87	3.37	3.57	3.28	3.38
공간 영향 요인	근린·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3.41	2.73	3.55	3.77	3.42	3.38
	공원·조경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3.34	2.83	3.55	3.54	3.35	3.32
	청소·쓰레기처리가 좋지 않다.	3.35	2.90	3.57	3.50	3.38	3.29
	금융기관 이용이 불편하다.	3.16	2.18	3.45	3.61	3.17	3.14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3.30	2.18	3.46	3.93	3.32	3.26
	주민편의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	3.29	2.37	3.52	3.74	3.28	3.30
사회 영향 요인	공통의 기억을 가진 이웃이 많다.	3.52	3.11	3.61	3.75	3.53	3.51
	공통의 습관을 가진 이웃이 많다.	3.54	3.15	3.57	3.77	3.56	3.50
	공통의 전통을 가진 이웃이 많다.	3.53	3.21	3.46	3.79	3.55	3.50
	공통의 문화를 가진 이웃이 많다.	3.54	3.26	3.50	3.74	3.56	3.51
	이웃간 협력(협동)이 잘 된다.	3.83	3.49	3.82	4.07	3.88	3.75
	이웃간 단합(단결)이 잘 된다.	3.83	3.45	3.83	4.09	3.90	3.71

사회 영향요인 중 ‘공통의 기억을 가진 이웃이 많다’는 응답은 3.52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시 지역 공무원은 3.11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 3.61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 3.75점으로 인구규모가 적을수록 지역 내 공통의 기억을 가진 이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 3.53점, 여성 3.51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의 습관을 가진 이웃이 많다’는 3.54점, ‘공통의 전통을 가진 이웃이 많다’는 3.53점, ‘공통의 문화를 가진 이웃이 많다’는 3.54점, ‘이웃 간 협력(협동)이 잘 된다’는 3.83점, ‘이웃 간 단합(단결)이 잘 된다’는 3.83점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설문문항의 경향성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이 사회 영향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주 지역(시·군)의 인구구조 특성

자연적 요인 중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2.9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시 지역 공무원은 3.57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3.93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3.56점으로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 3.63점, 여성 3.43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3.29점,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3.54점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문항들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거주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구분		합계	지역유형별			성별	
			시 지역	군 지역		남성	여성
				5만 ↑	5만 ↓		
자연적 요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99	3.57	3.93	3.56	3.63	3.43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3.29	3.79	4.10	3.78	3.86	3.63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3.54	4.13	4.40	4.08	4.15	3.93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3.18	3.77	4.03	3.71	3.80	3.54
	유소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3.19	3.68	3.93	3.65	3.71	3.54
사회적 요인	떠나려는 인구가 많다.	2.91	3.37	3.65	3.36	3.42	3.25
	이주해오려는 인구가 많다.	3.11	2.89	2.50	2.79	2.76	2.83

경제적 요인 중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3.1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시 지역 공무원은 3.77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4.03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3.71점으로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 3.80점, 여성 3.54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소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앞선 질문과 유사

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중 ‘떠나려는 인구가 많다’는 응답은 2.91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 공무원은 3.37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3.65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3.36점으로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 3.42점, 여성 3.25점으로 남성 공무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주해오려는 인구가 많다’는 3.11점으로 나타났으며,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거주 지역(시·군)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수준

경제발전 중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2.62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 공무원은 3.27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3.45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3.16점으로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3.18점, 여성 3.13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거주 지역(시·군)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수준

구분	합계	지역유형별		성별			
		시 지역	군 지역		남성	여성	
			5만 ↑	5만 ↓			
경제발전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2.62	3.27	3.45	3.16	3.18	3.13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58	3.22	3.29	3.07	3.06	3.07
	상업시설 폐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71	3.19	3.28	3.09	3.09	3.09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2.15	2.79	2.95	2.68	2.78	2.48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2.59	3.04	3.22	2.99	3.00	2.97
사회발전	공교육 수준이 높다.	3.22	3.10	2.84	3.02	2.97	3.11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	3.56	2.90	2.30	2.83	2.81	2.88
	문화서비스 수준이 높다.	3.51	2.97	2.45	2.90	2.91	2.88
	사람간 교류가 많다.	3.52	3.36	3.28	3.37	3.39	3.33
	사람간 협력수준이 높다.	3.49	3.48	3.49	3.49	3.52	3.44
	삶의 질 수준이 높다.	3.53	3.29	3.12	3.29	3.34	3.20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2.58점, ‘상업시설 폐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2.71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2.15점,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2.59점으로

나타났으며,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발전 중 ‘공교육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22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시 지역 공무원은 3.10점,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은 2.84점, 5만 미만 군 지역 공무원은 3.02점으로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 2.97점, 여성 3.11점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3.56점, ‘문화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3.51점, ‘사람 간 교류가 많다’는 3.52점, ‘사람 간 협력수준이 높다’는 3.49점,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3.53점으로 나타났으며, 5만 이상 군 지역 공무원들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측정도구의 검증

가. 요인분석

(1) 독립변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구성된 지표들을 대상으로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⁶⁾을 실시하였다.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설명된 총분산에 기초해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25> 참조). 잠정적으로 구성한 측정지표는 7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9개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요인분석결과 공간 영향요인은 제4요인(정주 시설)과 제5요인(편의 시설)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사회적 영향요인은 제3요인(공통문화)과 제6요인(협동관계)으로 세분화되었다. 인구구조 양태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변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표 4-26> 참조).

6)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절차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 간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로 해를 구하는 직각회전방식에 의거하여 해를 개선하였다. 또한, 변수들이 여러 요인에 비슷한 요인 적재량을 보일 경우 변수들을 각 요인에 쏠리도록 하여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하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식인 VARIMAX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4-25>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에 대한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된 제곱 합 적재값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1	9.819	35.068	35.068	9.819	35.068	35.068
2	3.518	12.563	47.631	3.518	12.563	47.631
3	2.607	9.309	56.940	2.607	9.309	56.940
4	1.447	5.168	62.108	1.447	5.168	62.108
5	1.183	4.226	66.334	1.183	4.226	66.334
6	1.053	3.762	70.096	1.053	3.762	70.096
7	.839	2.997	73.093			

<표 4-26>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 결과

구분	성분					
	1	2	3	4	5	6
경제 영향요인_1	.772					
경제 영향요인_2	.790					
경제 영향요인_3	.812					
경제 영향요인_4	.770					
경제 영향요인_5	.680					
지역정책 영향요인_1	.688					
지역정책 영향요인_2	.743					
지역정책 영향요인_3	.635					
지역정책 영향요인_4	.578					
공간 영향요인_1					.650	
공간 영향요인_2					.834	
공간 영향요인_3					.811	
공간 영향요인_4				.769		
공간 영향요인_5				.778		
공간 영향요인_6				.734		
사회적 영향요인_1			.815			
사회적 영향요인_2			.855			
사회적 영향요인_3			.891			
사회적 영향요인_4			.882			
사회적 영향요인_5						.816
사회적 영향요인_6						.834
자연적 요인_1		.789				
자연적 요인_2		.815				
자연적 요인_3		.832				
경제적 요인_1		.798				
경제적 요인_2		.767				
사회적 요인_1		.626				
사회적 요인_2		-.401				

(2) 종속변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구성된 측정지표들을 대상으로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하였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구성하는 측정지표에 대한 검정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되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설명된 총분산에 기초하여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27> 참조). 잠정적으로 구성된 측정지표는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요인분석 실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요인분석결과 경제발전은 제1요인, 사회발전은 제2요인(공공서비스)과 제3요인(인간관계)으로 세분화되었다.

<표 4-27> 지방정부의 혁신적 활동에 대한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4.137	37.606	37.606	4.137	37.606	37.606
2	2.684	24.402	62.008	2.684	24.402	62.008
3	1.071	9.734	71.742	1.071	9.734	71.742
4	.622	5.657	77.399			

<표 4-28> 지방정부의 혁신적 활동에 대한 회전된 성분행렬 결과

구분	성분		
	1	2	3
경제발전_1	.864		
경제발전_2	.894		
경제발전_3	.855		
경제발전_4	.766		
경제발전_5	.795		
사회발전_1		.767	
사회발전_2		.883	
사회발전_3		.856	
사회발전_4			.826
사회발전_5			.870
사회발전_6			.426

나. 신뢰성 분석

(1) 독립변수의 신뢰성 분석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

가의 문제로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분석을 활용했다. 집중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르게 측정하여도 그 값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야하며, 판별타당성은 각기 다른 개념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내용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연구에 근거해 문항들을 정리하였으며,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으로는 재검사신뢰도, 동형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 문항내적합치도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적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Cronbach α 계수를 활용하여 9개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측정 지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표 4-29> 참조).

분석결과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 영향요인의 Cronbach α 값은 0.895, 지역정책 영향요인은 0.773,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은 0.801,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은 0.916, 사회 영향요인(공통문화)은 0.930, 사회 영향요인(협동관계)은 0.932로 문항간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 중 자연적 요인의 Cronbach α 값은 0.869, 경제적 요인은 0.825로 문항 간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모든 항목들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요인은 0.367로 낮게 나타나, 두 문항 중 하나를 제외했다. 그러나 두 문항의 관계가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인구유입과 유출의 합으로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문항은 상반된 응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라남도의 총 전입인구는 239,016명이며, 총 전출인구는 248,770명으로 전입과 전출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지역 내 인구이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사회적 요인으로 두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4-29>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Cronbach α	항목삭제 시 Cronbach α
인구구조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이 부진하다.	.895	.866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860
		산업구조가 낙후해 있다.		.855
		지역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872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보유자원이 부족하다.		.902
	지역정책 영향요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하다.	.773	.738
		공공정책 추진 여력이 미약하다.		.689
		심한 규제로 발전여력이 낮다.		.723
		중앙정부/전라남도 등 지원이 부족하다.		.726
	공간 영향요인 (정주시설)	근린·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801	.762
		공원·조경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702
		청소·쓰레기처리가 좋지 않다.		.720
	공간 영향요인 (편의시설)	금융기관 이용이 불편하다.	.916	.870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860
		주민편의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		.902
	사회 영향요인 (공통문화)	공통의 기억을 가진 이웃이 많다.	.930	.916
공통의 습관을 가진 이웃이 많다.		.906		
공통의 전통을 가진 이웃이 많다.		.901		
공통의 문화를 가진 이웃이 많다.		.909		
사회 영향요인 (협동관계)	이웃간 협력(협동)이 잘 된다.	.932	-	
	이웃간 단합(단결)이 잘 된다.		-	
인구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869	.806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771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867
	경제적 요인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825	-
		유소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사회적 요인	떠나려는 인구가 많다.	.367	-
이주해오려는 인구가 많다.		-		

(2) 종속변수의 신뢰성 분석

3개의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측정지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 α)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경제발전의 Cronbach α 값은 0.889, 사회발전1은 0.834, 사회발전2는 0.710로 문항 간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30> 참조).

<표 4-30> 종속변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Cronbach α	항목삭제시 Cronbach α
경제발전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889	.854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848
	상업시설 폐점 수가 증가하고 있다.		.860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891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872
사회발전	사회발전 (공공서비스)	.834	공교육 수준이 높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
			문화서비스 수준이 높다.
	사회발전 (인간관계)	.710	사람간 교류가 많다.
			사람간 협력수준이 높다.
			삶의 질 수준이 높다.

3. 집단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가.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1) 독립변수에 대한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영향요인(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과 인구구조 양태(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31> 독립변수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동일성 t-검정	
					t	유의확률
경제 영향요인	남성	318	3.32	.850	.863	.388
	여성	178	3.25	.876		
지역정책 영향요인	남성	318	3.26	.740	.532	.595
	여성	178	3.22	.749		
공간 영향요인 (정주시설)	남성	318	3.38	.809	.678	.498
	여성	178	3.33	.879		
공간 영향요인 (편의시설)	남성	317	3.26	1.014	.203	.839
	여성	178	3.24	1.130		
사회 영향요인 (공통문화)	남성	317	3.55	.703	.639	.523
	여성	178	3.50	.794		
사회 영향요인 (협동관계)	남성	317	3.89	.789	2.088	.037**
	여성	178	3.73	.880		
자연적 요인	남성	317	3.88	.695	3.221	.001***
	여성	178	3.66	.799		
경제적 요인	남성	317	3.76	.691	3.255	.001***
	여성	178	3.54	.744		
사회적 요인	남성	317	3.33	.729	1.690	.092*
	여성	178	3.21	.791		

주: * $p < 0.1$, ** $p < 0.05$, *** $p < 0.01$ ***

독립변수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 영향요인은 남성 3.32점, 여성 3.25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863$, $p=.388$). 지역정책 영향요인은 남성은 3.26점, 여성은 3.22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532$, $p=.595$).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은 남성은 3.38점, 여성은 3.33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678$, $p=.498$). 공간 영향요인(편의시설)에 대하여 남성은 3.26점, 여성은 3.24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203$, $p=.839$).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에서는 남성 3.55점, 여성 3.50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639$, $p=.523$). 그러나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에서는 남성 3.89점, 여성 3.73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2.088$, $p=.037$).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은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항목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웃 간 협력, 단합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구조 양태 중 자연적 요인에 대하여 남성은 3.88점, 여성은 3.66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3.221$, $p=.001$). 경제적 요인에서는 남성은 3.76점, 여성은 3.54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3.255$, $p=.001$). 사회적 요인은 남성은 3.33점, 여성은 3.21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1.690$, $p=.092$).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다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 대하여 남성은 3.02점, 여성은 2.95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1.141$, $p=.254$). 사회발전(공공서비스)은 남성 2.90점, 여성 2.95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654$, $p=.514$). 사회발전(인간관계)은 남성 3.42점, 여성 3.32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628$, $p=.104$).

<표 4-32> 종속변수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동일성 t-검정	
					t	유의확률
경제발전	남성	317	3.02	.670	1.141	.254
	여성	178	2.95	.729		
사회발전 (공공서비스)	남성	316	2.90	.862	-.654	.514
	여성	177	2.95	.964		
사회발전 (인간관계)	남성	316	3.42	.577	1.628	.104
	여성	177	3.32	.727		

주: * p < 0.1, ** p < 0.05, *** p < 0.01***

나. 지역에 따른 차이분석

(1) 독립변수에 대한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영향요인(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과 인구구조(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지역구분은 시 지역, 인구5만 이상 군 지역, 인구5만 미만 군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4-33> 지역 구분

구분	지역	
시 지역(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군 지역	5만 이상(6)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5만 미만(11)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독립변수에 대한 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 영향요인에 대해 시 지역은 2.54 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30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78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39.587, p=0.000). 지역정책 영향요인은 시 지역 2.64점, 군 지역(5만이상)은 3.26점, 군 지역(5만미만)은 3.65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16.605$, $p=.000$).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은 시 지역 2.83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55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60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0.917$, $p=.000$).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에서는 시 지역이 2.25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48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76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6.887$, $p=.000$).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에 대해서는 시 지역은 3.18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53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76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9.375$, $p=.000$). 사회적 영향요인(협동 관계)은 시 지역은 3.47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82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4.08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5.303$, $p=.000$).

인구구조 양태 중 자연적 요인에 대하여 시 지역은 3.27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83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4.14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77.599$, $p=.000$). 경제적 요인은 시 지역은 3.18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72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98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7.834$, $p=.000$). 사회적 요인은 시 지역은 2.90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24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58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0.925$, $p=.000$). 본 연구의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주재복 외, 2015; 최진호,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주재복 외(2015)는 인구 5만 미만의 군 지역은 보육 및 교육 인프라의 퇴보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여가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재정 지출 확대로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진호(2011)의 연구는 인구과소지역의 군 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인구구조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양태에 있어서도 인구 5만 이하의 군 지역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 역시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34> 독립변수에 대한 지역규모별 지역차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인구 구조 영향 요인	경제 영향요인	시 지역	143	2.54	.706	139.587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30	.746		
		군 지역(5만미만)	214	3.78	.633		
	지역정책 영향요인	시 지역	143	2.64	.615	116.605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26	.664		
		군 지역(5만미만)	214	3.65	.575		
	공간 영향요인 (정주시설)	시 지역	143	2.83	.939	50.917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55	.636		
		군 지역(5만미만)	214	3.60	.701		
	공간 영향요인 (편의시설)	시 지역	142	2.25	.911	146.887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48	.845		
		군 지역(5만미만)	214	3.76	.777		
	사회 영향요인 (공통문화)	시 지역	142	3.18	.712	29.375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53	.722		
		군 지역(5만미만)	214	3.76	.669		
사회 영향요인 (협동관계)	시 지역	142	3.47	.846	25.303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82	.754			
	군 지역(5만미만)	214	4.08	.766			
인구 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시 지역	142	3.27	.714	77.599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83	.739		
		군 지역(5만미만)	214	4.14	.523		
	경제적 요인	시 지역	142	3.18	.708	67.834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72	.648		
		군 지역(5만미만)	214	3.98	.573		
	사회적 요인	시 지역	142	2.90	.635	40.925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24	.738		
		군 지역(5만미만)	214	3.58	.710		

주: * p < 0.1, ** p < 0.05, *** p < 0.01***

(2) 독립변수에 대한 차이분석

본 연구는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규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경제발전에 대해 시 지역은 2.53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10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24점으로 차이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7.876, p=.000). 사회발전(공공서비스)은 시 지역 3.43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2.99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2.53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2.006, p=.000$). 사회발전(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시 지역 3.51점, 5만 이상 군 지역은 3.37점, 5만 미만 군 지역은 3.30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949, p=.007$).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이양재(1992)는 지역쇠퇴의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 부족, 제조업에 의한 고용창출 감소 등을, 신정철(2004)은 지역산업의 낙후, 일자리 부족, 송상열(2007)은 산업의 쇠퇴와 소득수준의 저하, 김광중(2010)은 산업구조 및 거시적 경제여건의 변화, 지역산업기반의 붕괴 및 이전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이렇듯 지역쇠퇴는 지역산업의 낙후성과 고용창출 감소, 산업의 쇠퇴, 산업기반의 붕괴 등 경제적 발전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들 지역의 공통적인 특성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시사하고 있다.

<표 4-35> 종속변수에 대한 지역규모별 지역차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경제발전	시 지역	142	2.53	.716	57.876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3.10	.586		
	군 지역(5만미만)	214	3.24	.579		
사회발전 (공공서비스)	시 지역	143	3.43	.869	52.006	.000***
	군 지역(5만이상)	141	2.99	.814		
	군 지역(5만미만)	211	2.53	.785		
사회발전 (인간관계)	시 지역	143	3.51	.756	4.949	.007***
	군 지역(5만이상)	141	3.37	.557		
	군 지역(5만미만)	211	3.30	.581		

주: * $p < 0.1$, ** $p < 0.05$, *** $p < 0.01$ ***

4.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가. 분석방법

인구구조 영향요인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했다. 선형 회귀모형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표 4-36>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정주시설)	공간 (편의시설)	사회 (공통문화)	사회 (협동관계)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 영향요인	1								
지역정책 영향요인	.763**	1							
공간 (정주시설)	.467**	.468**	1						
공간 (편의시설)	.527**	.500**	.480**	1					
사회 (공통문화)	.238**	.235**	.268**	.464**	1				
사회 (협동관계)	.188**	.196**	.231**	.373**	.589**	1			
자연적요인	.392**	.367**	.199**	.394**	.208**	.228**	1		
경제적요인	.407**	.395**	.234**	.432**	.245**	.262**	.763**	1	
사회적요인	.357**	.320**	.187**	.297**	.112*	.100*	.559**	.487**	1

주) *** $p < 0.001$, ** $p < 0.01$, * $p < 0.05$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정책 영향요인과 경제 영향요인(.763**), 경제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763**)의 상관성이 높았다. 또한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과 경제 영향요인(.527**),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과 지역정책 영향요인(.500**),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과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589**)의 상관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검정

(1) 경제발전 영향요인 검정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 보기 위한 연구모형 적합도 검토 결과 결정계수가 0.302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30.2% 설명하고 있으며, 분산분석 결과 $F=23.418$, $p=0.000$ 로 분석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37> 경제발전 영향요인 분석결과

모형		B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536		2.668	.008		
인구구조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113	.141	2.252	.025**	2.716	
	지역정책 영향요인	.059	.063	1.037	.300	2.589	
	공간 영향요인	정주시설	.153	.185	4.025	.000***	1.467
		편의시설	.001	.002	.036	.971	1.933
	사회적 영향요인	공통문화	.019	.020	.400	.689	1.717
		협동관계	.037	.044	.926	.355	1.590
인구구조	자연적요인	.165	.177	2.830	.005**	2.729	
	경제적요인	.114	.118	1.939	.053*	2.589	
	사회적요인	.037	.040	.863	.388	1.524	
R ² =0.302, F=23.418, p=.000							

주: * p < 0.1, ** p < 0.05, *** p < 0.01***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 파악을 위해 실시한 VIF 분석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3이하로 나타나, 해당 회귀식 추정에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경제 영향요인은 t값이 2.252(p=.025),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은 t값이 4.025(p=0.000), 자연적 요인은 t값이 2.830(p=.005), 경제적 요인은 t값이 1.939(p=.05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공공시설의 지역 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자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인구이동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Clark 외, 2004; Mayda, 2007; Maria 외, 2009; Borgy 외, 2011; Ito, 2011; Roy 외, 2011; Golgher 외, 2011; 하봉찬, 2016; 손연정, 2019)들을 살펴보면,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 내 인적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인구 유출지역은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출산 및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 증감을 없다는 가정에서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유입을 통해 진행되는데, 유입 인구의 수준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지역 내 인구구조 영향요인이 긍정적이며, 현재의 인구구조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인구유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사회발전(공공 서비스) 영향요인 검정

인구구조 영향요인(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정주시설), 공간 영향요인(편의시설),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 과 인구구조 양태(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가 지역사회발전(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 적합도 검토 결과 결정계수가 0.286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28.6% 설명하고 있다. 회귀식이 유의미한가를 측정하기 위한 분산분석결과 $F=21.545$, $p=0.000$ 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VIF 분석에서 독립변수 모두 3이하로 나타나, 해당 회귀식 추정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정책 영향요인은 t 값이 2.232($p=.026$),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은 t 값이 6.939($p=.000$),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은 t 값이 2.519($p=.012$),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은 t 값이 2.281($p=.023$), 사회적 요인은 t 값이 3.49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 공공시설의 지역 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발전(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진호, 2011; 이희연, 2013; 하상근, 2005)들은 인구수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지역은 교육, 의료,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도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4-38> 사회발전(공공서비스) 영향요인 분석결과

모형		B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5.060		19.106	.000		
인구구조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093	.089	1.404	.161	2.738	
	지역정책 영향요인	.167	.138	2.232	.026**	2.607	
	공간 영향요인	정주 시설	.093	.087	1.865	.063	1.464
		편의 시설	.316	.370	6.939	.000**	1.924
	사회적 영향요인	공동문화	.155	.126	2.519	.012**	1.704
		협동관계	.120	.110	2.281	.023**	1.579
인구구조 양태	자연적 요인	.022	.018	.289	.773	2.733	
	경제적 요인	-.069	-.055	-.885	.376	2.596	
	사회적 요인	.198	.166	3.494	.001**	1.523	
R ² =0.286, F=21.545, p=0.000							

주: * p < 0.1, ** p < 0.05, *** p < 0.01***

(3) 사회발전(인간관계) 영향요인 검정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인구구조 양태가 지역사회발전(인간관계)⁷⁾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 적합도 검토 결과 결정계수가 0.115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11.5% 설명하고 있다. 회귀식이 유의미한가를 측정하기 위한 분산분석 결과 F=6.980, p=0.000로 분석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 파악을 위한 VIF 분석에서 독립변수 모두 3이하로 나타나, 해당 회귀식 추정에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별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정책 영향요인은 t값이 1.990(p=.047), 공간 영향요인(편의시설)은 t값이 5.122(p=.000),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은 t값이 3.889(p=.000), 사회적 요인은 t값이 2.686(p=.0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 편의시설의 지역 내 공간배치(+), 협동관계 형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인식(+)⁷⁾이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교류, 협력,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이

7) 분석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인간관계)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사회발전(인간관계) 영향요인 분석결과

모형		B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3.478		16.702	.000		
인구구조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092	-.125	-1.765	.078	2.738	
	지역정책 영향요인	.117	.137	1.990	.047*	2.607	
	공간 영향요인	정주시설	-.007	-.009	-.166	.868	1.464
		편의시설	.183	.304	5.122	.000***	1.924
	사회적 영향요인	공통문화	.001	.001	.022	.982	1.704
		협동관계	.161	.209	3.889	.000***	1.579
인구구조 양태	자연적요인	-.082	-.096	-1.352	.177	2.733	
	경제적요인	-.005	-.006	-.086	.932	2.596	
	사회적요인	.120	.142	2.686	.007**	1.523	
R ² =0.115, F=6.980, p=0.000							

주: * p < 0.1, ** p < 0.05, *** p < 0.01***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박준식 외, 2009)는 일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준식 외(2009)의 연구는 지역 내 사회적 자본형성의 필요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 수준은 사회발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제조업 수준이 높을수록 교류, 협력,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업화가 가속화될수록 지역사회와 고립이 심화된다는 박준식 외(2009)의 견해와 일치한다.

제3절 정책 시사점 및 정책대안 모색

1. 정책 시사점

가. 전라남도 시·군 현황 분석 요약 및 해석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군 지역의 인구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분포(1세별)의 연령별 평균 인구수는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 19,000명에서 2020년 18,332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등은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고령인구 증가율은 2.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시 지역은 나주시(22.5%)이고, 광양시(13.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은 고흥군(41.1%)이 가장 높고, 무안군(20.4%)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2019년 기준 사업체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로 11,634개,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4,569개이다. 군 지역은 무안군으로 2,843개, 가장 적은 군은 구례군으로 794개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경우 나주시가 연평균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지역의 경우 무안군이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시 지역은 여수시(109,716명)이고, 나주시(41,944명)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영암군(28,624명)이 가장 많고, 신안군이 4,91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책적 측면에서 2020년 기준 예산규모가 가장 큰 시 지역은 여수시로 1조 3,594억원, 가장 적은 시는 나주시로 7,7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군 지역은 해남군으로 7,395억원, 가장 적은 군은 구례군으로 3,027억원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의 경우 광양시가 연평균 8.30%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천시 4.96%, 여수시 3.80% 순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경우 곡성군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광군 3.80%, 해남군 3.62%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완도군과 진도군은 각각 0.31%, 0.91% 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타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목포시의 경우 고령화인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합계출산율이 낮고 전출인구가 많아 점진적으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전남의 다른 시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광양시는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경제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은 순 이동(-)으로 인구감소 위험인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4-40> 2020년 지역별 인구분포 비교

(단위 : 명, %, 천명)

구분	연령별 평균인구 수(명)	고령인구 비율(%)	합계 출산율(%)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수 (천명)	전입인구 (명)	전출인구 (명)
목포시	2,218	16.9	0.801	115.5	111.1	35,366	40,621
여주시	2,775	19.5	1.067	149.0	147.0	38,167	40,171
순천시	2,794	15.8	1.041	143.1	140.5	42,742	40,029
나주시	1,145	22.5	1.109	63.9	62.9	18,111	16,879
광양시	1,503	13.3	1.232	80.4	78.0	17,189	22,419
담양군	458	31.2	1.332	25.6	25.5	5,596	5,543
곡성군	278	36.3	0.811	17.1	16.9	2,599	3,077
구례군	255	34.5	1.047	14.3	14.2	2,893	3,481
고흥군	633	41.1	1.459	40.7	40.6	5,627	5,827
보성군	401	38.5	1.057	23.9	23.8	3,562	4,003
화순군	619	26.9	1.091	33.4	32.7	6,441	6,267
장흥군	374	34.2	1.774	21.4	21.2	3,307	3,791
강진군	343	34.8	1.063	19.3	19.1	3,262	3,627
해남군	681	32.4	1.668	41.3	41.2	5,431	6,422
영암군	532	26.8	1.375	34.1	33.6	5,772	6,370
무안군	853	20.4	1.012	43.4	42.9	17,995	12,658
함평군	317	36.6	1.345	18.1	18.0	2,811	3,264
영광군	526	29.2	2.455	29.4	29.0	4,926	5,593
장성군	440	30.1	1.509	23.6	23.2	5,698	6,715
완도군	494	32.5	1.439	28.3	28.2	4,055	4,427
진도군	309	33.1	1.073	17.9	17.8	3,846	3,064
신안군	386	36.7	1.338	22.9	22.9	3,620	4,522

나. 통계·인식 기반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모형검정결과, 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 인구구조 양태 중 사회적 요인(-)이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식조사에 기초한 모형검정결과는 경제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1> 참조). 공통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영향요인과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이지만,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결과분석에서는 지역정책 영향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41> 참조).

예산규모는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예산활동 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이 큰 지역은 사회복지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경향성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인구의 증가가 지역경제(GRDP)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입인구의 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해 전입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표 4-41> 분석모형 검정결과 요약

모형		지역현황자료		인식조사			
		경제발전	사회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1	사회발전2	
인구구조 영향요인	경제 영향요인	***		**		(-)*	
	지역정책 영향요인	(-)**	*		**	*	
	공간 영향요인	정주시설	***		***	**	
		편의시설				**	***
	사회적 영향요인	공통문화				**	
협동관계					**	***	
인구구조 양태	자연적요인			***			
	경제적요인			*			
	사회적요인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모형검정결과는 지역정책 영향요인만이 지역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식조사에 기초한 모형검정결과는 자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1> 참조). 지역경제발전은 민간의 자생적인 발전에 의해서도 발전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나, 지역사회발전은 공공의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서비스 및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재정투입을 보다 면밀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인식조사에 근거한 정책 도출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표 4-42>와 같다. 우선, 전라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로 4.44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4.36점,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확대’ 4.11점,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3.97점, ‘농촌중심지(시·군청 소재지, 읍·면 소재지 등) 개발’ 3.94점,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3.94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상위 혹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제 감면 확대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원과 같은 환경 및 녹지시설 확충’ 3.4점,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지원책’ 3.47점, ‘국제결혼 지원 확대 및 외국인노동자 정책 확대’ 3.64점, ‘주택개량사업 지원’ 3.65점,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 3.66점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여 대조적이다. 즉 지역입장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관련하여 인구 5만 이상의 군 지역은 ‘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4.48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4.44점, ‘침체된 기성시가지에 대한 활성화 지원책 마련’ 4.13점,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확대’ 4.11점,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4.09점,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4.06점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의 경우 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

장 우선 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 지방세계 감면,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 활동 지원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인식조사에 근거한 경제·사회발전 위한 정책

구분	합계	지역유형별			성별	
		시 지역	군 지역		남성	여성
			5만 ↑	5만 ↓		
주택개량사업 지원	3.65	3.25	3.83	3.80	3.71	3.54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	3.66	3.49	3.78	3.71	3.79	3.43
보육원/어린이집/유치원 등 출산 및 육아시설 확충	3.88	3.77	3.95	3.90	3.92	3.78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3.97	3.91	4.06	3.95	3.99	3.92
공원과 같은 환경 및 녹지시설 확충	3.40	3.59	3.40	3.28	3.33	3.53
노인층을 배려하는 주택시설 확충	3.68	3.59	3.82	3.65	3.70	3.66
농촌중심지(시·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등) 개발	3.94	3.60	4.09	4.06	4.01	3.80
침체된 기성시가지에 대한 활성화 지원책 마련	3.93	3.66	4.13	3.99	3.96	3.89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지원책	3.47	3.56	3.52	3.38	3.49	3.4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 지역행사 확대	3.76	3.68	3.83	3.77	3.77	3.73
지역 초·중·고 지원정책 및 특목고 유치	3.71	3.65	3.76	3.71	3.76	3.60
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3.92	3.79	3.92	4.00	3.91	3.92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3.78	3.69	3.78	3.85	3.80	3.75
귀농·귀촌자 유치 및 촉진 지원 강화	3.87	3.68	4.00	3.92	3.83	3.95
국제결혼 지원 확대 및 외국인노동자 정책 확대	3.63	3.48	3.74	3.65	3.63	3.63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3.94	3.74	4.09	3.97	4.01	3.80
타 지역에서 유입 인구에 대한 이주비 지원 확대	3.90	3.76	4.00	3.93	3.89	3.91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계 감면 확대	4.11	4.13	4.11	4.10	4.19	3.9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4.36	4.30	4.44	4.36	4.43	4.24
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4.44	4.48	4.48	4.40	4.52	4.29

인구 5만이하의 군 지역은 ‘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4.40 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4.36점,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계 감면 확대’ 4.10점, ‘농촌중심지(시·군청 소재지, 읍·면 소재지 등) 개

발' 4.06점 순으로 희망하였다. 3순위 내 정책은 인구 5만 이상 군 지역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인구 5만이상의 군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을 보다 선호하였고, 반대로 인구 5만미만의 군 지역은 농촌중심지 개발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연구결과에 근거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분석결과,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종사자 수, 예산규모(-), 공공기관 수, 인구구조 중 전입인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가 필요하며, 또한 공공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연구결과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전입인구가 경제적 발전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분석결과의 시사점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예산규모는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예산활동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이 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경향성이 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전입인구의 증가가 지역경제(GRDP)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입인구의 구성이 경제활동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의해 전입하는 인구가 많은 것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공무원 인식조사에 기초한 분석결과,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정주시설), 인구구조 양태 중 자연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종사자수의 증가를 위한 투자유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방재정 지출(정주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분석결과 예산규모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인식조사에 기초한 분석결과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지역정책 영

향요인, 공간 영향요인(정주 시설, 편의 시설), 사회적 영향요인(공통문화, 협동관계), 인구구조 양태 중 사회적 요인이 사회발전(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구조 영향요인 중 경제 영향요인(-), 지역정책 영향요인, 공간 영향요인(편의 시설), 사회적 영향요인(협동관계), 인구구조 양태 중 사회적 요인이 사회발전(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향요인은 경제활동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경우 인간관계가 소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제와 복지지출이 주된 지출항목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방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지역사회발전이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한 지역은 주민 간 관계형성(사회적 자본 구축)에 좀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책대안 모색

가.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1) 중앙정부 지원체계 구축 및 대응 노력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적인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립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인구감소 대응책보다는 지역별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강인호, 2019: 67). 이러한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지역별로 표준화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의 군 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인구의 사회적 감소 비율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지역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문제는 결혼·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출산·보육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일자리나 주거 등 지역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로 지역전략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박진경 외, 2017: 222).

다행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지역 정주, 지역과의 주기적인 교류를 촉진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군 지역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응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인구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박진경 외(2017)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공간의 활용과 관련한 정책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정책은 인구감소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으로 전면 재편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를 계획·사업·재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소영 외(2017)는 지역주도의 발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부처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불필요한 분야의 경우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남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객관적인 인구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수립 및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인구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군 지역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강진군과 영광군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곡성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 역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영광군은 정책수립 시 인구관점 검토와 인구증가 도모를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군 지역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이고 종합적

인 인구정책을 구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일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중장기 발전계획과 달리 매순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인구의 유입 촉진과 유출 방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군 지역의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권 육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유지를 위해서는 인구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영광군 사례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수립을 위해 선행연구(이삼식 외, 2015; 김은경, 2016)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략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삼식 외(2015)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략,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김은경(2016: 11)은 생산가능인구 확대전략으로는 여성 및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하고 있으며, 고령층 인구의 삶의 질 제고전략으로는 노후 소득 증대, 노후 건강관리, 노후 사회참여 보장, 안전생활 보장 등과 관련한 정책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개발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제고 노력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을 제고할 때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 지역의 인구구조는 건실해질 수 있다. 지역의 취약한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을 발휘할 때 지역주민들의 맞춤형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로 전환·보완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을 발휘할 때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청년들을 주목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자원 등 지역의 DNA를 활용한 지역 내 향토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활용한 향토 산업 육성정책이야말로 젊은이들의 인구이동을

억제하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강인호, 2019)는 것이 선행연구의 주장이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야할 것이다. 소수의 중앙정부 관료가 머리를 맞대고 내놓는 지역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업 유치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재생시킨다는 전략은 옛날식 발상이다. 일본 역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정비하였지만 채산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은 비용이 낮은 중국으로 옮겨가 농촌지방정부가 쓴 노력과 세금은 물거품이 되었다”(후지요시 마사하루, 2016의 연구를 강인호 외, 2012: 105에서 재인용)는 사실을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나. 인구전략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1) 열악한 교육·공공시설 확충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쇠퇴하는 1차 산업 여건, 열악한 교육여건, 그리고 지역의 취약한 공공서비스 등으로 선행연구(강인호, 2019: 66)는 분석하고 있다. 강인호(2019)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1차 산업의 쇠퇴에 따른 전남지역 농촌 자치단체의 쇠퇴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경제 질서에 기인한 것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여건과 취약한 공공시설 확충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⁸⁾ 따라서 열악한 교육여건과 취약한 공공 시설확충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현재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국비지원 사업을 청소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강인호, 2019: 66).

8) “강원도 화천군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화천군은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교육 및 복지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군은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을 기울였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복지과를 신설하여 화천군 교육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생애단계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들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였다”(박진경·김상민, 2018의 연구를 강인호, 2019: 66에서 재인용).

전라남도의 군 지역은 공공기관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전략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편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변필성 외(2014)의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확보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종합계획과 같은 법정계획 수립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수립된 공공시설 공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읍·면·동 또는 그 이하 단위에서 공공시설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초현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 통합 행정·재원관리체계 구축

통합적인 행정과 재원관리를 위해 군에서 행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서비스는 전라남도과 공동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전라남도 통합출장소를 출범하여 통합관리체계를 완성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설정에 생활권역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최영출 외, 2010). 이와 관련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기도 1개, 강원도 2개, 충청북도 3개의 출장소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행정서비스 중복기능의 조정 및 관련조직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필두 외, 2016). 전라남도 군 지역에 통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서비스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지역 거점별 통합서비스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과소지역과 도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변화시키는 대안 검토도 필요하다(하혜수 외, 2010).

(3) 지역 인구구조변화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인구 관련 지역적 특성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지속성을 띄고 있어 꾸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및 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선행연구(강인호, 2019: 67)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정부의 시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지역발전정책과 연계가 미흡(박진경·김선기, 2017; 박진경·김상민, 2018)하여, 정책의 파급효과가 미약하다.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쇠퇴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지원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강인호, 2019: 67).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행정·재정적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 스스로 인구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박진경 외, 2017: 223-224).

(4) 집중형 균형발전체계 구축

군 지역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지향적인 지역발전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축소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합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스마트 수축(Smart Shrinkage)을 전제로 한 축소도시계획으로 도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군 지역들은 축소하고 있는 현실과 쇠퇴라는 단어의 혐오감을 극복하고, 지역의 앞날을 알차게 만들어가기 위해 스마트 수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재산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쇠퇴나 낙후라는 단어의 사용이 금기시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정책과 도시재생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전경구 등, 2016).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 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이 지역쇠퇴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지역쇠퇴의 문제를 스마트 축소에 근거해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강인호, 2019: 68-69에서 재인용).

특히,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현재의 공공시설의 분산배치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그 효과성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고령자의 이동성 감소로 인해 분산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佐佐木, 2015). 그렇기 때문에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분산형 공공시설 배치의 대안으로 집중형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경우 분산형

에서 집중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행정,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집중하거고, 고령자가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김순은, 2017:26-27).

다.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공동체의 활성화로 상부상조하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거주지 노화가 진행되면 공동체 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지역 공동체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조(共助)의 길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지역의 마을마다 생활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김순은, 2017:28-29).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자 편입으로 급속히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지방행정이 담당하는 행정서비스 역량은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역별, 소득별, 개인특성별 다양한 고령자 특성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행정은 관할 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맞춤형 고령자 서비스의 공급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등을 활용한 공급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김순은, 2017: 27-28). 최길수(2014) 역시 지역사회와 다양한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령자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책임 분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남의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제언에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2)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과를 좌우한다. 지방정부도 결혼과 출산장려 및 육아시책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자는 결혼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녀 만남의 공적 지원, 임신 및 출산의 지원, 불임부부의 지원, 산후 정기검진, 예방접종, 입양, 육아 및 취업 지원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농산어촌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김순은, 2017: 28-29에서 재인용).

(3) 지역정착을 위한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성장을 도모하려면 생산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그들이 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라남도는 역내 전략산업과 생산인력과의 수급불일치 완화를 위해 산업수요-교육-일자리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생산인구 중 상당수가 수도권 및 인근의 광역시로 떠남으로써 구인 구직 수급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전라남도 군 지역의 중심거점 도시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해 생산인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이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하지만, 그 이후 안정단계에 접어들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률은 정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여 역내 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생산인구의 지역성장 기여도에 대한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인구의 유출이 심화되는 지역에서는 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를 상쇄 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허문구 외, 2017: 30-32).

(4) 고령노동력의 활용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고령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령자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를 위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고령노동 활동에 대비하여 평생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고령 노동자 대상의 직업능력 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고령 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력전환과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기회를 부여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재준, 2015: 99-101).

마. 전라남도의 맞춤형 전략

(1) 고령층 일자리와 연계한 고령 친화적 농업기반 조성

전남의 군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차 산업의 쇠퇴를 꼽을 수 있다. 1차 산업의 쇠퇴로 인한 군 지역의 쇠퇴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경제 질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군(郡) 지역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자의 귀재 Jim Rogers는 농업분야를 향후 가장 잠재력이 뛰어난 산업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는 30년 이내 식량부족 사태가 도래할 것이며, 그로 인해 수익성이 가장 큰 산업분야가 농업이 될 것이고, 농부가 가장 전망의 직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김주원, 2019의 연구를 강인호, 2012: 104에서 재인용).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쇠퇴가 군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역으로 1차 산업이 군 지역의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처방책(momentum)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농촌지방정부는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일자리와 연계한 고령친화 농업 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강인호, 2021: 104).

(2) 은퇴인력 유입과 활용 제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으로의 인구유입보다는 주거환경(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의 요인이 우선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맞는 최적화 전략으로는 은퇴인력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인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라남도 지역의 인구구조 관련 구조적인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고령층의 빈곤 상승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지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사 중심으로 은퇴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료된다.

하여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은퇴인력이 편안하게 지역사회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진도군은 지속적으로 전입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은퇴인력이 선호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표 4-12> 참조).

(3)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정주 시설 조성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공간 영향요인 중 정주 시설은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젊은 인구 유출을 막고 타 지역으로부터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젊은 인구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주여건 조성은 전국 대비 생산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라남도에서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농촌에서 6차 산업 활성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농촌으로의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체계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김동환 외, 2016: 167)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갖춘 대도시지역으로 이주를 원한다. 따라서 부모 세대인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양질의 정주여건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이 심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5만 이하의 군 지역의 경우 유소년 대상의 양질의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젊은 인력 양성,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으로 현장실무형 젊은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지역산업 연계형 발전계획 수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인구와 유소년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경우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의 구비여부가 정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여가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관, 소극장,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amenity)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허문구 외, 2014: 89-90). 전남은 현재 나주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공공교육기관 학급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과 특성화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유입시키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해

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등은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표 4-17> 참조). 이들 지역들은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사업체 대상 세제지원 강화

지역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얼마나 입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소득성장률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지역 간 경제성장률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①고 성장산업의 지역 내 비중 및 특화 차이, ②지역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역내 기업의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총 요소 생산성 차이, ③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의 증설, 축소 등으로 인한 자본 장비율 차이 등이다(주현 외, 2009). 이러한 지역 간 성장률 격차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5%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순천시, 보성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신안군 등이다(<표 4-2> 참조). 이들 지역은 기업유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목포시, 구례군의 성장률이 저조해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관심사항은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낙후지역 입지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이 무엇인가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세제 및 입지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허문구 외, 2014: 90-91).

(4) 콤팩트형 공간구조 개편

“전남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도시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⁹⁾. 농촌 중심지역의 인구감소는 중심지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인 쇠퇴와 교통 편리성의 저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농촌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신규 개발과 원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외곽 이전 등은 중심지 공간구조를 변화시켜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집적화에 따른 효율적 공간이용과 토지의 집약적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중심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 북해도의 가미시

9) 전남인구는 1990년~2000년 연평균 0.75% 감소했는데, 도시면적은 연평균 1.82% 증가했다. 또한 2000년~2014년 인구는 연평균 0.01% 감소했으나, 도시면적은 연평균 2.19% 증가해 시가지 면적이 꾸준히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조상필·신동훈, 2016).

호町の 사례처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을 가능한 반경 400~800m 이내로 집적시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리 증진과 삶의 질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강인호, 2018: 241에서 재인용).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쇠퇴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 2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조의 지속가능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전라남도는 2008년 이후 연평균 0.3%의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안군을 제외한 군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18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알 수 있다. 전라남도는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 16개 군이 포함되었다.

인구구조 변화요인과 현재의 인구구조 양상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영향요인과 실제 그 지역의 인구구조 양태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역맞춤형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의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균형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GRDP)에 미치는 양(+)의 영향요인은 사업체 종사자 수, 음(-)의 영향요인은 예산규모와 전입인구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양(+)의 영향요인은 예산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예산규모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발전 영향요인으로 예산규모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의 기초 자치단체 총예산(활동) 중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비중이 큰 지역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전남의 기초 자치단체들은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투입에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경제(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내생적·내부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남 기초자치

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위 정부 혹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모형 검증결과 인구구조 변화요인은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공 시설의 지역 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자연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요인으로 제시된 지역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공공시설의 지역 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 공공시설의 지역 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교류, 협력,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인식조사에 기초한 경제·사회발전 위한 정책으로는 ①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②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③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확대, ④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⑤농촌 중심지(시·군청 소재지, 읍·면 소재지 등) 개발, ⑥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와 실증적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지역중심의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실태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근거로 이론모형 검증, 그리고 공무원 인식에 기초해 이론모형을 검증하고, 또한 이를 통해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역발전과 관련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지역발전(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인구구조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쇠퇴원인을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공간적 범위를 전라남도로 제한하다보니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의 영향요인들을 정교하게 도출한 필요가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하지 못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또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과 인식조사에 근거한 1차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두용(2009).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제성숙화 요인 : 인구학적 변화와 취업 구조변화의 성장둔화 효과,” 『국제경제연구』15(3). pp.93-132.
- 강미나·김진범(2013). “농촌지역 빈집정비 실태와 정책방향,” 국토정책 Brief 430 호. pp.95-115.
- 강인호(2018). “일본 축소도시의 콤팩트 시티 추진전략,” 한국정책학회보 27(2). pp.221-244.
- _____ (2019). “지방소도시의 도시축소 및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보 31(5). pp.45-72.
- _____ (2021). “지방소멸 원인 및 진단과제,” 2021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권역별 토론회집.
- 강인호·박성진(2020). “지방 소도시의 스마트 축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pp.279-300.
- 강인호·염대봉·장명본(2021). “비수도권 郡지역의 축소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5(2). pp.87-113.
- 강인호·이영철·염대봉(2015). “도시수축: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pp.25-50.
- 고우림·조영태·차영재·장대익(2020).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2). pp.129-153.
- 곽채기(201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영향분석과 국가의 역할 구조 및 재정 시스템의 변화방향,” Local Finance Magazine, 17. pp.98-127.
- 곽현근(2016).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발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 65(753). pp.32-35.
- 구형수·김태환·이승욱·민범식(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권규호(2015).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성장 전망: 일반균형론적 접근 (Korea’s Demographic Changes and a Long-Term Growth Projection: A

-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KDI Policy Study□26. pp.1-75.
- 권오규·마강래(2014). “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인구 유출입 분석,” 국토 계획 49(8). pp.5-19.
- 권일·김정연(2011).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과제, 도시정보.
- 기정훈(2011).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쇠퇴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김광중(2010).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pp.43-58.
- 김기호(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224호, 한국은행.
- 김기호·유경원(2008).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험금융연구,□35. pp.165-207.
- 김동구·박선영(2013).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소비구조 변화를 통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6(6). pp.2519-2546.
- 김동석(2006). “소비구조 장기전망: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8(2). pp.1-49.
- 김동환·안정근(2016). “농촌지역 인구구조 특성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 경상남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2(4). pp.159-169.
- 김상욱(2010). 인구 구조 변화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 국회입법조사처.
- 김수정(2019).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22(2). pp.143-158.
- 김숙경·구진경(2017). 인구구조 변화가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김순은(2016).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대응,”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정책 2016 한일 공동세미나.
- _____ (2017a).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지방행정연구 31(1).
- _____ (2017b).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대응책,” 지방행정 66(759). pp.26-29.
- 김용민(2013). “일본의 지역경제 성장구조 변화,” 아태연구 20(1). pp.3-34.
- 김용진·이철인(2013). “고령화에 의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장기적 메커니즘,”

- 한국경제의 분석□9(1). pp.1-69.
- 김은경(2016).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지형도를 바꾼다 ‘행복한 고령화 시대’ 위한 체계적 정책 필요인구와 경제,” January. pp.10-11.
- _____ (2016).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지방복지재정정책,” EU학 연구 21(2). pp.83-118.
- 김진범 등(2010).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 김태일(1994). “인구구조의 변화로 본 고령화 동향과 연령별 주택수요의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1). pp.37-45.
- 김태현·김동희·정구현(2006), “코호트 요인법을 이용한 시군구별 장래인구추계,” 통계연구 11(2), pp.1-40.
-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형만(20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 정책 방향,” 월간 공공정책 162.
- 김호범·곽소희(2007). “한국의 인구전환과정과 경제성장 : 연령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25(4). pp.125-144.
- 대한상공회의소(2007).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
- 모수원·이광배·박정환(2017). “전남 연안지역의 인구구조 분석 : 고흥군·장흥군·보성군을 대상으로,” 한국도서연구 29(4). pp.151-165.
- 박경철(2014).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촌사회 24(2). pp.7-59.
- 박문수·고대영·구진경·이경희(2013). 인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박병호·김준용(2009).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쇠퇴유형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3). pp.125-137.
- 박세훈 외(20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 박승규(2016).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발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 65(754). pp.28-31.
- _____ (2020). “산업별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자 인구이동의 지역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I 43(2). pp.231-261.

- 박준식·정동일·성경룡(2009). “지역 낙후성의 구조와 전환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사회적·창조적 자본이론의 관점,” 지역사회학 10(2), pp.31-62.
- 박진경·김상민(2017),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현호·김상민·임태경(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김상민(201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하일·박창귀(2017).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23(2). pp.47-87.
- 방하남(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변필성 외(2014).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 서준교(2014). “도시쇠퇴와 수축의 원인이 대응전략 연구 - 리버풀과 라이프치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pp.97-115.
- 성은영·임유경·심경미·윤주선(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연구, auri 연구보고서.
- 성주인·진영·박유진·정규형(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손연정(2019), “중고령층 노동이동과 자영업 소득,” 노동리뷰 9. pp.32-45.
- 신관호·황윤재(2005), “인구구조의 변화가 실질임금 및 총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11(2), 한국은행. p.1-35.
- 심재권(2008).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농촌과 도시지역의 산업구조변화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pp.125-146.
- 안병권·김기호·육승환(2017),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Growth),” □경제분석 23(4). pp.1-33.
- _____ (2017), 고령화와 경제성장-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 염돈민(2014). “고령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정책메모(103), 강원발전연구원.
- 오은열(2016). “지역인구 구조변화와 리질리언스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8(1). pp.47-70.
- 오정일·안기돈(2007).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일자리수 변화와 인구이동간 인과

- 성 검정,” 국토연구 53. pp.57-76.
- 유창근·송두석(2006). “농촌지역의 인구 이동과 적정인구 유지 방안,” 농어촌관
광연구, 13(2). pp.107-126.
- 윤상호(2019),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소멸론.
- 이정은·김순은(2014).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정부학
회 학술발표 논문집. pp.516-544.
- _____ (2015).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9(2). pp.297-325.
- 이백훈(1980). 한국 인구가동의 계량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병기(2017).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 이삼식 등(2015).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주(2016).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지역정보화 3월호. pp.50-53.
- 이상훈·황지욱(2013). “도시재생의 정책배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국토계획
48(6). pp.387-410.
- 이소영·오은주·이희연(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순호(2020).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한국과 일본의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간 선형·비선형 관계 분석,” 한일경상논집
88. pp.97-118.
- 이윤경(2019). 인구 정책 전망과 과제, 복건복지포럼.
- 이인희(2008). 우리나라 중소도시 쇠퇴실태와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 이재원(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지방행정연
구 31(1). pp.35-62.
- 이재준(2015).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경제포럼 8(4).
pp.83-102.
- 이정록(2017). “지방중심도시의 인구가동과 공간구조 변화: 전남 순천시를 사례
로,” 대한지리학회지 52(5). pp.579-594.
- _____ (2020). “인구과소지역의 인구가동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전남 고
흥군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pp.172-184.

- 이종근(2014). 한계고령화의 동태적 요인과 공간적 영향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하·이병주(2019).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2(1). pp.3-36.
- 이종하·황진영(2018).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8(3). pp.555-579.
- 이지만(2016).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패턴 변화와 지역특성과의 관계 분석,” 논총계획 22(4). pp.139-146.
- 이한방(2001). “과소농촌지역의 휴경요인과 유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pp.74-90.
- 이현창·승정현·박이택·김형중·이경록(201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 이현훈·이영련·허현승(2008).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4(2). pp.27-50.
- 이희찬(2007). “농촌인구 전망과 과소화구분에 따른 농촌사회의 적정인구,” 농어촌관광연구 14(1). pp.159-181.
- 이희연(2013). “인구감소시대가 오고 있다: 지역별 인구 전망과 주요 쟁점,” 국토연구 378. pp.6-15.
- 임상연·변필성(2014). “일본의 고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 작은 거점 만들기 와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492. pp.1-6.
- 임석희(2016). “대도시 도심부의 인구변동과 쇠퇴 양상의 변화 - 도심쇠퇴의 이완과 도심회귀 증후의 검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pp.599-614.
- _____(2016).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52(1). pp.65-84.
- 임종현·이주형(2008). “출산율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3(5). pp.63-78.
- 입법조사처(2010). 인구 구조 변화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
- 장인수(2020).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pp.63-72.
- 장희순·송상열(2006).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

50. pp.39-57.
- 전성애·형남원(2012).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의 예측,”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7(3). pp.191-208.
- 정경희·이재훈·김병량(2014). “일본 ‘한계취락(限界聚落)’의 인구감소 대책방안
사례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 pp.35-43.
- 정원기·안영진(2016). “우리나라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
역지리학회지 22(3). pp.515-528.
- 정의철·조성진(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0(3). pp.37-46.
- 정준호(2021). “글로벌 가치 사슬과 한국의 지역 간 격차 : 2010년대 이후를 중심
으로,” 경제와사회(131). pp.88-125.
- 제현정(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대응정책 사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1). pp.131-147.
- 제현정·이희연(2017).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분석,” 한국도시지리
학회지 20(1). pp.27-43.
- 조영재(2014).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충남리포트 101.
- 조윤성(2009).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유형별 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조윤숙·이종필(2017). “시도별 인구구조 변화 고찰을 위한 인구동태모형 개발,”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8(4). pp.5-45.
- 조주현(2011).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부동산연구 21(2).
pp.5-26.
- 조준범(2009).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過疎化)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 장흥
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pp.163-182.
- 조진희 등(2010).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 국토지리학회지 44(1).
pp.35-50.
- 조진희 등(2015). “충청권 농촌지역 쇠퇴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
회논문집 35(1). pp.203-215.
- 조하현·임성훈·임형우(2019).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VARX 모형을 이용한 한국(1987~2017) 사례 분석,” 한국경제연구 37(4).
pp.113-142.

- 조현승·고대영·이동희·황원식(2015),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비구조 변화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산업연구원.
- 채성주·배민기·백기영(2014). “지역 낙후도 유형에 따른 인구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 충북 시·군을 사례로,” 국토연구 81. pp.91-103.
- 최경수·문형표·신인석·한지희(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과제(I), 연구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최경식(2002).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 : 한국의 ‘고령화사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 27. pp.48-61.
- 최길수(2014). “인구구조의 변화와 도시거버넌스의 구축,” 대전발전포럼 48. pp.39-57.
- 최남희(2016). “읍·면지역 한계고령화의 인과순환적 구조분석과 인구소멸 임계점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7(1). pp.107-134.
- 최남희·이종근·김근세·이명석(2014). “우리나라 군지역의 고령화 위기와 동태성의 인과 순환적 구조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5(1). pp.75-96.
- 최슬기(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 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6. pp.14-40.
- 최영출·금창호·하능식·하혜수·홍준현·이동필·배정환(2010). 성장촉진지역의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안, 행정안전부.
- 최은영(2004). “지역 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5(3). pp.49-66.
- 최은영·구동희·조순기(2010).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1),”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pp.123-136.
- 최진호(2011).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서비스 변화,” 국토 353. pp.30-39.
- 최창용(2017), “고령화정책 거버넌스 평가-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 충북개발연구원(2010).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2015 인구총조사 기준). 통계청.
- 하봉찬(2016), “서비스산업으로의 노동이동과 경제성장,” 산업경제연구 29(1). pp.151-167.
- 하상근(2005).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기초

-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9(3). pp.309-332.
- 하혜수·최영출·홍준현(2010). “준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pp.237-256.
- 한국고용정보원(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 한주성(1992). “한국에 있어서 시·도간 인구이동의 시·공간 분석,”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
- _____ (2018). “과소지역의 한계취락 출현과 지역재생: 경상북도 의성군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3(3). pp.327-346.
- 허문구(2006). “지역성장과 지역변동경로 분석,” 지역경제 2(2), 산업연구원.
- 허문구·Dai Erbiao·김동수·박형진(201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패턴 분석, 산업연구원.
- 허문구·김낙현(2017). “고령화시대의 생산인구 변화와 지역성장 변동경로,” 지역개발연구 49(2). p.1-34.
- 허문구·이상림·정윤선·김은정·이소영·박형진(2014). 지역의 인구경쟁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인구구조 고령화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허문구·이상호·김낙현(2016). 경남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경남본부.
- 허문구·이상호·최윤기·김동수·Dai Erbiao(2013).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3-667, 산업연구원.
- 홍기석(2003). 인구구조 고령화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 황지욱·김귀진(2013). “농촌도시 김제의 인구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45(2). pp.65-80.
- 황진영(2007). “표본선택에 따른 재정지출 구성의 세대 간 경쟁,” 경제연구 25(1).

2. 외국문헌

- Adelman, I.(1963). “An Econometric Analysis of Population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3). pp.314-339.
- Aksoy, Yunus, Henrique S. Basso, Ron P. Smith, and Tobias Grasl(2019). “Demographic Structure and Macroeconomic Trends,” *American*

-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11(1). pp.193-222.
- Batini, N., T. Callen and W. J. McKibbin(2006). “The Global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IMF Working Paper* No. 06/9, 2006. pp.1-31.
- Becker, G.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ry, B. J. L.(ed.)(1976). *Urbanization and Counter-Urbanization*, London: Sage.
- Bloom, D. and J. E. Finlay(2009).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Asia,”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4(1). pp.45-64.
- Bloom, D. and J. G. Williamson(1997).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NBER Working Paper*, No.6268. pp.419-455.
- Bloom, D., D. Canning, G., Fink and J. Finlay(2009). “Fertilit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emographic Dividend,” *Journal of Economic Growth*, 14. pp.79-101.
- Borgerhoff Mulder, M. Heer, D. M.(1966).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3(2). pp.423-444.
- Borgerhoff Mulder, M.(1998). “The demographic transition: Are we any closer to an evolutionary explanation?”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Amsterdam), 13(7). pp.266-270.
- Borgy, V., X. Chojnicki, G. L. Garrec, and C. Schwellnus(2011).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global endogenous migra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Banque de France*, No. 333. pp.13-39.
- Cheshire, P., M. Nathan and H. O. Overman(2013). *Urban Economics and Urban Policy*. Cheltenham: Edward Elgar.
- Congleton, R. D. and W. Shughart(1990). “The Growth of Social Security: Electoral Push or Political Pull,” *Economic Inquiry*, Vol. 28. pp.109-132.
- Croix, D., T. Lindh, and B. Malmberg(2009). “Demographic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Sweden: 1750-2050,” *Journal of Macroeconomics*, 31(1). pp.132-148.
- DeLong, B.(2016). “Regional policy and distributional policy in a world where

people want to ignore the value and contribution of knowledge and network-based returns,” <https://braddelong.substack.com/p/hoisted-from-the-archives-regional>.

- Diamond, R.(2016). “The determinant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US workers’ diverging location choices by skill, 1980~2000,” *American Economic Review*, 106(3). pp.479-524.
- Duranton, G. and D. Puga(2004). “The Economics of Urban Dens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3). pp.3-26.
- Easterlin, R. A.(1976). “Population Change and Farm Settlement in the Northern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36(1). pp.45-75.
- Ferris, J. S. and E. G. West(1996). “Testing Theories of Real Government Size: U.S. Experience, 1959-89,”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62. pp.537-553.
- Galor, O. and D. N. Weil(1996). “The Gender Gap, Ferti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6. pp.374-387.
- Gayer, H and Kontuly, T.(1993).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concept of differential urbanization,”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7(2). pp.157-177.
- Glaeser, E. L.(2008). *Cities, Agglomeration, and Spatial Equilibriu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laeser, E. L. and D. C. Maré(2001). “Cities and skill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 pp.316-342.
- Golgher, A. B., L. D. Figueiredo, and R. Santolin(2011).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Brazil: empirical applications based on the Solow-Swan model,” *The Developing Economies*, 49(2). pp.148-170.
- Gyourko, J., C. Mayer and T. Sinai(2013). “Superstar citie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4). pp.167-99.
- Harvey, D.(1981). The urban proces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 Dear, D. and Scott, A. J.(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Methuen, London and New York.

- Harvey, D.(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 Hsieh, C. and E. Moretti(2019). “Housing Constraints and Spatial Misalloca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11(2). pp.1-39.
- Isserman, A. M.(1986). *Population Change and the Economy: Social Science Theories and Model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oston.
- Jakab, Z. and I. Kónya(2009). “An open economy DSGE model with search-and-matching frictions: the case of polariz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8(2).
- Kaplan, G. and S. Schulhofer-Wohl(2017). “Understanding the long-term decline in interstate migr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8(1).
- Kaplan, H.(1996). “A theory of fertility and parental investment in traditional and modern human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01(S23). pp.91-135.
- Kim, Soyoung, and Jong-Wha Lee(2007). “Demographic Changes, Saving, and Current Account in East Asia,” *Asian Economic Papers*, 6(2). pp.22 - 53.
- Lee, J. H., E. Lim and J. Hwang(2012). “Panel SVAR Model of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n and EU Countries,” *Social Science Journal*, 49. pp.386-389.
- Liao, P.(2011). “Does Demographic Change Matter for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55(5). pp.659-677.
- Lima, M. F. and Eischeid, M.(2017). “Shrinking cities: rethinking landscape in depopulating urban contexts,” *Landscape Research*, 42(7). pp.691-698.
- Liu, Y. and N. Westelius(2016). The Impact of Demographics on Productivity and Inflation in Japan, *IMF Working Paper* No. 16/237, 2016.
- Lutz, Wolfgang, Testa, Maria Rita, & Penn, Dustin J.(2007). “Population Density is a Key Factor in Declining Human Fertility,” *Population and Environment*, 28(2). pp.69-81.
- Mahdavi, S.(1990). “A Simultaneous-Equations Model of Cross-National Differentials in Fertility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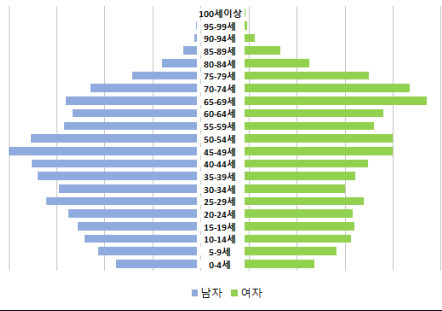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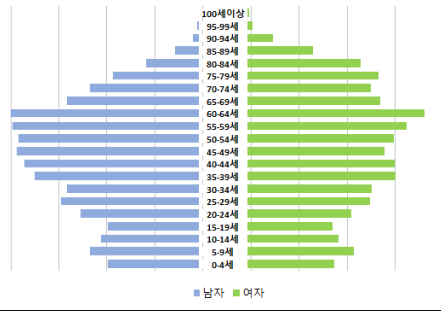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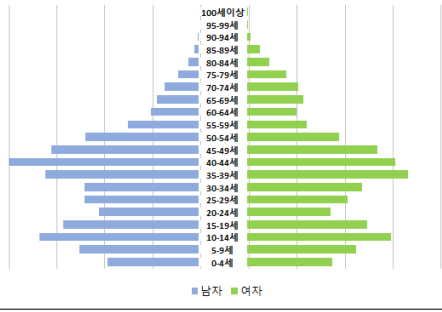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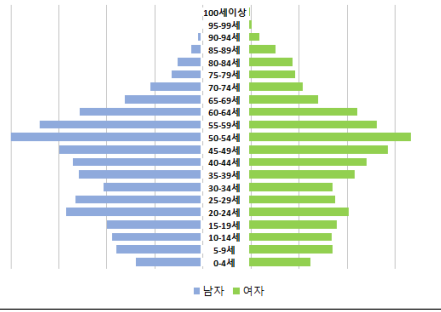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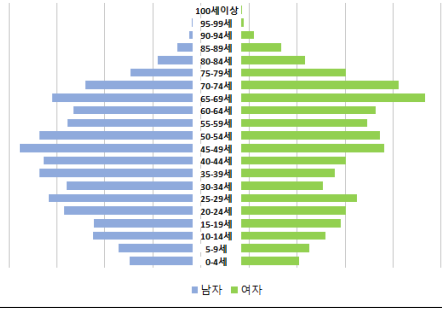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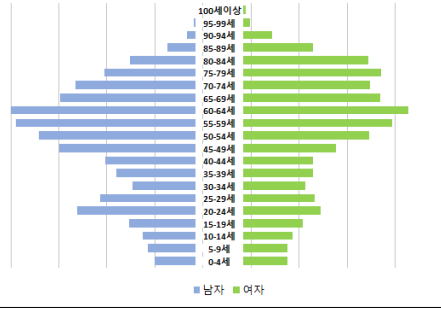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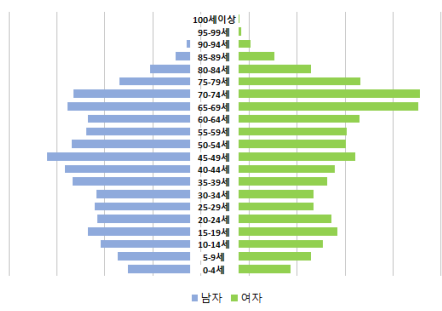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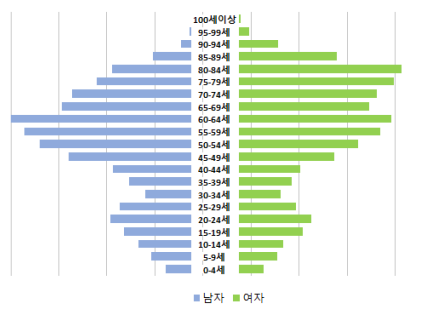
- Maria, C. D. and P. Stryszowski(2009). "Migration, human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0. pp.306-313.
- Mayda, A. M.(2007). "International migration: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bilateral flows," *Center for Research and Analysis of Migration, Working paper series*. CDP No 07/07. pp.1249-1274.
- Merrick, T. W.(1978). "Fertility and Land Availability in Rural Brazil," *Demography*, 15(3). pp.321 - 336.
- Notestein, Frank W.(1945). Population-The Long View. In: Schultz, Theodore W. (ed.): *Food for the World*.
- Pallagst, K.(2010). "The planning research agenda: shrinking cities - a challenge for planning cultures," *Town Planning Review*, 81(5). pp.1-6.
- Poterba, J. M.(1997).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Educati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6. pp.48-66.
- Rieniets, T.(2009). "Shrinking cities: causes and effects of urban population losses in the Twentieth Century," *Nature and Culture*, 4(3). pp.231-254.
- Rink, D.(2009). "Wilderness: the nature of urban shrinkage? the debate on urban restructuring and restoration in Eastern Germany," *Nature and Culture*, 4(3). pp.275-292.
- Rodríguez-Pose, A.(2018). "The Revenge of the places that don't matter (and what to do about it),"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1(1). pp.189-209.
- Roy, N. and A. Debnath(2011). "Impact of migr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A study of some selected state,"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and Humanity, IPEDR*, 5. pp.198-202.
- Sng, Oliver, Neuberg, Steven L, Varnum, Michael E W, & Kenrick, Douglas T.(2017). "The crowded life is a slow life: Population density and life history strate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5). pp.736-754.

- Soto, R. and A. Torche(2004). "Spatial inequality,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le," *Cuadernos De Economía*, 41. pp.401-424.
- Storper, M.(2018). "Separate worlds? Explaining the current wave of regional economic,"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8(2). pp.247-270.
- Thompson, W. S.(1929). "Popul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4(6). p.503.
- Tyers, R. and Shi, Q.(2007). "Demographic Change and Policy Response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The World Economy*, 30(4). pp.537-566.
- van den Berg, L., Drewett, R., Klaasen, L. H. and C. H. T. Vijverberg(1982). *Urban Europe: A Study of Growth and Decline*, Oxford: Pergamon.
- Wiechmann, T. and Pallagst, K. M.(2012). "Urban shrinkage in Germany and the USA: A Comparison of Transformation Patterns and Local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2). pp.261-280
- 佐佐木信夫(2015). 人口減少時代の地域倉生論, 東京: PHP研究所.

<부록 1> 전라남도 시군 5세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2008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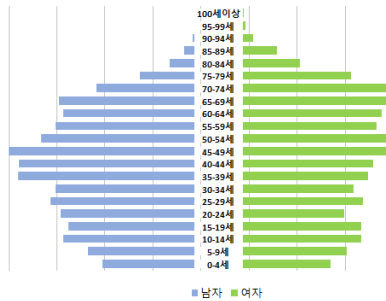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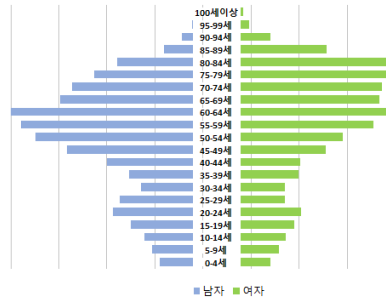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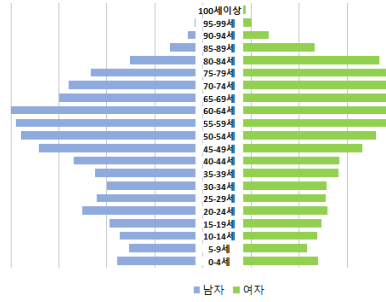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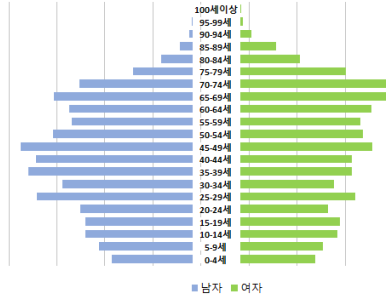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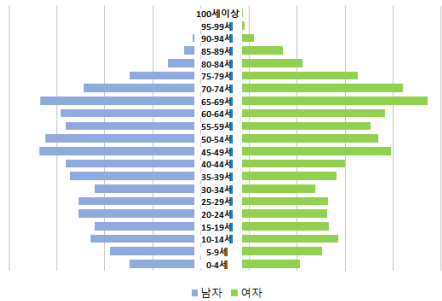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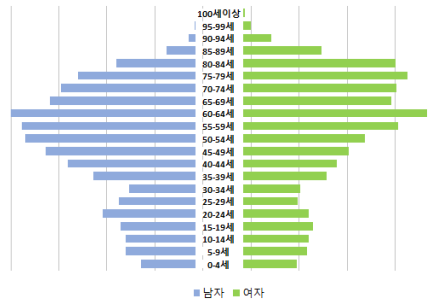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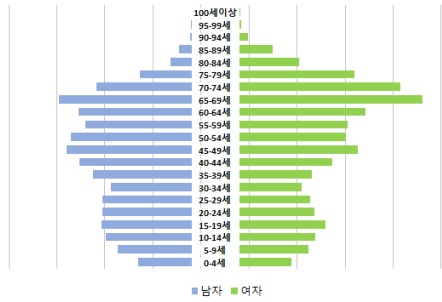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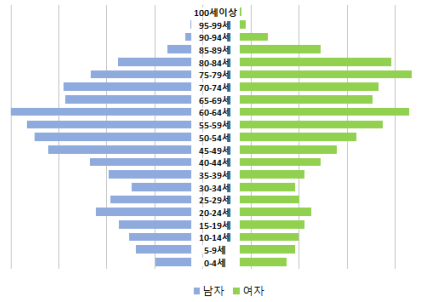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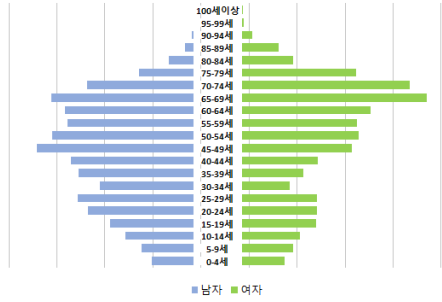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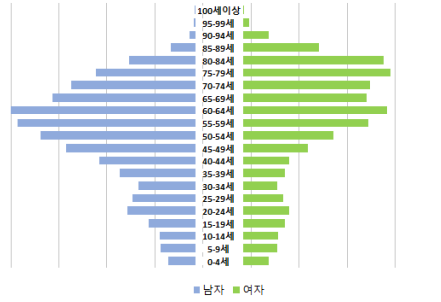
지역	2008년	2020년
전라남도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1,919,000	1,851,549
목포시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245,651	224,044
여수시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295,133	280,242
순천시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p>100세이상 95-99세 90-94세 85-89세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p> <p>■ 남자 ■ 여자</p>
	269,429	282,189

지역	2008년	2020년
나주시		
	92,884	115,613
광양시		
	141,388	151,769
담양군		
	48,347	46,280
곡성군		
	32,608	28,039

지역	2008년	2020년
구례군	<p>27,703</p>	<p>25,719</p>
	<p>76,605</p>	<p>63,922</p>
보성군	<p>50,004</p>	<p>40,482</p>
	<p>70,327</p>	<p>62,522</p>

지역	2008년	2020년
장흥군	<p>42,783</p>	<p>37,800</p>
	<p>41,153</p>	<p>34,597</p>
해남군	<p>81,043</p>	<p>68,806</p>
	<p>60,106</p>	<p>53,699</p>

지역	2008년	2020년
무안군		
	66,598	86,132
함평군		
	37,432	32,050
영광군		
	58,075	53,099
장성군		
	46,602	44,464

지역	2008년	2020년
완도군	 <p>54,999</p>	 <p>49,916</p>
	 <p>34,412</p>	 <p>31,227</p>
신안군	 <p>45,718</p>	 <p>38,938</p>

<부록 2> 설문조사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 및 사회적 여건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본 조사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지역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시군별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술적인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며, 기타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정성 어린 응답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1. 6.

이철(조선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과 박사과정)

연락처: 010-9666-0404

I.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시·군)의 인구·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은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이 부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지역은 산업구조가 낙후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지역은 지역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지역은 경제활동을 위한 지역보유자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취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우리지역은 공공정책 추진 여력이 미약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지역은 심한 규제로 발전여력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지역은 중앙정부/전라남도 등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지역은 근린·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지역은 공원·조경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지역은 청소·쓰레기처리가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지역은 금융기관 이용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지역은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지역은 주민편의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지역은 공통의 기억을 가진 이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지역은 공통의 습관을 가진 이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지역은 공통의 전통을 가진 이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지역은 공통의 문화를 가진 이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지역은 이웃간 협력(협동)이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지역은 이웃간 단합(단결)이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II.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시·군)의 인구구조의 특성에 대해서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지역은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지역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지역은 유소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우리지역은 떠나려는 인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지역은 이주해오려는 인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Ⅲ.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시·군)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수준에 대해서 평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은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지역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지역은 상업시설 폐점 수가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지역은 소득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지역은 공교육 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지역은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지역은 문화서비스 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지역은 사람들 간 교류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지역은 사람들 간 협력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지역은 삶의 질 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Ⅳ.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시·군)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주택개발사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출산 및 육아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5. 공원과 같은 환경 및 녹지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6. 노인층을 배려하는 주택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7. 농촌중심지(시·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등) 개발	①	②	③	④	⑤
8. 침체된 기성시가지에 대한 활성화 지원책 마련	①	②	③	④	⑤
9.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지원책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 지역행사 확대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 초·중·고 지원정책 및 특목고 유치	①	②	③	④	⑤
12. 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①	②	③	④	⑤
13.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⑤
14. 귀농·귀촌자 유치 및 촉진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15. 국제결혼 지원 확대 및 외국인노동자 정책 확대	①	②	③	④	⑤
16.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①	②	③	④	⑤
17. 타 지역에서 유입 인구에 대한 이주비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18.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확대	①	②	③	④	⑤
19.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①	②	③	④	⑤
20. 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V. 개인특성에 관한 질문

1.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인구구조와 경제 중 어떠한 요인이 선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인구구조 변화가 경제를 변화시켰다. ②경제 변화가 인구구조를 변화시켰다.

2.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3. 귀하의 연령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고졸 ②대졸 ③석사 ④박사

5. 귀하의 근무기간은?

- ①1년미만 ②1년이상~5년미만 ③5년이상~10년미만
④10년이상~20년미만 ⑤20년이상

6. 귀하의 직급은?(_____급)

7. 귀하의 근무지역은? (_____시·군)

★ 바쁘신 중에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요 약 문

본 연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역량을 집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목표인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배경에서 제시한 인구사회적, 경제적, 지역정책적, 공간적 요인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실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출산,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인구유입 및 유출 등의 인구구조 양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 요인 중 유의한 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지역맞춤형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1차자료(공무원 인식조사)와 2차자료(통계DB)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인 전라남도의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공무원의 인식에 기반한 설문분석으로 이원화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중 GRDP의 경우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12년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무원 인식에 기반한 설문분석은 22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의 인식을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연평균 0.3% 수준의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무안군을 제외한 군지역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둘째, 통계청,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GR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 영향요인으로는 사업체 종사자수, 음(-)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와 전입인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검정한 결과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지역의 경제에 대한 인식, 공공시설의 지역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자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인식조사에 기반한 경제/사회발전 위한 정책으로는 ①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②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③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확대, ④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⑤농촌중심지(시·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등) 개발, ⑥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특화전략을 지역현황분석에서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맞춤형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특화전략을 구상하였다. 은퇴인력 유입과 활용 제고,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사업체 대상 세제지원 강화, 축소도시지향형 도시개발로의 공간구조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후속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 실태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이론모형 검정, 그리고 공무원 인식에 기반한 이론모형 검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관련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론모형의 발전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